

군사평론가 협회 · 베트남전 진실위원회 공동 토론회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 재조명”

- 일 시 : 2000년 12월 15일(금) 오후 1시
-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 대회의실

군사평론가 협회 · 베트남전 진실위원회

군사평론가 협회 · 베트남전 진실위원회 공동 토론회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 재조명”

- 일 시 : 2000년 12월 15일(금) 오후 1시
-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 대회의실

군사평론가 협회 · 베트남전 진실위원회

인 사 말

새 천년 새 세기를 맞이하며 다사다난했던 2000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지난 세기를 반성하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다각적인 과거청산 작업과 미래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분주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때에 최근 언론과 사회여론을 통해 베트남전쟁을 통한 한국과 베트남과의 역사 청산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군사평론가협회와 베트남전진실위원회가 공동주최로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 재조명”란 주제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과의 불행했던 과거를 되돌아보며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의 올바른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실성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 지금까지 침묵 속에 묻혀 있던 베트남전쟁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열어가기 위한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상처로 인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양국의 전쟁피해자와 고엽제피해자들의 아픔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더 나아가 한국과 베트남의 화해와 평화의 세기를 맞이하려는 시민사회의 노력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사평론가협회

회장 박 경 석

베트남전진실위원회

공동대표 이해동·강정구

토론회 진행 계획

(2000. 12. 15.(금) 오후 1:00 ~ 4:30)

13:00 ~ 13:05 개회사 : 이해동 베트남전진실위원회공동대표

13:05 ~ 13:15 공동주최자 인사말씀

13:15 ~ 13:40 제 1주제발표

지만원 「베트남전 참전의 의의와 성과」

13:40 ~ 14:05 제 2주제발표

이선호 「베트남전쟁의 특수성과 대민피해의 진상」

14:05 ~ 14:30 제 3주제발표

강정구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과 민간인 참상」

14:30 ~ 14:55 제 4주제발표

한홍구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 - 빛과 그림자」

14:55 ~ 15:10 휴식

15:10 ~ 16:00 지정토론

제1주제 토론 : 임 종 인

제2주제 토론 : 고 경 태

제3주제 토론 : 여 영 무

제4주제 토론 : 한 광 덕

16:00 ~ 16:20 종합토론

16:20 ~ 16:30 폐회사 : 채명신 전 주월한국군사령관

목 차

인 사 말

토론회 진행계획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사회자 소개

베트남전 참전의 의의와 성과 <지 만 원> · 1

베트남전쟁의 특수성과 대민피해의 진상 · <이 선 호> · 15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과 민간인 참상 . . . <강 정 구> · 43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 - 빛과 그림자 . . <한 흥 구> · 60

제 1 주제 : 베트남전 참전의 의의와 성과

<발표자> 지 만 원 (池萬元)

- 1966 육사 22기 졸업
- 1974~75 경영학 석사(MBA) (U.S.NPS)
- 1977~80 시스템 공학박사 (Operations Research) (U.S.NPS)
- 1981~87 국방연구원 책임 연구위원
- 1987. 2 육군대령 예편
- 1987~89 U.S.NPS 부교수
- 현 재 사회발전시스템 연구소장
칼럼니스트
군사평론가

<토론자> 임 종 인 (林種仁)

- 1978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80 군법무관 입대
- 1982 고려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수료
- 1990 군전역(육군중령)
- 1991 변호사개업
- 현 재 법무법인 안산종합법률사무소
신용보증기금 고문변호사
서울청소년지도 육성회 고문
우리말 살리는 거래모임 자문위원

베트남전 참전의 의의와 성과 및 교훈

지 만 원
시스템연구소장

- I. 서 문
 - II. 파병의 당위성
 - III. 베트남전 참전 성과
 - 1. 경제성장 실적
 - 2. 월남 특수가 중동 특수를 유발시켰다
 - IV. 군 현대화의 원동력
 - V. 한국군의 월남전 참전에 대한 평가
 - 1. 용병론에 대하여
 - 2. 베트남 양민 학살론에 대하여
 - VI. 숨겨진 의도에 관심을 갖자
 - VII. 한홍구 교수에게 묻는다
- 참고문헌

I. 서 문

한국군이 월남에서 철수한지 벌써 28년이 지났다. 베트남은 1975년 4월 30일 월남이 완전 패망함으로써 22년간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고 공산 치하의 통일국가가 됐다. 그 상처는 미군전사 56,000명, 부상자 200,000명. 월남군 전사 200,000명, 부상 500,000명, 월맹군 전사 900,000명, 부상 150,000명. 민간인 사망 1,500,000명, 부상 3,000,000명. 한국군 전사 4,960명, 부상 10,962명, 한국군 고엽제 호소자 66,000명으로 집약된다.(1)

한국군의 월남 참전은 비록 장병들의 엄청난 희생을 치르긴 했지만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유일무이한 에너지였다. 세계가 부러워했던 한강의 기적과 국군현대화는 월남 참전이 없었다면 상상할 수도 없었다. 당시까지 한국은 남에게 기대어 살고 남으로부터 수난을 받아오던 피압박민족이었다. “조센진은 할 수 없어”라는 자조적인 분위기가 팽배했고, 무기력과 자학이 온 사회를 지배했다.

월남 참전은 부끄럽던 역사로부터 원정군 자격으로 발돋움 하는 순간이었다. 민족의 지위를 “피압박민족”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원정력을 갖춘 나라”로 변신케 했다. 무기력과 자학에서 벗어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정신적 혁명을 이룩해 냄으로써 세계가 부러워하는 근면한 나라, 기적을 이룩한 나라로 변신하도록 만들었다. 월남 파병은 한국 역사상 최대의 공신이었으며, 파월 장병들이야 말로 민족사 최고의 역군으로 칭송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파월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이 있을 수 없었다.

반면 오늘의 한국은 한강기적의 유산을 먹고사는 한심한 존재로 몰락하고 있다. 지금은 리더십 상실의 시대다. 다시 1960대의 자조와 자학의 세계로 전락하고 있다. 기적의 리더십과 몰락의 리더십조차 구별하지 못한 채, 몰락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기적의 리더십을 폄하하려는 행위들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

최근 한겨레 21의 여성 특과원 구수정씨, 한겨레 21, 강정구 교수, 한홍구 교수 등 일부 세력이 베트남 양민 학살론을 끈질기게 제기함으로써, 박정희 전대통령과 그의 업적을 격하시키고, 32만 파월 장병 및 500만 파월 가족의 명예는 물론 한국군 전체의 위상과 명예를 비하시키려 하고 있다.

다른 정권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면 하나의 잡음으로 치부하고 무시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의 DJ 정부에서는 다르다. 제주도 4.3 사태를 다루는 색깔에서 보듯이 옛날의 반역세력에 정통성을 부각시키는 반면 당

시의 관군을 반역 시 했고, 민주화 투쟁자들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면서 수억 원씩의 보상을 제공하는 반면, 6.25 참전자와 월남전 참전자들을 이단시 하거나 거지 취급을 하며, 북한 동조자 또는 잠재적 내통자들이 머리를 들고 설치는 반면, 나라를 걱정하는 안보세력들이 주눅들어 있는 각급의 현실에서, 파월한국군과 주한 미군을 범죄 집단으로 격하시키려는 운동은 단순한 관점의 차이로 치부할 수 없는 위험한 의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월남 주민에게 한국군 타이한은 친절과 구원의 따뜻한 손으로 기억되고 있다. 28년이 지난 이 시기에, 베트남 사람들도 들추려 하지 않는 주제, 국익에 역행하는 주제를 왜 하필 이들 소수 세력이 제기하고 나서는가?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라면 수많은 미해결의 문제들 중에서 왜 하필 파월장병이어야 하며, 파월장병이 대상이라면 왜 하필 이 시기이어야 하는가?

파월 장병들의 도덕성을 문제삼고 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은 얼마나 도덕적이며, 역사를 바로 잡을 만큼 공정하고 진지하며, 정확하고, 예의 바른가? 필자는 한겨레 21의 어느 젊은 기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언어 폭력을 받았고, 이들 중 어느 교수는 사석에서 논리를 감정으로 대할 만큼 비이성적이었던 사실을 기억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의 당위성과 의의, 성과에 대해 고찰하고, 일부 진보세력들이 제기하는 양민학살론과 용병론의 허실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숨겨진 의도와 동기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II. 파병의 당위성

1954년 7월 29일 제네바에서 월맹과 프랑스간에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베트남에서는 호지명이 조직한 게릴라 즉 베트콩과 월남군간에 비정규전이 점점 더 확산돼 가고 있었다. 당시 소련과 중공은 공산주의 팽창 정책에 따라 호지명을 적극 지원하고 있었다. 당시 소련과 중공은 베트남, 한반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공격적인 팽창정책을 벌였다. 특히 북한은 남한보다 우세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노골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당시 북한의 GNP는 남한 GNP의 1.7배였다. 1961년 7월 중공과 북한간에 혈맹적 동맹조약이 체결됐다. 소련, 중공, 북한이 이루는 북방 삼각세력의 팽창 정책이 공조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1962년 12월에는 소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했다.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 장비의 현대화였다.

1965년 4월 김일성은 인도네시아 방문 연설에서 3대 혁명론을 발표했다. 북반부의 혁명기지강화,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 국제해방역량 강화였다. 대남 적화통일에 대한 위협을 노골화 한 것이다. 이어서 1964년 초 중공이 핵실험에 성공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한의 입지는 점점 더 약화되어 갔다. 미국에서는 월남전의 확전으로 인해 준비가 많이 들고 군사력이 부족해, 남한에 공여 하던 원조를 삭감하는 한편 주한미군을 월남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정서가 확산됐다. 북한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발을 빼려하고, 굶주림은 더해가고, 탈출구는 없고, 그야말로 한국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1960년대에는 미·소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중공은 인도네시아 공산당과 월맹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팽창 정책을 노골화 했다. 인도네시아가 공산화되고 월남마저 공산화되면 그 다음 차례는 공산화 도미노에 따라 한국이라는 어두운 정서가 팽배했다. 월남전은 한국 제2의 전선이었다.

안보만 불안한 것이 아니었다. 경제적으로도 이에 못지 않게 암담했다. 1960년 12월호 "한은 조사월보"에 따르면 1945년에서 1959년까지의 15년간,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조액은 26.9억 달러였다. 연평균 1.8억 달러였다. 이중 78%는 소비재 원조였고, 22%만 생산재 원조였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잉여농산물, 유연탄, 석유 등을 시장에 팔아 그 돈으로 세출예산을 세웠다. 미국의 잉여농산물 유입은 농촌을 피폐화 시켰고, 젊은이들의 이농현상을 초래하여 수백만의 실업자를 유발시켰다. 대기업은 위에다 돈을 붓고, 밑에서 빼가는 돈통이었다. 이 돈통은 업주와 정치인 및 관리들의 것이었다.

밀수품이 범람하고 정경유착으로 전후 상류계급이 양산됐고, 사회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국가의 운명이 암담하기만 했다. 박대통령은 장충단 공관에서 집필한 그의 메모식 저서 "국가와 혁명파 나"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1956년부터 1962년까지 7개년간의 원조는 연평균 5억 달러였다. 경제원조가 2.8억불, 군사원조가 2.2억불이다. 환언하면 한국경제가 완전히 자립하자면 군사 면을 제외하고도 2.8억불과 무역적자 5천만 불을 합쳐 3.3억 불을 새로이 벌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그렇게 된다 해도 이는 현상유지 하는 데 그치는 일이다. 이에 가중되는 연평균 2.88%의 인구 증가, 즉 72만 명의 압력은 어찌할 것인가?"

"원조를 받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것은 기적 이외에 바랄 것이 못되지 않는가? 위기를 고하는 수많은 국민의 생활난, 해마다 늘어만 가는 식량부족, 30%의 실업율, 모두가 시급한 해결의 길을 바라고 있는데 반해 해결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2)

안보 불안 및 기아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월남전은 어쩌면 기회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 11월 중순 케네디 미 대통령을 만나 한국군 파월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이는 박대통령이 세계 군사정세에 앞을 내다보는 남다른 능력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1964년 8월 12일 통킹만에 있던 미 구축함이 월맹군의 공개적인 공격을 받아 미국이 전격적인 베트남전 개입을 선포하게 됐다. 이어서 1965년 3. 8일 3,500명의 미 해병이 다낭에 상륙함으로써 지상군 개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주한미군을 한국 전선에 잡아 두고, 군 현대화 및 경제 성장을 위한 원조를 늘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한국군을 파병하는 길뿐이었다. 한국은 미국과 월남 정부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파병 요청을 받았다. 미국은 6.25때 피를 흘리면서 한국을 구출해 주었는데, 그 미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 도움을 청하는 마당에 우리가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다는 것은 국제적 의리에도 어긋나지만 남한이 어려움을 당할 때 미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최악의 선택이었다.

한국군의 파병으로 주한미군은 "인계철선" 역할을 떠맡게 됐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한국을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지키고, 한국 경제를 번영시키기 위한 당연하고 진취적인 길이었다. 미국에 의해 끌려간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요구하기도 전에 미국의 바둑판을 읽어주고 혼수를 두며 미국의 힘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한 것은 박대통령의 혜안과 능동적인 결단의 결과라고 본다.

당시 한국군의 실정을 보자. 한국군 유지비의 70%가 군원으로 충당 됐다. 군간부들은 한편으로는 박봉에 시달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루한 군사문화에 숨 막혀 했다. 소위의 봉급이 겨우 20 달러, 전방 시골 마을에서 하숙비를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었다. 고급장교들은 시각이 좁아 공연히 부하 간부들을 괴롭혔고, 비전 없는 군 생활에 쌓이는 불만을 막걸리로 그럭저럭 해소하고 있었다.

바로 이 때, 장교들에게는 눈이 번쩍 뜨이는 기회가 생겼다. 파병해서 죽고 사는 건 그 다음의 문제였다. 우선은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었다. 장교로서 파병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건 치욕이라고 생각했다. 장교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은 경력관리였다. 파병 경력을 갖지 못하면 남보다 뒤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파월 장병들의 사회적 인기는 대단했다. 당시 이광재 아나운서는 "국가의 명예를 양어깨에 짊어지고 보무도 당당히 행진하는 저 늠름하고 자랑스러운 대한 건아들의 모습을 보라"며 북받치는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 눈물을 흘렸고, 연예인, 주부, 여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행진하는 파월 장병들에게 꽃다발을 걸어주었다. 종로 통의 거리와 빌딩 속 창가에는 환송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당시에는 파월장병이 최고의 인기였다. 전국에서 위문품이 쇄도하고, 쏟아지는 위문편지, 펜팔이 장병들의 마음과 정신을 살아 있게 만들었다. 대한 뉴스의 앞머리는 거의가 다 파월 장병의 업적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감격은 파월 장병의 가슴에 가장 아름답고 신났던 추억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 그때 파월의 기회가 없었다면 군생활이 너무나 따분하고 어두웠을 것이다.

필자는 월남에서 42개월간 근무했다. 필자의 인생에 있어 가장 황금기요, 가장 값진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은 바로 월남이다. 인생을 회고할 때, 가장 이야기 거리가 많은 곳이 바로 월남이다. 파월 기회는 필자를 군인으로서 성장시켰고,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잡게 했고, 지휘와 경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수를 터득시켜 주었다.

1999년 말 육군 제3사관학교 부설 충성대 연구소가 265명의 참전 용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다시 참전하라면 하겠느냐는 질문에 장교의 81.2%, 하사관의 83.3%, 병사의 59.7%가 재 참전 의사를 밝혔다. 파월 장병의 모습이 훌륭했다고 생각하는 장병이 69.1%, 파병이 국가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장병이 76.4%였다.

더러는 부끄럽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 특히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일부의 군인들이 그럴 것이다. 월남전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이 있다면 허위보고와 일부 부패분화였다. 하지만 양민학살은 아니었다.

III. 베트남전 참전 성과

베트남 파병은 조국근대화 와 국군현대화를 위한 유일무이한 기회요 발판이었다고 본다. 1963년 가을에 박 대통령은 "경제를 자력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기적일 뿐"이라고 고민했다.

한국군의 월남전 참전 몇 년만의 변화를 보자. 1960년과 61년도의 원조액은 각기 1.84억 달러와 2억 달러였지만 1964년에는 1.24억 달러로 축소됐다. 1962년에서 1965년까지 5개년간의 원조가 9.08억 달러였다. 연간 1.8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렇게 축소 일변도로 내달리던 원조액은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이 이뤄진 1966년도부터 1971년 5개년간에는 20.22억 달러, 즉 연간 5.05억 달러로 증가됐다.(3) 월남전이 끝나기도 전에 한국경제는 연평균 12%의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다.

1972년부터 8개년간 제1차 울곡사업이 추진됐다. 경제성장이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GNP의 6%를 국방비로 쓴다는 원칙 하에 세운 8년간의 울곡 예산은 15.3억 달러였다. 그러나 81년도에 막상 결산을 해보니, 8년간의 실 집행 울곡 사업비는 60.3억 달러였다.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 성장이 울곡 예산을 4배나 크게 만들어 주었다.(4)

필자는 1974년 경영학을 배우러 미국에 유학했다. 경제시간이 되자 교수가 한강의 기적을 당대 최고의 모범사례로 꼽았다. 구호물자만 얻어먹던 부끄럽던 신세에서 이제는 어깨를 펴고 "I'm from Korea"라고 자랑스럽게 나를 소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적을 낳게 했던 유일한 요인은 "월남특수"였다. 월남 특수가 아니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있을 수 없었다.

1. 경제성장 실적

월남 특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낸 유일무이한 원동력이었다. 1966-1972년간 월남에서만 직접 획득한 외화는 8.725억 달러였다. 이 중에서 장병 송금액은 1.783억 달러로 베트남으로부터의 송금된 전체 외화의 20.4%에 불과했다. 나머지 80%는 베트남으로의 수출, 베트남에의 군납, 파월 기술자 송금, 파월 지원경비, 파월 건설 및 용역에 의한 수입이었다.

미국의 후원과 월남특수가 일궈낸 국가 신인도에 따라 외국자본이 물밀 듯 들어왔다. 그 결과 1965-1972년 간 외자 도입액은 32,882억 달러나 됐다.(5) 대미수출을 보면 1965년도에 불과 0.617억 달러였던 것이 1973년도에는 10.212 달러로 도약했고, 주한미군이 한국에 뿌린 돈이 8억 달러, 군원이관 중단액이 0.93억 달러 등 총체적으로 한국군이 월남특수로부터 얻어들이는 경제적 이익은 5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6)

이는 장장 14년간의 교섭 끝에 1966. 6.3일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청구자금으로 들어온 무상원조 3억 달러, 재정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 포함 8억 달러에 비하면 대단한 금액이다. 일본과의 협상 당시에는 엄청나게 크게 보였던 8억 달러가 베트남 특수를 누리고 난 다음에 보니 너무나 작아진 것이다.

더구나 일본의 무상원조 3억 달러 및 재정차관 2억 달러는 1966년부터 10년간 제공됐고, 상업차관 3억 달러 중 1.2억 달러는 어업협력 및 선박건조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재 도입용으로는 1.8억 달러에 불과했다.(7)

월남 참전은 미국으로부터 원조, 차관, 상품 및 용역 수출로 특수의 물꼬를 텄고, 이로 인해 신용이 올라가고 다른 선진국으로부터의 차관도입이 용이해졌다.

1964년도 외환보유고는 겨우 1.28억 달러였으나, 1975년에는 15.4억 달러, 1978년에는 49.4억 달러로 폭증했다.(8)

남북한 1인당 GNP를 보자. 1953년, 남북한 1인당 GNP는 각기 67 달러와 53 달러로 남한이 1.2배 더 높았다. 1959-1965간에는 남한이 북한의 60-70% 수준으로 처졌다. 그러나 월남이 패망한 1975년에는 남한이 북한보다 1.4배 높았고, 1997년에는 남한이 12.8배로 앞서가고 있다.(9)

박대통령이 집권하기 이전에 한국엔 일자리가 없었다. 당시의 공식 통계만으로도 실업률은 1963년 29.9%, 1994년에는 29.7%였다.(10)

공장이라고는 겨우 제분, 제당, 제약 회사들과 같은 것뿐이었고, 기계공업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손톱깎이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강도와 정밀도를 규정하는 스펙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사회 전체가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청년들에겐 앞길이 막막했다.

박대통령은 월남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경부선, 댐공사, 발전소 등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능학교들을 세워 기능공을 대량으로 길러내기 시작했다. 박대통령은 이들 기능공들의 친구가 됐다. 기능공들은 국제기능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는 게 소원이었다. 매년 금메달은 한국이 독차지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기능공의 나라가 됐다. 공장장이 사장보다 더 높은 월급을 받았다. "대학가야 소용없다, 기술을 배워야 대접받는다"라는 말이 사회적 유행어가 됐다.

박대통령은 외국에 특사들을 내보내 한국에 값싸고 질 좋은 기능공들이 많으니 들어와 공장을 지어달라고 호소했다. 박대통령의 약속을 신뢰한 외국기업들이 줄줄이 들어와 공장을 지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는 일이라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장난질을 하지 못했다.

한국이 조립을 많이 해서 팔면 그만큼 부품과 소재들을 샅아서 팔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공장을 짓는 것은 외국기업에게 또 다른 매력이었다. 한국의 일자리는 이렇게 해서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대규모 공단을 지어 기업인들을 입주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기업들에게 외국에서는 이미 사양화 돼 가는 수많은 제품들에 대한 기술도면을 얻어다 주었다. 그러나 공장에는 외국어로 쓰여진 기술자료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외국에 나가있는 과학기술자를 대거 유치하여 기업을 지도하게 했다. 생활필수품 마저 고갈됐던 당시엔 한동안 물건이 없어서 못 팔 판이었다. 굶주린 배에 음식이 한없이 들어가듯 만들기만 하면 모두가 팔렸다. 공장을 가진 기업들은 한동안 땅 짚고 헤엄 치듯이 돈을 긁어 부자가 됐다. 기업은 날로 번창하고 생산 설비는 더욱 팽창했다. 그만큼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과학적인 방법이었다. 반면 지금은 어떤가? DJ정부가 만들어낸 일자리를 겨우 공공근로 뿐이다. DJ의 개혁은 오히려 경제 몰락을 가속시켰다. 일자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만 가고 있다. 그런데도 대책은 전혀 없다. 바로 이런 게 박대통령과 DJ와의 경제 리더십 차이이다.

박대통령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다. 당장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는 미래에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을 키우는 데에도 착안을 했다. 참고로 그가 얼마나 미래 지향적이었는지는 창원 공단에 나있는 광활한 도로 폭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주위의 의아심을 무릎 쓰고 그는 넓은 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땅을 그때에 사두었다. 훗날 땅값이 오르면 넓은 도로를 건설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가 경부고속도로를 지을 때 당시의 야당 지도자들은 얼마나 반대를 했던가. 그러나 지금 이 도로들을 넓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같은 시각으로 그는 빠듯한 나라 살림에서도 오늘날의 과학 단지를 만들어 냈다. 과학 단지야말로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핵심적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는 과학자들에게 과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그들 곁을 자주 찾았다. 대통령을 좋아한 나머지 과학자들 중에는 과로를 반복하다가 순직한 이들도 꽤 있었다.

과학촌 수장들이 박대통령을 만나기 원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에도 만나주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니 장관들이나 공무원들이 과학자들을 지금처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는 그가 몇 일 씩 머물던 방이 있었다. 그 방은 과학기술에 대한 그의 일선 지휘소였다. 그러나 그가 떠나고 난 지금까지 그 방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후의 대통령들에게는 과학이 입으로만 중요했다.

박대통령이 월남 특수와 기능공 양성에 의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데 반해 지금 김대중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북한의 막노동꾼을 양질의 노동력이라고 말하며 북한특수는 월남특수나 중동특수에 비하지 못할만큼 굉장할 것이라고 헛말만 하고 있다. 박대통령과 그의 업적을 격하하려거든 그가 이룩했던 경제성장을 이룩해 놓고 해야 할 것이다. A학점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A 학점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다.

2. 월남 특수가 중동 특수를 유발시켰다

한국군은 월남의 8개항만 중 5개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월남의 주요 공사는 한국 기업이 맡았다. 당시 천막회사였던 한진과 현대는 기술도 없이 담요나 모기장 그리고 급수 대책도 없이 무작정 월남 땅으로 상륙했다.

한진은 월남에서 1.5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현대는 감란 부두 공사 500만 달러를 비롯하여 연평균 100만 달러 이상의 계약고를 올렸다.

1974년초 청와대 오원철 경제 수석이 박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중동은 고온에다 모래 바람이 부는 열악한 땅이다. 금녀, 금주의 땅이라 선진국 근로자는 아무리 돈을 많이 쥐도 가려 하지 않는다. 우리에겐 군인 정신으로 무장된 수십만의 제대 장병이 있습니다. 월남 참전 용사들도 많습니다. 여자 근로자가 만든 상경공업 상품을 수출하여 지탱해오던 한국경제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1965년-75년 9년간 중동건설 수주액은 불과 2,400만 달러였다. 1974년에는 8,900만 달러, 1975년에는 7.51억 달러, 76년에는 24.3억 달러, 77년에는 33.87억 달러, 78년에는 79.82억 달러를 기록했다.(10) 오늘날의 기록과 비교해 보라. 그 엄청난 기술과 해외수주 기록을 가지고도 현대를 비롯한 한국의 모든 건설업이 중동

수주에 발조차 들여놓지 못하고 냉대를 받고 있으면서 줄줄이 도산하고 있지 않은가? 일을 해보지 않고 돈을 제 손으로 벌여보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다.

월남 파병으로 인해 한국 노동력은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파월하기 전의 해외 진출 노동력은 운수나 하역 같은 단순 노동력이었다. 하지만 파월 이후의 해외진출 노동력은 기능 인력이었다. 파월이 기술경쟁력을 길러준 것이다.

IV. 군 현대화의 원동력

월남전을 계기로 한미 안보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했다. 1961-65년, 5년간의 군사원조 총액은 8.15억 달러였다. 하지만 1968-72, 5년간에는 22.87억 달러였다.(11)

신예구축함 2대, M-16소총 국산화 지원, 유도무기 지원, 각종 방위산업 기술 이전, 파월 군 전체의 신무기 무장, 3개 향토사단의 정규 사단화, 17개 육군사단 및 1개 해병사단의 장비 현대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신무기 및 방위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들 가지적인 성과보다 사실상 더 중요한 성과는 군간부의 현대적 사고방식과 행정의 현대화였다.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훈련하고, 국제 매너에 익숙해지게 됨으로써 군사문화가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이는 해외 유학보다 더 큰 기회였다.

한국군은 실전경험 특히 북한의 최고 위협이 되고 있는 비정규전 능력을 쌓게 되었고, 초 현대무기에 대한 개념을 터득했으며, 연합작전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눈을 뜨게 됐다.

오랜 동안 외국의 지배를 받아왔던 피압박민족에 배어있던 무기력함과 자조적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리도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오늘날과 같은 한국이 있게 된 것이다. 파월 기회가 없었다면 30%의 고실업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고, 한국은 당시에 우리보다 선진국이었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보다 더 낙후돼 있을는지 모른다.

불과 1964년까지도 구호물자를 배급받던 신세에서 불과 4-5년만에 우리 힘으로 경제를 운용하게 됐고, 불과 8년만에 우리의 돈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군 장비를 현대화시킨 것이다.

그 외에도 외교 역량의 증대 및 한미 안보 관계의 강화는 돈으로는 환산될 수 없는 엄청난 도약을 가져다 주었다. 막연히 돌겠다던 느슨한 협력관계가 "인계철선"과 "핵우산"이라는 구체적인 협력관계로 전환됐다.

아마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기회가 못 마땅할 것이다. 베트남전을 민족해방세력과 반역세력간의 대결로 정의하고, 미군과 한국군 등을 반역군으로 정의한 이들은 아마도 김일성에게 민족해방의 기회를 허락해주지 않은 한.미안보협력강화 등을 비롯한 박정희의 업적을 못 마땅해 할지도 모른다.

베트남전 참전으로 인해 미국은 곧 한국전의 인질이 돼 버린 것이다. 1966년2월22일 한국을 방문한 험프리 미부통령은 "한국땅에 단 한 사람의 미국인이 주둔하고 있더라도 전 미국인이 한국에 다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 "휴전선 이남에 대한 공격은 곧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12) 그 어떤 경제적 효과보다 더 엄청난 효과는 바로 이 "인계철선" 효과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한미군에게 작전권을 준 것이 국민적 프라이드상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지만 지금처럼 한국군이 북한에 비해 열등한 상태에 있는 한, 작전권을 미국에게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억지력이 되는 것이다.

V. 한국군의 월남전 참전에 대한 평가

육군3사관학교부설 충성대연구소는 1999년에 1,000명의 일반 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69.1%가 파병된 한국군의 모습을 좋게 평가했고, 좋지 않다고 평가한 사람은 불과 6.8%로 나타났다.

파병이 한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85.8%가 기여했다고 대답했고, 불과 4.8%만이 국가발전에 저해가 됐다고 답했다.

파병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88.1%가 경제성장의 계기가 됐다고 답했고, 2.4%만이 악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파월이 국가발전에 기여했다고 보는 사람도 연령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에서는 89.0%

가, 40-50대에서는 94.6%가, 20-30대에서는 60.7%가, 파월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한국국민 대부분이 파월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하지만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2000. 6. 1일자 한겨레 310호에서 월남전 파병을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베트남파병은 한국현대사의 치욕", "베트남전 파병문제를 제쳐놓고선 박정희 시대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없다",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보내면서 그들의 피값조차 덤핑해버린 박정희가 유능한 대통령일 수 있을까?"

"동일계급을 비교할 때, 필리핀군이나 태국군의 30-40%에 불과한 싼값에 우리 젊은이들을 베트남으로 보냈을까?", "대일 청구권 문제는 무상 2억 달러, 유상 3억 달러의 형편없는 헐값에 끝내고 말았다. 당연히 일본으로부터 배상 받아야 할 금액을 받아내지 못하고, 그걸 보충하려고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보낸 박정희가 유능한 대통령일 수 있을까?"

이어서 한겨레 홈페이지에 실린 그의 글 밑에는 "박정희란 인간에 대한 철저한 폭로"라는 제 하에 박정희 대통령을 "민족의 반역자", "반란군 수괴", "빨갱이", "매국노"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혹시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증오가 그의 업적인 "파월한국군"에 대한 증오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싶다.

1. 용병론에 대하여

한홍구 교수는 2000. 5. 6일 심야토론에서 용병론의 근거를 값싼 피 값이라고 했다. 한홍구 교수의 주장을 보자. "한국 소장 354불, 필리핀 소대장 442불, 태국 소대장 389불"이라고 했다.

대위 수당을 보자. 한국군 190.40 달러, 월남 123.48, 미국 569.05달러, 필리핀 475.20달러, 태국 406.92 달러였다. 소위 수당을 보자. 한국군 151.55 달러, 월남군 103.35, 미군 435.85, 필리핀군 441.92, 태국군 389.33 달러였다.(13)

여기에서 한홍구 교수는 눈에 보이는 비교표만 본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비교의 엄청난 오류다. 필리핀과 태국은 한국군이 누렸던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 파월 기간중 한국군의 수당은 1.783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한국군과 직접 연관되어진 "월남으로부터의 송금액"만 해도 8.576억 달러다. 수당은 전체 송금액의 불과 20%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군 한사람은 20전을 전투수당으로 받았지만 한국군 한 사람이 국가에 벌어들인 돈은 1달러인 것이다. 이를 가지고 각국 장교들과 비교해보자. 한국군 소위가 직접 받는 수당은 불과 151.55 달러지만 소위 한 사람이 정부에 벌어들인 돈은 757.75 달러였던 것이다. 이는 가장 많이 돈을 받는다는 필리핀 장교 수당의 1.7배나 된다.

여기에 파월 효과가 빚어낸 외국인 투자, 경제 및 군사원조, 한국군 현대화, 방위산업, 대미수출, 중동특수, 한강기적이 일궈낸 가치 등을 종합해보자. 태국과 필리핀에게 이런 특혜가 주어졌던가? 숫자를 놓고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누구라도 한다. 한국현대사를 쓰고 있는 교수의 분석력과 시각이 이러하면 한국현대사에 문제가 있다.

용병이란 돈을 받고 전투를 해주는 프로 군인이다. 파월 한국군은 스스로는 적은 돈을 받으면서 국가발전에는 천문학적으로 기여한 1등 공신이다. 필자는 소위 때, 월남에서 미군 소령의 발 밑에 대고 총을 연발로 발사한 경험이 있다. 소위에게 용병 개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팔려간 주제"에 주인 군대에게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파월장병 모두에게 물어 보라. 용병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국민 대부분이 파월 장병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장교와 하사관의 83%가 지금 또 다시 파월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또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고엽제 환자 등에 대한 치료나 대우조차 제대로 해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국민이 많다. 이런 시점에서 단지 전투 수당을 싸게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극히 예외적인 잡티를 가지고 파월을 자랑스러워하는 32만 장병과 그들에 관련된 5백만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은 그 의도부터 의심받아야 할 것이다.

1860년대 초에 국가별 위상도 고려해야 한다. 1960년 1인당 GNP는 남한이 79달러, 북한이 117 달러였다. 이때 필리핀이나 태국은 한국보다 3배나 더 높았다.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미국인 근로자만큼 받는가? 당시 한국군 소위의 국내 봉급은 겨우 5,350월, 소득세 등을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이 4,596원이었다. 당시 환율은 1달러 당 255원이었다. 불과 18불이었다. 소위의 파월 수당 152달러는 국내봉급의 8.4배였다. 이것을 왜 헐값이라고 하는가?

한홍구 교수의 글에 나타난 대일 청구권 배상액도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는 무상원조 3억 달러, 재정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인데도 불구하고 한홍구 교수는 "대일 청구권 문제는 무상 2억 달러, 유상 3억

달리의 형편없는 혈값에 끌내고 말았다"고 적고 있다. 이 자료는 사실과 매우 다르다.

사람은 누구나 명예를 먹고산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황금기를 월남 전투에서 보내며,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장병과 그 가족들이, 비교조차 제대로 하지 못 할만큼 시야가 좁고, 대일 배상액조차 정확하게 인용하지도 못할 만큼 부정확하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중요심으로 가득한 소집 단에 의해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직시해야 할 것이다.

2. 베트남 양민 학살론에 대하여

1999년 9월2일자 한겨레21 273호가 주월 한국군을 20세기의 광기와 야만 그리고 용병으로 정의했다. 베트남전을 민족해방세력과 반역세력간의 대결로 정의했고, 미군, 한국군, 월남군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한 호주군, 뉴질랜드군, 대만군, 필리핀군, 태국군, 영국군을 반역군으로 정의했다.

구수정이라는 여성 통신원이 주축이 된 이 폭로 기사는 6개월이 넘도록 끈질기게 계속됐다. "젓먹이까지 죽이고도 모자라 무덤조차 불도저로 밀어버렸다", "갈기갈기 찢겨져 흩어진 살점과 뺏조각을 주우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하늘도 눈이 멀던 그날에".

한홍구 교수는 2000. 6. 1일자 한겨레 310호에서 "수만 명의 전투인력을 보내면서 민간인 학살의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런 통치자는 바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만일 박정희가 민간인 학살을 전혀 몰랐다면 이는 박정희의 군에 대한 장악능력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한다

필자는 1967년 26세의 나이에 소위를 달고 겁나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42개월간을 지내면서 치열했던 전투들을 거의 모두 다 경험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으며, 전쟁의 비참함을 누구보다 더 많이 목격했다.

필자는 월남에서 관측장교, 화력지휘장교, 사이공 사령부 전속부관, 월남군청 연락장교, 포대장 등을 역임했고, 늘 소식에 빨랐기 때문에 월남전 스토리라면 산 증인일 수 있다. 특히 구수정 특파원이 가장 많이 취재를 했던 투이호와에서는 36개월을 근무했다. 장교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다 공개될 수밖에 없을 만큼 말 많고 빠삭한 월남전 문화권에서 필자는 구수정 특파원이 묘사한 그런 참혹하고 몸서리 쳐지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월남에는 전략촌이 많다. 마을의 지하는 동굴이다. 주민들이 나와 땅속에 아무 것도 없다며 한국군을 속였다. 안심하고 잠시 휴식하는 한국군에 총격이 가해졌다. 지휘관을 포함한 병사들이 순식간에 쓰러졌다. 눈이 뒤집힌 병사들이 그 주민들을 그냥 두겠는가.

바로 이런 게 전쟁이다. 전쟁은 거대한 기계다. 전쟁은 성난 홍수와 같아 개개인의 기막힌 사연을 의식치 못한다. 예쁘게 생긴 어린 여아가 와서 귀여움을 받다가 수류탄을 놓고 간다. 비록 민간인 복장을 하기 했지만 눈이 뒤집힌 병사들은 무차별 사격을 가할 수밖에 없다. 월맹은 그런 민간인의 죽음을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국제사회에 심리전을 폈다.

그렇게 해서 죽은 민간인들은 아무리 어렵고 용감한 전사다. 불쌍하게 학살된 사람들이 아니다. 파월 장병들도 한국인의 자식들이다. 구수정 여인이 기술한 것처럼 한국 병사들이 악랄했다면 그 악랄함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전우가 그렇게 죽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똑같이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귀조차 기울여줄 필요가 없는 비정상적인 사람일 것이다.

월남에서 한국군에 대한 원성의 소리가 1이라면 타이완에 대한 칭송의 소리는 1,000도 넘을 것이다. 통신원이 월남인들에게서 느낀 비참함이 크게 느껴졌다면 고엽제를 대물림하고 있는 한국군 전사들의 고통과 가족들의 비참함은 아마도 그 백 배는 넘을 것이다.

월남인들은 한국인이 나타나면 무엇이든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치 않는다. 설사 베트남으로부터 본 피해라 해도 한국군으로부터 보았다고 해야만 덕을 볼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도움을 주지도 못하면서 기대를 갖도록 설치고 다니는 것이야말로 그들을 기만하는 행인일 것이다.

한국군에 의한 월남인의 피해가 전우를 등뒤에서 쏘아버린 전략촌 주민들에 대한 조건반사 적 차원의 것이었다면 그들의 동족인 베트남에 의해 입었던 월남인들의 피해는 조직적이고, 가히 살육적이었다. 월남인들의 목숨을 경시하기로 말하자면 그들의 동족이 한참 더 잔인했다. 마치 6.25때에 우리 민족에게 가장 잔인했던 사람들은 미군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었던 빨갱이들이었던 것처럼!

이러한 반사적 보복행위는 어느 전쟁터에서나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는 사건을 침소봉대하는 데에는 혹 다른 전략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군을 짐승에 가까운 집단으로 묘사하는 것은 영군 정서에 상당히 기여했을 것이다. 주민과 군을 이간시키는 것은 모택동 전술의 기본이다. 주민으로부터 불신 받는 군

대는 승리할 수 없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2000년3월2일 한겨레 297호에 "베트남과 양민을 구별할 수 없다는 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베트남 학살은 의도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수준에서 대거 이뤄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농부, 농민, 입산부, tm님, 아내, 어린 자식 등 무장을 하지 않은 이들이 대량 학살됐다. 한국군이 마을에 들어와 마을사람들을 불러보아 음식을 나눠줘 안심을 시킨 뒤, 집단사실을 자행하는 것이었으며, 교전 중에 사살된 것이 아니라 작전과는 무관한 마을이 통제로 학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세계의 강대국가인 미국의 오만이 원천적으로 양민학살을 잉태했던 것 같다".

들어줄 가치조차 없는 이런 유의 글들이 연이어 매스컴을 타고 있고, 온라인에서 돌아다닌다. 이는 마치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는 부녀자가 하는 소리만 같이 들린다. 그는 미국을 중요하는 것 같다. 미국이 강대국가면 김정일이 이끄는 북한은 양반국가란 말인가?

강정구 교수의 글 중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학살"이 설득력을 갖는지 살펴보자. 다음은 2000년 9월 1일 12시. 오마이뉴스에 올린 이병헌 기자의 글은 "김정길 법무장관님, 31년전 고등 군법회의를 기억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시작된다.

지난 7월 14일자 <동아일보>에 "베트남戰 '민간인사살' 인정 - 大法 69년 육군소대장에 有罪...31년 만에 첫 확인". 1면 머릿기사 제목과 부제가 인용됐다. 기사의 핵심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소대장이 베트남 민간인들을 사살하도록 지휘한 혐의를 우리 나라 대법원이 인정해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사실이 31년 만에 처음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김중수(59, 목사, 충남 공주시 유구읍)씨가 68년 5월 1일 월남으로 파병돼, 68년 7월 26일 군법회의에서 베트남 민간인 사살 혐의로 사형이 선고되고, 69년 2월 12일 국방부 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같은 해 4월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한다. 죄명은 '살인', '명령위반', '허위보고', '약탈', '살인특수교사' 5가지였다. 바로 이 사실을 동아일보 및 오마이뉴스 기사가 찾아내 기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31년전 고등군법회의에서 이미 베트남 양민에 대한 '살인, 명령위반, 허위보고, 약탈'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판결문에는 김씨가 무기징역을 받아야하는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68년 7월 15일 소대원을 이끌고 매복지점이 아닌 곳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다음날 새벽 1시15분 경 매복지점에 나타난 월남인 7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베트남이 아닌 자유월남인이었지만 김씨와 소대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월남화와 손목시계를 빼앗았고 2명이 달아나자 나머지 5명을 베트남으로 위장하여 총기와 크레모아로 사살했다고 판결문은 적고 있다".

기사는 "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사살이 법원 판결에 의해 인정된 것은 이것이 유일한 것이며, 이는 민간인 살해 피해는 없었다는 국방부의 공식입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다"라고 쓰고 있다.

기자들은 김중수 유죄사건에 대해 매우 기뻐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해낸 진실은 그들의 의도를 망치는 부메랑이었다. 강정구 교수 등의 주장대로 "조직적인 학살"이 이뤄졌다면 왜 한국군은 김중수 소위를 감싸주지 않고, 사형을 선고했는가?

이에 대해 우리는 양민을 살해했다는 김중수 소위를 욕할 수는 있어도, 김중수를 준엄하게 처벌한 한국군은 칭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인터넷에서 "사회병리"(social problem)의 정의를 찾아 보라. 패턴과 줄기가 있어야 사회병리로 취급된다. 돈키호테처럼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건은 사회병리가 아니다.

모든 사회현상에는 줄거리가 있고, 어쩌다 발생하는 돌연변이가 있다. 펄프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를 보자. "물줄기"가 있고, 사방으로 튀는 작은 "물방울"이 있다.

김중수 소위는 물방울이고, 그를 처벌한 한국군은 줄기 즉 시스템이다. 강정구 교수의 말처럼 학살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왜 사령부가 김중수 소위에게 사형까지 선고했겠는가? 강정구 교수는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오마이뉴스나 한겨레21은 "물방울"과 "물줄기"를 혼돈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양민학살론이 오직 "물방울" 즉 "돌연변이" 사례를 침소봉대 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고 말했다.

"야! 여기 김중수 소위가 있다. 양민학살의 증거가 있다"고 좋아한 그들은 "군사령부가 김중수와 같은 돌연변이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도 군이 조직적으로 양민을 학살했다고 보는가? 김중수 사건은 분명 조직적인 학살이 아니다. 강정구 교수는 또 다른 학살 사례를 내놔야 한다. 그리고 그 학살 사례들이 지휘체통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VI. 숨겨진 의도에 관심을 갖자

베트남 양민학살에 대한 한겨레21의 폭로가 한창이었던 1999년 9월 느닷없이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이 자극적인 이슈로 부각됐다. 이는 반미정서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만일에 이것이 보상문제로 확대된다면 미 의회가 나서서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이는 바로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의 전략적 목표다.

주한미군철수 국민운동본부는 약자로 “미철본”으로 불리고 있으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투쟁하기 위한 모임”으로 규정돼 있다. 이들이 벌이고자 하는 사업은 첫째, 주한미군 철수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둘째, 집회, 세미나, 출판 활동을 전개하고 셋째, 국내외 민주단체들과 총연대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앞세워 남한정권을 체찍과 당근으로 조종하여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여기에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주한미군철수 당위성”이라는 제 하에 글을 보냈다.

강교수는 주한미군의 행패들을 날날이 고발하고 있다. 노근리 양민학살, 대전형무소 정치범 학살 묵인 조장, 휴전선 고엽제 살포, 파주 폭발물 소동, 각종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민중”들의 “뼈저린 한”을 역설하고 있다. 강교수의 주장을 요약해 본다.

“군부와 고위지배층 인사들은 주한미군을 전쟁 억지력으로 생각하며, 주한미군이 나가면 북한이 무력 남침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다. 주한미군이 없어도 남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남침은 자살행위이기 때문이다.”

“1997년 남한은 177억 달러의 군비를 썼지만 1999년의 북한 군사비는 겨우 28억 달러이다. 인민군은 영양 실조로 체격이 왜소하고 훈련도 부족하다. 북한 무기가 양적으로는 남한의 1.6배로 우세하지만 육군 무기의 40%, 해군함정의 70%, 공군전력의 65%가 폐기 직전의 노후장비이기 때문이다. GNP 차이도 20배나 된다. 남한 자체로도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철수돼야 하며, 모든 군사동맹 체제도 철폐해야 한다.”

여기에 학술단체협의회가 “주한미군철수는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이라는 글을 가지고 거들고 나섰다. 이들은 상당히 전투적인 북한식 용어를 사용해 주한미군을 내몰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투쟁 방법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1) 정전체제를 마감하고 포괄적인 평화조치를 취하도록 활동목표를 정한다. 포괄적인 평화조치란 평화협정과 불가침 선언을 합한 것이다.

2) 미국이 한반도 정책을 바꾸도록 국제연대운동세력과 손잡고 미국을 설득한다.

3) 남한 내에 새로운 안보관을 세운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 때문에 주둔하는 것이고, 작전권을 미국에게 내준 것은 치욕이요 굴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4) 주한미군이 군비경쟁의 주범이라는 점을 인식시킨다.

5) 미국 국민의 여론을 움직인다. 주한미군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급기야는 아까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미국사회에 홍보한다.

“분산/분열된 통일운동력을 통합하고 단결하여 전진하자. 이를 위해 다양한 전술을 개발하자”는 식의 투쟁성 구호로 끝맺음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는 “북한은 남침을 할 수 없는 조건이다”라는 제하의 리영희 교수의 글도 실려져 있다. 리교수는 북한이 여섯 가지 조건에서 확실한 우위를 갖는 다는 “확증이 있어야 전쟁을 하는데 북한은 그 여섯 가지 조건을 다 갖지 못했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1)북한의 군사력이 확실하게 우위여야 하는데 오히려 남한의 군사력이 우세하다. 2)속전속결로 승리하려면 2-6배 가량의 전투력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3)장기전에서는 국가 총자원이 우세해야 하지만 자원에서는 북한이 열세하다. 4) 국제환경이 북한에 유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5)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전쟁의 가치가 우월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6) 전쟁의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이상의 다섯 가지가 다 열세한 북한에 전쟁 의지가 있을 수 없다. 이상의 논리에 의해 리교수는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여기에 북미주조국통일동포회의가 “주한미군 없는 21세기 한반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감정적 구호를 사용하여 미국의 제국주의 로선과 만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범민련남측본부도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자주 조국 통일 이루자”는 제 하의 글을 실고 있다. “제국주의가 발악하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 제국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저절로 망하지는 않는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의 한길로 내달

리자”, “흐릿한 인공위성 사진 하나로 이북을 세계적인 악당으로 몰고 있다”, “뻔한 인공위성을 미사일로 몰아간다” 등의 투쟁적 구호들이 난무하고 있다.

구수정 통신원은 “월남전”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정의했고, 미군, 한국군, 월남군 그리고 다른 6개 참전국들을 반역세력으로 몰았다. 그렇다면 그에게 또 묻고 싶다. “한국전쟁” 역시 북한 인민공화국에 의한 “민족해방전쟁”이었고, 미군과 한국군은 반역세력이었다고 말할 것인지를!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가 희생당한 젊은이들을 “미군보다 잔인했던 용병”으로 규정하고, 월남에서 “친절한 타이한”의 명성을 세웠던 주월한국군을 반역세력이요 용병으로 매도하는 것은 “한국군 격하운동”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기고, 한국군을 격하시켜 군과 민을 분리하는 것은 바로 북한 공산당이 바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VII. 한홍구 교수에게 묻는다

2000. 10. 13일자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파병에 관한 심포지움”에 실린 한홍구 교수의 논문 중에서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1) 47쪽 중간이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군의 참전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 당시 월남 사정은 매우 다급했다. 될수록 많은 나라의 지원을 갈구하는 입장이었다. 63. 7. 15일 구엔 칸 수상으로부터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서한이 왔다(이훈섭 p.32). 어찌서 달가워하지 않았는지 그 논리를 제시해 주고, 구엔 칸 베트남 수상의 간절한 “베트남지원 요청 서한”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2) 49쪽 중간이다. 한교수는 “월남에서까지 한국군이 미군의 지휘를 받으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문서상으로는 나아가지 않았다. 구태여 문서화하지 않은 것은 채명신 사령관이 사실상의 작전지휘를 받는데 전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다”라고 쓰고 있다.

채명신 사령관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따내기 위해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을 포함한 미군 장군들과 어떤 게임과 담판을 해서 얻어낸 것인지도 조사해보지 않고 함부로 폄하 하는 자세는 특히 역사학자로서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32만5천 주월 한국군 장병들에게 물어 보라. 기본 자세가 이 정도로 불성실하면 한 교수의 글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게 아닌가?

3) 50쪽 중간이다. “이동원 외무장관이 월남은 우리 시장이니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자고 건의했지만 박대통령은 미국의 어려운 틈을 타서 타산적으로 나가면 너무 야박하지 않은가라는 입장을 보였다. 누구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인지 모를 박정희가 낳은 결과는 참담했다. 일단 미국과의 교섭이 끝난 뒤로 박정희는 한국장병들에게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기 위해 미국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요지의 글을 썼다.

53쪽 중간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의 전쟁이라는 불행한 기회를 틈타서 경제적 이익을 보았다. 여기엔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는 요지의 글이 있다.

한교수는 “일단 교섭이 끝난 뒤로는 다른 국가가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있으니 어머니 하면서 미국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포터 대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전투 수당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일단 교섭이 끝났으면 승복하는 자세가 깨끗한 매너 아닌가?

미국은 왜 한국전에 왔는가? 한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오지 않았던가? 미국이 왜 월남전에 참가했는가? 월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다. 미국의 도움을 받았고, 공산화를 저지해야 한다는 신념을 같이 하는 나라로서 미국의 어려운 입장을 이용하는 것이 야박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한교수는 53쪽에서 남의 어려운 점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보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문제삼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건인지 나쁘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 명확히 말해주기 바란다.

월남파병이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무엇이 참담하단 말인가? 대차대조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기 바란다.

4) 52쪽 하단이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북한체제를 경직되게 만들었다"고 적고 있다. 역지의 표현 같이 생각되는데 무슨 근거와 논리로 그런 인과관계를 규정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기 바란다.

5) 53쪽 중간이다. "한국이 베트남전에서 얻은 경제적 소득은 겨우 20여명의 병력을 파견한 대만이 얻은 소득을 약간 상회하는 것이었다"고 적고 있다.

대만이 불과 20여명으로 어떻게 우리와 비슷한 소득을 올렸는지 그 비결과 매직같은 스토리를 소개해 주고, 소득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기 바란다.

6) 54쪽 중간이다. 한 교수는 "한국전과 월남전을 더러운 전쟁"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했다.

한 교수는 한국전쟁을 더러운 전쟁으로 보는가? 혹시 통일 기회를 안타까워하는 북측의 시각이 아닌가?

7) 54쪽 하단이다. "교전이 끝난 상황에서의 학살은 전쟁범죄다"는 요지의 글이 있다.

6-7세의 어린아이가 꽃다발을 들고, 14세의 소년이 바나나를 들고 "따이한"하고 반기며 뛰어오는 것을 웃음으로 맞았다가 수류탄에 희생됐다. 이것은 분명 교전사항이 아니다. 이런 아이들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이 범죄인가?

8) 55쪽 하단이다. "마을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적들의 잠재적 기반인 주민들에 대한 학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구수정 특파원은 학살당한 양민의 수를 최초에는 5,000명이라고 했다가 다시 9,000명 그리고 지금은 12,000명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한국군이 그런 식으로 학살한다면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8년 8개월 동안 32만 5천명의 한국군이 왜 겨우 12,000명밖에 학살하지 못했는가?

당시의 화보와 뉴스를 보자. 마을에 가서 주민에게 쌀과 레이션을 주고, 치료해주고, 빙과 공공시설을 건설해주고, 길과 교량을 놓아주고, 태권도도 가르쳐 주고, 잔치도 열어주는 친절한 따이한의 대민 봉사과 선무활동이 주종을 이뤘다. 같은 구호품이라도 미군이 주면 받지 않고 한국군이 주어야 웃으면서 받았다. 한 교수의 말대로 마을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학살하는 한국군이라면 왜 이런 대민활동을 열심히 했겠는가? 한 교수는 이를 설명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역사를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잘한 점과 못한 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지 않는가?

9) 56쪽 하단이다. "학살해놓고도 전우들간에 오늘 일을 발설하지 말라며 은닉한다"는 요지의 글이 강한 어조로 쓰여있다. 누가 무서워 누구에게 은닉한다는 말인가? 월남인에게 알리지 말자는 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상부에 알리지 말라는 말이 아닌가? 한 교수의 말대로 조직적인 학살이 이뤄졌다면 상부에 알릴수록 상부는 좋아할 것이 아닌가? 목회를 한다는 당시의 김종수 소위는 도망가는 주민 5명을 사살했다는 죄로 사형을 언도 받았다. 벌을 내린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닌 그의 부대장과 주월한국군 사령관이다. 사령관 지침에 따라 양민을 조직적으로 학살했다면 김종수 소위는 상을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해명해 주기 바란다.

10) 여기에 나온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 멤버들은 주한미군 철수에도 앞장 서 있다. 박정희에 대해서는 증오심마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이들과 맞서서 반대 논리를 전개하는 이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적 치적 즉 세계인들이 이름 붙여준 "한강의 기적"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국가적 지위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이들은 국가 이익과 자존심 때문에 미군과 국내외에서 사사건건 겨뤘은 사

람들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위태로운 안보상황을 지켜줄 배후로서 주한미군을 제1로 꼽고 있다.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전문가를 우습게 생각하면서, 한국전을 더러운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한강의 기적을 수치로 몰아붙이고, 안보를 지켜주는 미군에 대해 "제국주의의 야욕을 몰아내자"며 적개심을 가지고 내몰려 한다면 진실위원회는 근거도 전문성도 없이 매우 "희귀한 주장과 개인적 증오심"을 가지고 역사를 재단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참고문헌

- (1) Frank Snepp. "Decent Interval(New York: Random House, 1977). p.567
- (2)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향문사, 1963), p.258-259
- (3) 김암삼. "월남참전과 한국의 국가발전"(국방연구원, 1997)
- (4) 국방연구원, "올곡10년의 평가"(국방연구원, 1987)
- (5)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감 1996 pp. 11-251
- (6) 나중삼, "월남참전의 국가이익과 참전자에 대한 국가지원"(대한해외참전전우회, 1996) pp. 68-69
- (7) 이승윤, 홍재영, "한국의 경제적 근대화 과정(광명출판사, 1975), pp.202-203
- (8) 경제기획원, 주요업무지표, 1979, pp.90
- (9) 통계청, 대한민국 5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1998, pp.304
- (10) 중앙일보, "70년대 위기 이렇게 이겨냈다", 1998. 1. 7
- (11) 김기태,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과 한미관계, pp.140
- (12) 월남참전33년사, 전우신문사, 1997. pp. 212
- (13) 이상우, "제3공화국 외교비사, pp.283-284

제 2 주제 : 베트남전쟁의 특수성과 대민피해의 진상

<발표자> 이 선 호 (李善浩)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행정학 박사)
- 미 해병대 지휘참모대학 졸업
-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졸업
- 해병대 대령 예편
- 국방대학원 교수 역임
- 현 동국대 · 경기대 행정대학원 강사
- 한국시사문제연구소 소장
- 한국군사학회 부회장
- 군사평론가협회 부회장

<토론자> 고 경 태 (高暉兌)

- 1994년 한겨레21 기자 입사

베트남 전쟁의 특수성과 대민피해의 진상

이 선 호
한국시사문제연구소장

I. 서론 : 문제의 제기

II. 베트남전쟁의 성격과 특수성

1. 전쟁의 속성과 전쟁관 그리고 전장심리
2. 베트남전쟁의 성격과 특수성

III. 베트남전쟁의 대민피해 진상

1. 구수정 통신원의 양민학살 주장비판
2. 「한겨레 21」의 양민학살보도 비판
3. 「일간 펜 그리고 자유」의 양민학살보도 비판¹⁾

IV. 결론 : 사필귀정

I. 문제의 제기

1964년 9월 11일 제1이동 외과병원이 부산항을 출발한 이후 1973년 3월 23일 주월 한국군의 후발대가 철수 완료할 때까지, 장장 8년 4개월간에 걸쳐 육군 수도사단과 제9사단, 해병대 제2여단, 해군 수송분대, 공군 지원단 외에 건설지원단 제100군수사령부, 태권도 교관단 등으로 이뤄진 4만 8천여명 규모의 주월 한국군은 자유수호의 십자군으로서 연인원 32만여명을 베트남에 파송하여 57만여 회의 대소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5천여명의 전사자와 1만여명의 전상자를 내는 큰 희생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²⁾ 그리고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근 6만명의 고엽제 환자와 의증 환자가 베트남 전쟁의 상흔인양 치유되지 못한 채로 병마에 시달리고 있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³⁾

베트남 전쟁이 끝난지도 벌써 30년이 가까워 오는 이때, 참전군인들은 대부분 50대 중반 이후의 노병으로서 이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자신의 신변정리 및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질 때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들은 일부 불순세력과 이를 사주하는 친북·좌경 성향의 특정 언론매체에 의해 범죄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어 심각한 갈등과 좌절을 안고서 고통을 되씹고 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역 만리의 위험한 밀림전에 투입되어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 전우들에게 베트남 양민을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대량학살 한 것으로 이들 집단이 단정하여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당국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우유부단한 유화책을 쓰고 있어 참전 노병들은 더욱 가슴아픈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고엽제 환자들이 정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대우조차 못 받고 소외되어 있는 오늘의 현실은 매우 심각한 국가정책의 왜곡이며, 사회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가 이들 고엽제 환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광주 5·18사태 피해자와 제주도 4·3폭동 피해자들에게 민주 유공자란 이름으로 국가유공자와 대등한 특혜를 베풀고 있음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1) 유재항기자 취재, 일간 펜 그리고 자유, 2000년 11월 7일.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한겨레-21, 2000년 11월 23일, 고정태기 자, PP.21~24.

2) 월남전과 고엽제(상), 전우신문사, 파월전사편찬위원회 1997, 발간사 및 P.283.

3) 국가보훈처의 2000년 10월 31일부 통계에 의하면, 후유증 3,764명, 후유의증 33,317명, 2세 환자 9명, 대상 22,577명, 총 59,667명의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등록되어 있다.

이로 말미암아 빚어지고 있는 사회 역기능적 현상이지만, 베트남 전쟁에서 순직한 장병들은 물론 생존해 있는 참전 전우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주고, 현역군인들의 국가안보와 국방에 대한 사명 의식을 위축시키고 있는 현상은 당사자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증폭시키고 반정부 저항여론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

더욱 가소로운 것은 이 같은 허무맹랑한 거짓을 유포하고 있는 자들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성년자이거나 병역 면탈자들도 있으며, 베트남 전쟁의 실상과 의미조차 제대로 모르면서 구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식자들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 전쟁의 성격과 작전환경은 물론, 전쟁과 국제정치 그리고 전장 심리의 상관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공식적인 사실자료로 입증되지도 않은 국부적이고 미시적인 현상의 첩보를 사실인양 확대 묘사하여 굴절, 편파, 변조 유포함으로써 스스로 소영웅주의에 심취해 있는 소아병자가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특히 이들이 「교전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나, 베트남전쟁시 한국군이 정당한 작전명령 없이도 병력이 출동 투입될 수 있고 장난삼아 민간인을 임의살해 할 수 있는 것처럼 추론하고 있음은 중대한 구성의 오류이다.⁴⁾

이에 본 논문은 정상체제에서 이탈한 이들의 비인간성을 질타하면서 국가안보정책의 난맥상을 타결함과 동시에 오도된 국민의 안보의식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어불성설의 양민학살 주장에 대한 허구성 과 기만성을 실증적으로 규명 제시함으로써 굴절사회에 경종을 울리려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먼저 베트남 전쟁이 지닌 현대전쟁으로서의 본질과 특수성을 거시적·동태적 국면에서 재진단·조명해 봄으로써 무한계적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교란·행사되는 초법적이고 불가항력적이며 불가해한 속성의 전쟁, 그리고 그 피해와 고통 및 희생의 대가에 대한 용납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한다.

베트남 전쟁과 관련하여 열악한 장비와 전투조직을 가진 남베트남의 민족해방전선이 상대적으로 현대화된 미군과 한국군 그리고 남베트남 정부군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국 남베트남은 북베트남 군에 의하여 무력 점령됨으로써 베트남의 민족주의 혁명은 성취되지 못한 채 공산화된 과정이 오늘날 한국 내에서 6·15 선언 이후 갑자기 득세하여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반체제·친북·용공세력이 추구하는 바와 일맥상통하는 유절동형의 행동과정일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군의 베트남 참전을 폄하하고 참전 전우들에게 의도적·조직적으로 베트남 양민을 대량살육 했다는 인간 사냥꾼의 굴레를 씌우려는 악의에 찬 이들의 저의는 결국 국군의 용병시비를 날조 부각시켜 반미감정과 반군사상을 고조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의 철수를 촉진시키고 동시에 국군의 국가안보에 대한 사명감과 주적개념을 희석시켜 북한이 원하는 자주적 연방제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대남혁명 전략과 통일전선 전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주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악의에 찬 이들 양민학살 주창자들의 행태를 볼 때, 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헌정체제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연한 또는 암암리의 간접 접근전략을 펴는 전위대이며, 반체제·반민족적 이적단체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한국전쟁당시 미군의 양민학살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받으려면,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실도 밝혀져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한다.

1954년 7월에 맺어진 파리평화협정의 결과로 주월미군이 철수함으로써 힘의 공백을 통해 북베트남 군과 남베트남의 민족해방전선이 합작하여 사이공 정부를 전복시켰지만 민족해방전선이 원했던 바 10개항의 행동강령에 의한 연립정부는 실현되지 못하고, 공산화통일의 비극으로 막을 내렸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⁵⁾

20세기 후반에 인도지나 반도에서 행하여진 2개의 전쟁, 즉 프랑스군이 개입한 인도지나 전쟁과 미군이 개입한 베트남 전쟁의 결과는 베트남의 남북분단과 공산화를 초래했을 뿐 베트남의 자주독립과 진정한 평화는 보장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제네바협정 조인으로 인도지나 전쟁이 종결되자, 남베트남에서 결성된 민족해방전선은 북베트남 군의 지원아래 남베트남 군과 미군 그리고 한국군과 힘겨운 장기전쟁 끝에 결국 1973년 1월

에 파리평화협정을 조인케 함으로써 외세를 몰아내는 전술적 승리를 거두고 남베트남 정부를 붕괴시키는데 성공했지만, 피 흘린 대가는 공산화뿐이었다. 그들이 바랐던 바 파리평화협정에 의한 사이공정권, 해방전선 그리고 제3세력의 3자 연합정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사이공 정권을 인수한 민족해방전선의 임시혁명정부 요원들은 하노이의 공산정권에게 정치적 주도권을 빼앗기고, 모두 거세당하거나 보트피플로 해외에 강제추방 되는 비극을 맞았던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자주적 연방제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고 악을 쓰는 오늘의 일부 몰지각한 좌경·친북·용공분자들은 만약 북한에 의한 연방제 통일이 실현된다면 베트남의 민족해방전선과 다름없이 공산화된 다음 무자비한 차별적 숙청대상이 되고 말 것임을 역사적 교훈에서 체득해야 할 것이다.

과월국군 전우를 매도하여 반미반군사상을 고조시킴으로써 고려연방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민족주의자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것처럼 목청을 높이고 있는 이들에게 베트남의 공산화 과정과 그 교훈을 인식시켜야 한다.⁶⁾

물론 베트남의 민족해방전선도 미국의 식민지화 기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대전제아래 자주, 독립, 민주주의, 평화중립 및 통일이란 대의명분을 투쟁의 기치로 내걸었으며, 공산주의를 표방하지는 않았으나 결국 공산주의의 울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이 주월미군을 굴복 철수시키는 전술적 목표는 달성했지만, 결국 민족해방전선을 뒷받침 해준 북베트남의 무력에 의해 공산주의 국가로 흡수 통일되고 말았으니, 민족주의의 실현이란 전략적 목표가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를 강도 높게 부르짖으면서 군사적 강성대국의 기치아래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김정일의 군사독재 정권이 유지 강화하고 있는 세계5위의 압도적 대남우위를 시현하는 대량 파괴무기와 재래형 전력을 우리가 스스로 과소평가하고서, 자주적 통일이란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온갖 노름을 다하는 이른바 「미철본」(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같은 단체도 「베트남전 양민학살 진실위원회」와 유절동형의 반체제·반민족의 이적단체가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한국안보에 치명타를 가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려고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따금 언론과 관제 여론을 통해 또는 학원가의 시위로 반체제적 돌출행동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베트남 전쟁을 재평가하는 논의 전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목적을 지향한다.

- ① 전쟁과 국제정치 및 전장심리의 상관관계 설명
- ② 베트남 전쟁의 본질과 특수성의 규명 및 이해
- ③ 베트남의 공산화 과정을 통해본 우리의 안보교훈 습득
- ④ 이른바 「베트남 양민학살」 주장의 허구성 논증
- ⑤ 한국안보 현실의 취약성 경고 및 처방 제시

II. 베트남 전쟁의 성격과 특수성

1. 전쟁의 속성과 전쟁관 그리고 전장심리

전쟁은 어떤 것인가란 물음에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다. 「전쟁은 지옥이다」 라던가, 「전쟁은 잔혹하다」란 말은 물론, 「전쟁은 죄악이다」 또는 「전쟁은 몹서리친다」란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전쟁은 찬란하다」, 「전쟁은 영광스럽다」란 예찬론도 있을 수 있다.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닌 인간이 카인의 후예로서 집단이나 조직을 이뤄 생존경쟁을 영위해온 이래, 상호간의 싸움은 불가피했다.

특히 인간이 국가를 형성한 이후 전쟁은 국가와 국가간 또는 국가와 준국가간의 조직적인 무력행사로써 존재해왔다. 특히 근대 국민국가형성 이래 전쟁은 영토나 시장을 노린 패권전쟁이나 종교나 민족간의 이념 수호를 전제로 행하여졌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쟁의 원인은 다음 3가지중 한가지 또는 2가지의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

- ① 인구의 증가, 자원의 확보, 부의 배분, 교역의 보장과 같은 경제적인 원인
- ② 천하통일, 대제국의 건설, 영토의 확장, 권력의 쟁탈, 명예의 만회와 같은 정치적인 원인
- ③ 신앙의 선포, 민족의 자결, 이데올로기의 옹호 같은 정신적 원인

6) 이선호,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의 반민족적 작태, 한국논단 2000년 4월호, PP.122~141.

7) 大澤正道, 世界戦争史の真相と謎, 日本文藝, 1996, P.20.

4) 강정구, 상황논리, 면죄부 안된다, 한겨레-21 제27호(2000년 3월 2일), 한겨레신문사, P.21.
한홍구,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과 민간인학살문제,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파병에 관한 심포지움 자료집, 2000년 10월 13일, P.54.
5) 友田錫, 裏切られたベトナム革命, 中央言論社, 1986, PP.299~320.

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16세기 이후의 문명세계에 있어서 무력충돌은 25만회 이상이나 행하여진 것으로 추정되니 연평균 500회가 넘는다.⁸⁾

과거 800년간에 있어서 지구상의 전쟁기간은 평화기간보다 오히려 길었다는 통계가 제시되고 있어 「평화가 상시태세이고, 전쟁은 변형된 태세이다」란 상식이 올바른 표현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인간의 기록된 역사는 3,400여년 이라고 하는데, 동기간중 전쟁에 의해 손실된 인명은 현재의 지구상 생존 인구가 필적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으며, 인류는 문명의 진보와 더불어 전쟁의 위협을 결코 배제하지 못하였으며,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부터 전쟁기간이 단축되고 전쟁발발 빈도가 감소되었으나 20세기에 와서는 그 대신 전쟁피해는 더욱 커졌는데 그 이유는 다음 3가지로 집약된다.¹⁰⁾

- ① 민주주의의 발달에 따른 전쟁원인 감소
- ② 장비와 무기의 고도화 및 복잡화에 따른 전쟁준비의 장시간 소요
- ③ 전쟁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쟁의 피해와 잔학상 심화로 전쟁회피 분위기 대두

지나간 전쟁사를 돌이켜볼 때, 중세의 국민국가(nation state) 출현이후, 근대전쟁으로 전환된 나폴레옹 전쟁을 계기로 국왕의 군대인 용병제도가 국민의 군대인 징병제도로 바뀌으로써 크라우제비츠의 절대전 내지 섬멸전 사상에 바탕한 결전전략이 대두되어, 적을 철저하게 섬멸하기 위한 무한계적 폭력행사가 이뤄짐에 따라 전쟁피해가 격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군사사상은 20세기까지 이어져 양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그 절정에 이르렀으나, 핵시대의 도래로 제2차대전이 막을 내림으로써 인류공멸을 의식한 나머지 비로소 무차별적 전쟁관의 근원적 사상의 일각이 붕괴되고 억제전략 전쟁관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른바 무차별적 전쟁관은 전쟁당사국 쌍방의 어느 쪽도 전쟁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잣대가 없어, 결국 강자의 승리에 의한 약자지배란 약육강식 내지 힘의 정의실현 논리가 정당화되었던 것이다.

이는 특히 18세기이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세력균형과 동맹관계에 의한 식민지 전쟁의 악순환을 도모하는 결과를 빚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후, 국제연맹규약은 일정한 전쟁을 금지시켰지만, 경제적 제재를 주로 한 불안정한 장치여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야기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핵시대에 만들어진 유엔헌장은 힘의 우위를 전제한 무력불행사 원칙을 표방하면서, 전쟁대신 무력분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국제간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내세운 안보이사회에 의한 침략국의 제재와 회원국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전쟁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하고 예방외교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무력함을 보이고 있다.

제2차 대전후 발발한 근 150여회의 국지 내지 제한전쟁으로 2,000여만명 이상의 사망자와 그 2~5배의 부상자 그리고 1,500만명 이상의 난민을 낸 것은 역시 그 사상적 배경이 여전히 무차별 전쟁관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¹¹⁾

핵의 균형내지 공포의 균형에 의한 핵억제전략 사상은 핵군비 경쟁을 부추기면서 결국 핵을 종이 호랑이로 평가절하 시키고도 핵군비 축소와 폐지를 가져오지 못한 채, 최근의 걸프전쟁이나 코소보사태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전쟁은 무차별적 전쟁관이란 군사사상을 불식하지 못하고, 핵의 사각지대에서 국지제한전쟁 내지 저강도 분쟁의 형태로 필요악이 되어 세계 도처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

무차별적 전쟁관은 유럽에서 18세기이래 주권국가가 등장하면서 국제정치에 있어서 전쟁이 합법화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였다. 즉 국가주권 발동의 최고형태로서의 전쟁은 정당화되고, 최후의 심판은 전쟁승패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적의 전투력을 분쇄하고, 적의 저항의지를 철저히 말살하려는 결전전략사상이 전장을 지배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열강에 의한 세계의 분할 및 식민지 지배로 정당화되는 계국주의의 침략전쟁이었으며, 마침내 주요국들의 다툼으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져 사망자 900만명이란 기록적인 희생을 자초하게 되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제2차 세계대전 역시 궁극의 무기인 원자탄까지 투발됨으로써 군사적 폭력행사의 무한계성 법칙이 입증된 대량섬멸전쟁의 표본으로서 3,500만명(비전투원 1,500만명)이 사망하고, 5,500만명이 부

8) 藤井治夫, 戦争と國際政治の現状, 最新戦争論, Gakken, 1991, P.120.

9) 三好康之, 世界に狂っている 國防論, 經草書房, 1982, P.4.

10) 足立純夫, 戦争と國際法の現状 最新戦争論, Gakken, 1991, P.126.

11) 大澤正道(1996), P.221.

상당하고, 300만명이 행방불명됨으로써 제1차 대전시보다 4배 이상이나 되는 큰 손실을 강요당하였다.¹²⁾

제2차 대전이후 아시아에서 치러진 양대전쟁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었는데, 이는 전쟁의 수단과 지역을 한정된 제한전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은 재래형 전쟁으로서 적을 섬멸하기 위한 피아의 무차별 전쟁관에 의한 결전사상이 전장을 지배했으며,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무승부를 기록한 전쟁이기도 했다.

한편 베트남전쟁 역시 제한전쟁이고, 특히 재래형 정규전쟁과 비재래형 유격전이 혼합된 전쟁이었음에도 한국전쟁과 같은 맥락의 무차별적 전쟁관이 지배한 전쟁으로서 미군의 사상 초유 패전으로 기록된 굴욕적인 전쟁이기도 했다.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미국의 남북전쟁이후 양차 세계대전은 전쟁규모의 대형화와 무기체계의 고도화 그리고 전쟁지역의 광역화에 따라 단순한 무력전쟁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심리 등 국가의 전 역량이 총동원 투입되는 총력전쟁(total war)이었던 바, 전후방이나 전투·비전투원의 구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용국력의 전 요소가 전쟁에 투입됨으로써 전쟁참여와 피해대상도 민간부문까지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상 최악의 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중 비전투원의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절반을 넘어섰던 것은 유대인에 대한 대량학살 400~500만명, 연합국의 전략폭격 및 원폭투하로 인한 사망 150만명, 게릴라전, 보복공격, 도망, 강제노동, 강제이동 등의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사망한 민간인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근대 및 현대전쟁을 통해본 비전투원 피해의 급증원인을 알아보기로 한다.

① 나폴레옹전쟁이후 결전중시 및 섬멸전 중심의 무차별 전쟁관이 전략사상을 주도해옴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무기의 파괴·살상력 증대에 가세하여 양차 세계대전을 통한 총력전사상의 발취로 전투요원과 비전투요원의 구분이 애매해지고, 무조건 항복에 대한 철저항전이 대두됨과 동시에 초토전과 게릴라전 등에 비정규전 요원이 전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② 특히 제2차 대전후 전략사상에 이데올로기적 속성이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침략군은 점령한 토지에 스스로의 이데올로기를 심어놓으려 하고, 구질서를 제거하면서 신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철두철미한 대민지배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실현되면 세계평화가 온다는 신화에 매료되어 쌍방이 철저한 굴복과 저항의지 말살을 추구한 나머지 대민피해가 더욱 커진 것이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특히 베트남전쟁은 크라우제비츠의 섬멸전사상과 같은 맥락인 미군의 대량파괴 및 철저 섬멸의지와 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및 북베트남 군의 결사항쟁 의지가 충돌한 결과 200만명이란 베트남 비전투원의 엄청난 피해를 초래케 되었던 것이다.

③ 제2차대전 이후의 국지제한전쟁에서 대민피해가 많았던 것은 대부분의 전쟁이 초강대국에 의한 대리전쟁 양상으로 치러졌으며, 전장이 그들의 최신무기 시험장으로 화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은 물론 4차에 걸친 중동전쟁을 비롯하여 아프가니스탄 내전과 이란·이라크전쟁, 걸프전쟁 등 모두가 냉전기간중 핵의 사각지대에서 행하여진 열전이었으며, 강대국의 대리전쟁 형식으로 군수산업의 무차별적 실리 추구를 위한 고도화된 신행무기의 전투적용 내지 시험장소로서 또는 판매시장 개척을 겨냥한 결전이 전개됨으로써 국지 제한전쟁이지만 엄청난 대민피해가 수반되었던 것이다.

특히 전쟁지도를 위한 지휘, 통제, 통신시설이 위치한 도시가 최신무기가 겨냥하는 전략표적으로 선택됨으로써 군사·비군사적 표적의 무차별 공격으로 인한 대량소모전 양상은 일반주민의 희생을 불가피하게 했던 것이다.

④ 일부 군인은 전장에서 심리적 질병인 전쟁신경증에 걸리게 된다고 한다. 이는 전쟁의 공포와 불안에 의한 신경쇠약증과 강박관념 그리고 히스테리적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양심과 이성보다는 감정이나 본능적 욕망에 의해 순간적으로 착오나 우행을 범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장에서 말단 병사에 의한 약탈이나 잔학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또한 목숨을 건 사투를 강요하고 명령에 절대 순복토록 길들이기 위해 생사여탈권을 쥔 지휘관은 군율 위반자를 엄하게 다스리고 때로는 직결처분권까지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1차 집단적 전우애를 통한 전투력과 군사조직의 결집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투군기 위반을 묵인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임무수행에 기여하려는 지휘관의 융통성과 자유재량권에 따라 변칙적 리더십이 예

12) 大澤正道(1996), P.208.

외적으로 발휘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부하의 전쟁신경증상을 완화시키고 지휘관과 부하간의 임
기용변적인 복종, 신뢰, 존경 및 협력관계를 증진하는데 일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¹³⁾

다른 한편 이러한 사태가 불가항력적으로 대민피해를 은폐 조장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음이 사실
이다.

2. 베트남전쟁의 성격과 특수성

(1) 베트남전쟁의 성격이해

현대전쟁으로서의 베트남전쟁은 1961년이래 미국이 이면 개입한 특수전쟁에서 비롯되어 1965년 직접적인
전투부대 투입으로 확전됨으로써 미국화 된 전쟁을 거쳐 1968년이후의 월남화 된 전쟁에 이어 1973년 1월
파리평화협정에 의한 휴전시까지 장장 12년이나 계속되었다.

이 전쟁은 이하와 같은 엄청난 결과의 통계수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미국의 유일한 굴욕적 패전으로 기록
되었다.¹⁴⁾

- ① 미국이 투입한 전비의 총액 : 1,600억달러
- ② 미군 전사자의 총수 : 5만 8천여명
- ③ 미군 전상자의 총수 : 36만여명
- ④ 귀국후 정신이상자 : 70만명
- ⑤ 귀국후 고엽제 후유증 환자 : 8만명
- ⑥ 남베트남 정부군의 전사자 총수 : 13만 6천여명
- ⑦ 남베트남 정부군의 전사자 총수 : 60여만명
- ⑧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전사자총수 : 70만여명
- ⑨ 베트남 민간인 사망자(추정) : 200여만명
- ⑩ 베트남 난민총수(추정) : 600여만명
- ⑪ 미국이 투입한 연병력총수 : 약 300만명
- ⑫ 전황절정시 남베트남에 주둔한 미군병력수 : 55만여명
- ⑬ 미국이 파송한 해군함정 연척수 : 450여척
- ⑭ 미국이 투입한 항공기 연대수 : 1만 2천여대
- ⑮ 미국이 파병한 해병대 총병력수 : 12만여명(⑫에 포함)
- ⑯ 미해군 공군이 베트남 전역에 투하한 폭탄 및 총포탄 총량 : 1,600만톤
- ⑰ 고엽제작전에 의한 미공피해 : 17만 2천톤

이상과 같은 엄청난 결과를 빚은 베트남전쟁의 성격 규정은 그 시각과 접근방법에 따라 상이한 복합성과
함축성 그리고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군사평론가인 고야마이쨌(小山内宏)씨는 그의 저서 「군사학 입문」에서 베트남전쟁을 다음과 같

13) Charles C. Moskos, Jr., The American Combat Soldier in Vietnam, American
Defense Policy,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77, P.488.

1차 집단의 유대는 전투간 생사를 가름하는 위급시에 병사들의 실용적이고 상황적인 대응으
로 이해되는 반신비주의적인 전우애로 발현되며, 전투상황은 추악하고 잔인하게 전개되기 마련
이다.

14) 小山内宏, 軍事學 入門, PP.6~8.

일본의 전후 세계군사자료(1970~1973)에 의하면 휴전직전의 미국방성 통계가 다음과 같이 제
시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 ① 미군 전사자 : 45,933명
- ② 미군 사고 사망자 : 10,298명
- ③ 미군 행방불명자 : 1,340명
- ④ 미군 항공기(헬리콥터 포함) 손실 : 8,556대
- ⑤ 미군전비 : 1,500억달러
- ⑥ 남베트남 전사자 : 158,300명이상
- ⑦ 남베트남 전상자 : 434,400명이상
- ⑧ 북베트남(베트콩 포함) 전사자 : 976,700명이상
- ⑨ 북베트남 포로 : 30,800명이상

이 평가하고 있다. 내용인즉 베트남전쟁을 미군이 전술적으로 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승리
하지도 못한다 초점을 맞춰 베트남의 판정승으로 결론짓고,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의미를 베트남전쟁에 부여
하고 있다.

① 철(鐵)과 흙(土)의 싸움, 기계와 인간영지(人間英知)의 싸움, 그리고 프로군대집단의 침략전쟁과 아마추
어 준군사 집단에 의한 인민전쟁의 대결이었다.

② 미국은 선진문명국가로서 최신행 무기와 군사조직을 대량 투입하였으나 후진 농촌지역의 대자연에서
뒤틀림 받는 원시적이고 빈약한 무장세력의 저항의지를 압살할 수 없었다.

③ 미군은 대자연의 방해와 밀림의 장애조건을 제거하려고 소이작전과 고엽작전 그리고 전략폭격을 무차
별적으로 강행했으나, 흙과 밀림의 방순물을 제거하고, 민족해방전선의 저항거점을 초토화시킬 수 없었다.

④ 민족해방전선은 인민전쟁이 발휘한 강인한 인간 에너지와 신출귀몰하는 유격전의 지혜로 미군의 잔인
하고 거대한 물량공세에 대항하여 상대적인 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악조건을 극복하여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

이와는 다른 시각에서 제프레이 레코드(Jeffrey Record)는 「베트남전쟁의 회고」(Vietnam in Retrospect
; Could we have won?)란 논문에서 베트남전쟁은 1973년에 끝났지만, 미국내에서 국론이 분열될 정도로 베
트남전쟁에 대한 논쟁은 치열하게 전개되어 제2의 남북전쟁(Civil War)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시비가 엇갈리
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하와 같은 7가지의 질문을 제기한 바 있다.¹⁵⁾

① 베트남전쟁은 고상하고 명분이 있는 전쟁이나, 범죄행위나, 아니면 단순히 기념될만한 전략적 시행착오
의 전쟁이나?

② 58,000명의 미군전사자는 헛되게 목숨을 잃지 않았는가?

③ 분쟁의 원인과 성격은 규명되었는가?

④ 미국의 개입은 정당화되었는가?

⑤ 베트남전쟁을 처음부터 미국화 할 필요가 있었는가?

⑥ 미군의 패전요인은 무엇인가?

⑦ 미군은 실제로 전쟁에 패했는가?

이 같은 물음은 베트남참전 세대들에게는 매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며, 베트남전쟁의 성격을 규정하
기 전에는 한마디로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아무튼 베트남전쟁의 성격(vietnam war's character)은 제한전쟁(limited war), 총력전쟁(total war), 내전
(civil war), 국제전쟁(international war), 정규전쟁(conventional war) 그리고 비정규전쟁(unconventional
war)의 6가지로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제한전쟁의 차원

현대전쟁은 전장의 확대와 무기체계의 고도화 그리고 참가세력의 대규모화에 따라 대량소모와 무한계적
파괴 및 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 전략적 입장에서 볼 때,
베트남전쟁은 그 전장이 남·북 베트남으로 국한되었고, 미군의 군사력은 전체의 50~60%가량 투입된데 불
과했으며, 비록 8~12년간이나 전쟁을 계속했지만, 전쟁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북폭개시, 북폭중단, 휴전회담,
철군 등 일련의 무력행사에 있어서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했을 뿐만 아니라, 확산방지를 위한 정치적 노
력을 도모하였던 것이다.¹⁶⁾

그래서 전형적인 제한전쟁인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베트남전쟁을 「정글에서 싸운 한국전쟁」(Korean war
with jungle)이라 부르기도 한다.

② 총력전쟁의 차원

총력전쟁은 국가의 군사적·비군사적 총역량이 투입되는 전쟁으로서 전쟁참가 세력이나 전쟁피해 대상이
국가 전 영역에 미치는 전쟁이다.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국가총력전쟁으로서 국토가 초토화되고, 엄청
난 국가자원이 소진됨과 동시에 다수 국민의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총력전쟁이었다.

③ 내전의 차원

베트남의 경우 남·북베트남이 북위 17도선을 중심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는 남베트
남내에 표범의 얼룩처럼 세력이 분포된 민족해방전선(베트콩)은 미군과 한국군의 지원을 받는 남베트남 정

15) Jeffery Record, Vietnam in Retrospect : Could we have won? Parameter, Winter 1996~1997,
P.51.

16) John M. Collins, 大戰略論, 안보총서 # 13, 국방대학원역, P.458.

부군과 항쟁하여 시소계임을 벌이다가 1967년초의 구정공세(Tet Offensive)이후부터 공세의 주도권을 확보하였다.¹⁷⁾

민족해방전선은 북베트남 군과 합세하여 남베트남 군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1973년의 파리평화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성공했다. 이어서 행하여진 주월미군과 한국군의 철수 2년만에 이들은 북베트남 군과 합세하여 남베트남 정부를 함락 붕괴시키고, 공산정권을 수립한 일련의 과정은 외세의 개입 속에서도 동족간의 내전성격을 띤 전쟁이었던 것이다.

④ 국제전쟁의 차원

한국전쟁이 남북한간의 전쟁이었지만, 미·소 초강대국의 대리전쟁적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한국을 지원했던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전투부대 파송국가와 스위스 등 5개국의 비전투부대 지원국가를 합쳐 모두 21개국이 참전하였으며, 북한측도 소련과 중국이 공공연히 또는 암암리에 참전했던 것을 전제한다면 25개국이 한반도에서 싸웠던 국제전쟁이었던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베트남전쟁 역시 전투부대의 주력을 이룬 미국과 한국을 위시하여 필리핀, 태국, 대만,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6개국의 전투부대, 특수전부대 또는 비전투부대가 참가했으며, 일본과 서독은 병원선을 파견했으니 남베트남을 지원한 국가는 8개국이고, 북베트남과 민족해방전선에게 군수지원을 제공한 중국과 소련을 합하면, 베트남전쟁 역시 남·북베트남과 10개 외국의 군대가 참전내지 지원한 국제전쟁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⁸⁾

⑤ 정규전쟁의 차원

미국은 베트남전쟁 개입시에 남베트남의 재래형 군사력을 증강시켜 민족해방전선에 이어 북베트남 정규군과 전투를 행하도록 정책을 폈던 바,¹⁹⁾ 8년 전쟁기간중(전투부대 투입이후만 산정) 초기의 미국화전쟁기간(1965~1968년)에는 주로 탐색 및 섬멸(search and destroy)작전으로 대응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후기인 월남화전쟁기간(1968~1972년)에는 베트남의 평정(pacification)을 전제로 한 비정규전쟁 개념으로서 대분란작전(counter-insurgency operation)을 병행 실시했으나, 역시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미국의 개입종식기(1972~1975년)에 베트남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²⁰⁾ 아무튼 베트남전쟁은 미국이 정규전쟁 주도로 주로 비정규전부대와 대항하여 치른 특수전쟁이었다.

⑥ 비정규전쟁의 차원

전투부대 개입과 동시에 시작된 초기의 베트남전쟁 미국화정책은 정규전쟁을 전제한 대응이었다. 그러나 이는 베트남의 역사와 지리 그리고 문화에 적응치 못한 나머지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1968년을 기하여 비정규전쟁으로서 인민전쟁이며 혁명전쟁인 유격전법에 부응코자 「일면협상·일면전투(negotiate and fight)」란 방향으로 베트남전쟁의 베트남화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적 섬멸작전에 병행한 베트남 주민 복중화를 전제한 대분란작전에 의한 평정계획인데 베트남 주민의 절대 다수가 민족해방전선 동조세력 혹은 가담·지지세력이었던 바, 이 역시 미군의 현대군사력이 지닌 한계성을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작전의 전개과정에서도 미군의 피해와 상응한 베트남 민간인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수반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1965~1968년까지의 기간중 행하여진 호志明 통로에 대한 무제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북베트남의 민족해방전선에 대한 인민전쟁 방식에 의한 보급지원을 근원적으로 단절할 수는 없었다.

다른 한편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전쟁의 휴전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함으로써,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바 있는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는 그의 저서 「외교」(Diplomacy, 1994)에서 다음과 같이 숭회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7) 友田錫, 裏切られたベトナム革命, 中央言論社, 1986, PP.314~316.

18) 김행복의 3명 공편, 20세기 지구촌전쟁, 병학사, 1996, P.322.

각 동맹군의 최고 전성기 규모는 다음과 같다.

한국 : 5만명(2개 보병사단, 1개 해병여단, 지원부대)

오스트레일리아 : 7,600명(1개 보병연대, 1개 기갑연대, 1척의 미사일 구축함)

태국 : 1,570명(1개 보병연대)

뉴질랜드 : 550명

필리핀 : 206명

19) Henry J. Kenny, The American Role in Vietnam and East Asia, Preager, 1984, PP.3 2~36.

20) John R. Cerami, Presidential Decision Making and Vietnam : Lesson for Strategists, Parameter, Winter 1996~1997. P.67.

「전쟁이 끝난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베트남전쟁에 대한 미국의 공론은 객관적인 조망에 도달하지 못하고, 베트남 참전 경험에서 교훈을 얻으려는 것보다는 참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려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케네디 및 존슨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을 담당했던 군윈(Richard Goodwin)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한 바 있다.²¹⁾

「역사는 수수께끼 같은 교사이며, 야바위꾼으로서 그 유일한 교훈은 미래가 과거에 의존할 수 없고 항상 진실로 규명된 바가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허위로 둔갑할 수 있다.」

그러나 파머(Dave Palmer) 예비역 장군은 베트남 참전자로서 교훈을 얻고, 판단에 도움을 받으며, 미래의 착오를 피하기 위해 역사를 공부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는 베트남에서 많은 옳은 일을 했고, 또 잘못도 저질렀다. 이들 교훈은 결코 상실되어서는 안된다. 잘못은 등한시하지 말고 또 반복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²²⁾

그리고 베트남 전쟁을 계획하고 집행했던 주역인 맥나마라(Robert McNamara) 당시 미국방장관은 남베트남 붕괴20주년을 맞으면서 1996년에 발간한 회고록 「베트남전쟁의 비극과 교훈」에서 「베트남전쟁은 잘못된 전쟁이었다. 몹서리치게 잘못된 전쟁이었다」(Vietnam war was wrong, terribly wrong)라고 전제하고, 베트남전쟁이 방향 잃은 목표 없는 제한전쟁으로 끝났다고 스스로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그는 베트남전쟁은 「해법이 없는 문제」의 전쟁이었다고 강조하면서, 베트남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던 이유 5가지와 잘못된 4가지 계명의 교훈을 다음과 같이 허심탄회하게 적시하고 있다.²³⁾

● 승리하지 못한 이유

- ① 동남아 전체를 공산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명분
- ② 미군이 남베트남의 국경선을 벗어나면 안된다는 원칙
- ③ 남베트남이 정치적 안정을 성취하고, 미국의 보호와 원조아래 자위역량을 갖출 것이란 기대
- ④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핵의 선제공격을 할 수 없다는 대전제
- ⑤ 적군은 장기적인 미완성전쟁(long inconclusive war)에서 이긴다는 가정하에 싸워온 것을 간파하지 못한 오산

● 잘못된 4가지 계명의 교훈

- ① 전쟁의 성격을 오관하지 말라.
- ② 민족주의 세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 ③ 외부 군사력의 성취 가능성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 ④ 미국의 안보가 직접 위협받지 않는 한 일방적인 군사개입은 피하라.

이상과 같은 많은 논자들의 베트남전쟁의 특이한 성격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주·객관적인 재조명 및 재평가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이 베트남전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을 주도한 또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미국 스스로가 한국전쟁은 무승부의 전쟁이었으나 피의 대가와 보람을 느낀 전쟁이었지만, 베트남전쟁은 미국이 패한 전쟁으로서 아무런 반대급부를 찾지 못하는 전쟁으로서 「no more Vietnam again」이란 참전자의 메아리 없는 구호밖에 없다는 것이다.

1982년 11월에야 정부가 아닌 참전단체의 모금으로 건립된 베트남참전 기념비의 제막식에 레이건 대통령이 참석을 거부할 정도로 베트남전쟁에 대한 후유증이 심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베트남전쟁의 시행착오를 솔직히 시인하고, 베트남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그 대책과 처방을 철저히 강구함으로써 걸프전쟁에서 대응을 거두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 3월에 미국의 갤럽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참전한 역사적인 대규모전쟁 7가지를 들어 과연 「정의의 전쟁이나」란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의 통계가 보이듯이, 미국이 베트남전쟁이후 국가 실리추구와 고립주의 외교정책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베트남전쟁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입장정리와 탈냉전시대의 신세계 질서형성과 관련한 집단안보 및 협조적 안보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안

21) W. W. Rostow, The Case for the Vietnam War, Parameter, Winter 1996~1997, P.39.

22) Dave R. Palmer, Summons of the Triumpher : U.S.-Vietnam in Perspective(Novato, Calif. : Precido Press 1978), P.268.

23) W. W. Rostow(1996~1997), P.40.

보전력의 방향모색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 ① 제2차대전 : 89%
- ② 제1차대전 : 76%
- ③ 독립전쟁 : 75%
- ④ 남북전쟁 : 70%
- ⑤ 한국전쟁 : 49%
- ⑥ 베트남전쟁 : 25%
- ⑦ 걸프전쟁 : 74%

(2) 베트남전쟁의 특수성 인식

그러면 전항과 같은 맥락에서 베트남전쟁의 특수성을 재조명 해보기로 한다. 베트남전쟁은 세계 지도상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버린 남베트남, 민족독립을 되찾으려고 10여년이상 인민해방전쟁을 벌이며 결사항쟁 했지만 결국 북베트남에 의해 공산화되는 비운을 맞고 거세 축출당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남베트남을 붕괴시키고 베트남의 공산화 통일을 무력으로 성취한 북베트남, 동남아의 공산화와 전세계의 도미노 현상에 의한 공산화를 막는다는 대의명분으로 세계경찰 역할을 하려고 10년이상 거대한 물량공세를 하고도 엄청난 피해만 입고 패전을 당한 미국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한 자위역량을 갖추지 못한 빈곤한 약소국가의 처지에서 국가생존과 이익을 도모코자 불가피한 선택의 파병을 강요당한 한국의 입장은 서로 다르며, 베트남전쟁을 보는 시각 역시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냉전시대의 그 당시와 현재는 국제 및 국가안보환경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냉전이 종식되지 못한 상황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잔존한 채, 6·15선언이란 평화통일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했지만, 통일의 전망은 아직 흐리고 안팎으로부터 국가안보위협이 실존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며 객관성 있는 논의가 전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소아병적이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사고나 시대착오적인 왜곡된 논리 또는 부화뇌동한 국부적인 민중심리에 영합한 궤변 그리고 국익과 공익에 반하는 기회주의적 발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려고 해서도 안될 것이다. 또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참전·체협세대와 미체협 신세대간의 인식 갭도 극복되어야 할 난제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방향으로 초점(focus)과 소재(locus)를 모아 베트남전쟁의 특수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베트남전쟁은 대량파괴 및 대규모 피해가 수반되는 전형적인 현대전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흔히 베트남전쟁을 동남아시아의 국지적 게릴라전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입장에 불과하며, 전쟁을 주도한 미국의 견지에서는 비록 제한전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한국전쟁에 버금가는 거대한 물량공세에 의한 피아간의 대규모 피해를 안겨준 현대전쟁이었다.

비록 샌들을 신고 조잡한 구식 개인무기로 장비한 전근대적인 민족해방전선이란 적대세력이었지만,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해병대가 베트남반도의 17도선 부근에서 악전고투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피를 흘렸던 것이다. 이들과 나란히 인접부대로 싸웠던 한국 해병대도 마찬가지였다.

현대전은 초현대화 된 무기체계에 의한 제한된 전장에 대한 대량파괴와 인명살상의 초래가 특징의 하나이다. 특히 베트남전쟁에서는 「무기화전쟁」이 실현되었는데, 무기의 개발·실험과 그 효율적 실용화가 전장에서 진전되었다. 이는 신무기의 실전시험이란 차원에서 실험, 개량, 재실험, 실용화 및 재개량으로 순환되면서 무차별적 전쟁관에 의한 섬멸전쟁으로 그 성격을 드러냈던 것이다.

예를 들면 1968년에 실험된 유도형 폭탄이 충분한 양산과 체계화를 위해 스마트 폭탄으로 개량되어 1972년의 북폭재개시 대량투하되어 북베트남을 황폐화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전쟁은 항공전력을 본격적으로 활용한 대규모 공군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 제2차 세계대전시 투하한 폭탄의 총량은 베트남전쟁의 그것에 비하면 1/3정도에 불과했던 것이다.²⁴⁾

B-52전폭기를 주축으로 한 미공군기에 의한 전략폭격은 「감정없는 전쟁」으로 표현될 정도로 냉혈적이고 무자비한 초도화작전의 표본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네이팜탄에 의한 소이작전과 고엽제 투하에 의한 화학전도 병행되어, 공군전쟁은 집단 대학살(genocide), 환경파괴(ecocide) 그리고 생물파괴(biocide)란 비판을 면치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한마디로 미군의 전쟁개념이 베트남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요인이 되는 정규전쟁으로 시종 치러졌으며, 절대적으로 우세한 유형전력으로 상대방을 섬멸하고 전의를 말살하려는 무차별적 전쟁관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태평양전쟁에서나 한국전쟁에서도 또한 최근의 걸프전쟁에서도 근본적 전략사상과 전투행동은 유질동형의 맥락이었다고 본다.

따라서 대량파괴와 대량소모의 현대전쟁이란 차원에서 베트남전쟁의 특수성을 본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군사적 피해에 부수되는 비군사적 피해가 초래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제2차 대전후 유연현상이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유엔안보이사회의 권능을 부여했지만 아직도 배타적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임이사국의 횡포로 말미암아 침략국의 무한계적 폭력행사를 제도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전쟁은 필요악이었지만, 그 피해는 숙명적인 전쟁의 반대급부로 수용되지 않을 수 없는 약육강식의 국제사회 권력정치가 빛고 있는 모순현실의 한 단면이다.

② 베트남전쟁은 모순단착이 빛고 불결한 전쟁(dirty war)이었다.

전쟁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이나 다름없다. 전쟁 없이는 평화가 성취될 수 없고, 전쟁의 도구인 군사력 없이는 전쟁이 예방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모순과 갈등의 무장평화(armed peace)시대가 존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핵시대 도래이후 인류공멸을 피하고자 억제전략적 전쟁관이 대두하였으나, 유엔상임이사국인 5대강국 스스로가 핵의 피라미드 구조의 상층구조를 독점 향유하고 있어 핵군축은 물론 핵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모순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베트남전쟁에서 미군의 주적은 민족해방전선으로서 이들은 구정공세 때를 기준한다면 3,000명 단위의 정규군 4개 사단과 준군사부대인 유격대원 약 40만명이 인민전쟁 방식으로 베트남 정부군, 주월미군 및 주월한국군에게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전천후 공세를 폈던 것이다.

인민전쟁전략은 모택동이나 보 구엔 지압의 유격전을 금과옥조로 하는 바,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유격대와 민중관계를 물과 고기로 보는 군사이론이다.

민간의 지지, 협력, 동조, 동참 없이는 이들의 전쟁수행 능력과 의지가 지속 발휘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들은 시공간적 여건과 상황에 걸맞게 변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적응 능력을 갖고 있어 이질적인 속성의 미군이나 한국군으로서는 그 정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군인 우군과 이들 민간인과 혼성된 적대세력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상호 격리·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없다. 이러한 피아 식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초래되는 불의의 저격과 기습 그리고 매복에 의한 미군과 한국군의 피해에 대한 대응으로 특정표적에 대한 대량 집중공격 및 제압·무력화가 행사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단위부대의 자위와 임무수행 그리고 보복응징이란 차원에서 자동적으로 행하여지는 군사력의 작용·반작용원칙에 의한 연쇄적 반응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상군의 공격과 항공폭격 또는 함포사격에 의한 부수적 대민피해는 표적정보의 부정확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일단 선택된 표적의 탈취나 점령을 위해 지상군은 화력과 기동력 그리고 충격행동으로 탐색과 소탕작전을 전개하고 해·공군에게 군사표적의 무력화 내지 군사잠재력으로서의 지원시설의 파괴 또는 전투의지의 말살을 위한 원방 접근로 차단 임무가 부여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서 불가피하게 대민피해가 수반됨은 명약관화하다. 이것이 전쟁이 지닌 모순과 부조리이다.

그런데 1968년 3월 16일 미육군 제11보병사단 제20여단 제1대대 C중대의 소대장 게리(William Galley)중위가 이끈 1개 소대가 마이라이(Mylai) 촌락을 포위하여 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약 504명의 비무장한 민간인이 살해된 것이 국제인권단체의 현장조사에 의해 확인됨으로써 그 소대장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은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²⁵⁾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모순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하나는 게리중위가 단지 상부의 작전명령에 따라 주어진 표적을 점령 확보하기 위해 탐색 및 소탕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는 적아불명 상황하의 정당방위이며 충실한 임무수행이었다는 주장을 무엇으로 반박할 것인가?

두 번째는 무자비한 미공군의 항공폭격과 미해군의 함포사격으로 수만명의 베트남 민간인이 살상되었음이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지 않고, 가장 허약한 지상군의 말단 소대장을 「더러운 전쟁」의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베트남전쟁 기간중 발생한 200만여명이나 되는 민간인 사망자의 사인을 일일이 다 규명하고, 그 책임소재를 추궁하려 한다면, 집권적 중앙통제장치가 없는 국제법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 현실의

24) 小山内宏, 軍事學 入門, 朝文社 PP.13~16.

25) Newsweek, April 10, 2000, P.18.

모순부터 먼저 타파해야 할 것이니, 스스로 모순당작에 빠지고 만다.

이는 베트남전쟁에 잘못 개입한 미국의 정책결정부터 따져야 하고, 사닥다리의 군사조직과 집권통제 및 분권 집행을 원칙으로 하는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군사교리상의 의사결정과 지휘 및 참모활동 절차를 바꿔야 하는 또 다른 모순의 악순환을 이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전쟁은 결코 성전이나 정의의 전쟁이라고 볼 수 없는 불결한 전쟁이란 것을 전제한다면, 참전한 미군이나 한국군 전체를 전쟁범죄자로 처벌해야 하는 논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더욱이 미국이 국제법에 위배되는 화학무기나 다른 없는 고엽제를 사용한다 대해서도 시비를 가려야 하겠지만, 오늘날 이같은 문제가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부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힘의 우위에 의한 강대국의 횡포가 국제사회의 구조적 부조리로 수용되고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③ 베트남전쟁에 임한 군인은 전략적 차원의 전쟁보다는 전투작전 준칙을 적용한 작전적·전술적 차원의 임무수행에 치중하였다.

주월한국군은 주월미군의 전시작전 통제하에 있는 국내의 한·미연합군 조직과는 달리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하였으며, 대통령의 군정·군령권이 국방장관을 통하여 직접 행사될 수 있는 자주적인 군사지휘계선 상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주월한국군은 주월미군과 대등한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동격의 작전 및 행정권을 행사하였으나, 현대전 수행에 필요한 고도화된 무기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항공지원, 함포지원, 원거리수송, 긴요 군수지원 등을 주월미군이 제공하도록 상호지원과 협조가 이뤄졌던 것이다. 일부 몰상식한 논자가 한국군을 용병이라고 오도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용병은 부대가 아닌 개인이 상하 주종관계의 지휘계선 속에 포함되어 작전과 행정지휘는 물론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감독 받는 노예와 같은 종속적인 신분을 뜻하는 것이다.

한편 지역적으로 북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정통부대는 미해병대 제3원정군에 인접 주둔하였기 때문에 미해병대의 작전지도(operational guidance)를 받았지만, 이는 작전통제나 지휘가 아닌 전투작전 지원 및 조인을 받은 것이었다.

실상가상으로 이들은 용병이라고 쓴 문서는 없지만 체명신 장군이 구두로 사실상 미군의 작전지휘를 받도록 동의했고, 이를 전제로 전투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주월한국군의 모든 경비가 미군에 의해서 지출되었다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정당화시키려 한다.

예외적인 상륙작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월한국군의 주요 전투작전은 중대전술기지 단위의 자체방어와 진지의곽 목표에 대한 공격작전인 탐색 및 소탕작전이었다. 일반적으로 전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투력의 역동성(dynamic of combat power)을 좌우하는 요소는 화력, 기동력, 방호력 그리고 리더십이다.²⁶⁾ 특히 공격작전에 있어서는 공격부대가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목표지역과 그 접근로에 대한 사전의 공격준비 지원폭격이나 포격이 행하여져 목표를 무력화시키고 이동통로를 개척한 다음 자체의 화력과 기동력을 결합하여 전진하되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목표에 접근한 다음, 최후적으로 돌격이란 공세적 근접전투로 적을 포착 섬멸하고 지면을 확보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베트남전쟁에서 중대전술기지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당연한 자위책이지만, 표범의 얼룩같이 전국에 분산된 거점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해방전선을 공격 소탕하여 남베트남 지배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주월한국군의 맡은 바 작전임무였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화력과 기동수단을 미군으로부터 지원 받았던 것이다.

특히 선정된 표적에 대한 화력지원은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주간보다 야간에 기습적으로 가해진다. 이때 군사표적과 비군사표적의 선별은 거의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민족해방전선부대의 집결지는 민간부락에 기지를 두고있어 민간촌락이 표적이 될 때가 많다. 목표탈취 및 점령을 위한 최후과정으로 지상군이 저항세력과 잔적을 소탕하고 정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공격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적의 저격이나 대인지뢰 폭발시의 즉각 대응 및 반격, 우군 피해자의 가료 및 후송을 위한 헬리콥터의 비행안전을 도모키 위한 의심스러운 표적에 대한 제압사격이 불가피한 바, 이때 민간인에 대한 오폭이나 오인사격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 가능하다.

베트남전쟁의 전기간을 통해본 미군의 전사자가 5만 8천여명이고, 부상자가 36만여명인데 반하여, 그 10% 정도의 병력을 유지한 주월 한국군은 전사자가 4천여명이고, 부상자가 1만여명이었던 것을 비교한다면 한국군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6) FM 100-5, Operation Hgs, Department of the Army, 1986, PP.11~12.

한국군은 전투작전 수행에 있어서 미군이 향유할 수 없는 몇가지 이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같은 동양인으로서 같은 한문문화권내지 미곡문화권의 유산을 가진 베트남인과의 동질성 때문에 의사소통과 감정교류가 전투중에도 민족해방전선 및 남베트남 정부군과 한국군 사이에 이뤄질 수 있었다. 이러한 동류의식은 정보획득과 작전협조에 큰 도움을 주었다.

둘째는 식민지배와 분단국가란 동일운명의 피지배민족이란 피해의식을 역사적 맥락에서 공유 이해함으로써 대민·민사 심리작전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군의 기본적인 임무는 적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작전적·전술적 차원의 전투작전이지 결코 베트남의 독립이나 민족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전쟁개념에 치중할 수는 없었다.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은 단순히 적과는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하고, 주어진 목표는 반드시 점령 확보해야 하는 철칙에 충실해야 하는 바, 전투임무 수행중 적과 목표 속에 혼재하는 비군사적 요소가 선별되고 분리될 수 있는 시공간적 여건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로 민간인으로 위장한 게릴라에 의한 아군의 피해가 속출하는 바, 적과 우군의 완전한 구별에 의한 선택적 대응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베트남주민 자체가 민족주의적 입장에서는 남베트남 정부군과 인민해방전선 또는 북베트남군이 동류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 바 형식적인 적·아관계를 형성하지만, 때로는 미군이나 한국군과 대항하는 상황하에서는 한핏줄로서 팔이 안으로 굽는 현상을 빚는 모순된 전쟁터에서 싸워야 하는 주월 한국군과 미군의 고충과 전장심리는 참전군인이 아니고는 이해·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④ 본질적으로 내전의 속성을 띤 베트남전쟁에서 비대칭적인 적군에 대한 현대화된 군사력의 일방적 투사는 대민피해를 증폭시켰다.

미국 메릴랜드대학 교수인 브잔코(Bob Buzzanco)박사는 베트남전쟁에서 미군이 패한 이유를 다음 4가지로 집약하고 있다.²⁷⁾

첫째, 남베트남 정부군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부족했다.

둘째, 남베트남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극도에 달했다.

셋째, 미군의 대항할 적은 99%가 남베트남인이고 내전 상황하에서 정규전을 전개하였다.

넷째, 미군은 명확한 군사목표가 없이 막연한 승리, 민족자결, 자유신장, 법질서 회복 등 정치목표에 영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마디로 집약한다면, 군사작전 목표는 명확하고 달성 가능해야 할뿐만 아니라 가용자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미군은 그러하지 못한 것이 패전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군이 본격적으로 군사력을 투입하기 전에 고문단 1만여명이 1961년부터 1964년까지 남베트남 군에 파견되어 베트남 정부군의 반테러작전을 지원한 것이 미군의 최초 개입이었고, 통킹만 사태를 계기로 미군의 피해가 격증하자 1965년부터 전투부대의 대량투입으로 베트남전쟁의 미국화에 의한 물량공세가 시작되고, 1968년엔 민족해방전선의 총공격으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자 미국은 개입을 축소하면서 베트남화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고, 전쟁국면이 소강상태로 치달게 되더니, 1973년에 휴전을 맞게 되었다. 휴전을 계기로 미군이 철군해버리자 1975년에는 남베트남 정부가 함락되고 말았다.²⁸⁾

이러한 4단계 과정을 일관해볼 때, 인도지나전쟁에 이어 베트남의 자주독립을 위한 민족주의적 투쟁은 본질적으로 내전이였다. 이는 동족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이며, 이념적 갈등대립에 의한 분쟁이었던 바, 제3의 외세가 개입한다해도 선악과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국제경찰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팽창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미군이 10년 이상에 걸쳐 연병력 300만여명을 투입하여 장기전을 치루었으나,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고, 적과 우군이 불명확하며, 때와 장소에 따라 적·아관계가 뒤바뀌는 상황하에서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목표를 지향하여 정규전과 병행한 비정규전을 수행했으나, 현대전쟁 기술과 기계력을 주체전력으로 한 미국의 군사력이 인민전쟁이란 거대한 인간에너지에게 공전만 거듭한 끝에 결국 승리없는 종말을 맞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대칭적이고 세력 불균형의 조건하에서 치러진 전쟁은 일방의 힘이 타방에게 무절제하게 방출·행사될 수 있다. 그 이유는 투사된 전력의 반응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비용 대 효과 분석은 항상 기

27) Bob Buzzanco, The American Military's Rationale Against the Vietnam War,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101, No.4, Centerial Year 1886~1986, PP.558~574.

28) Guenter Lewy, The American Experience in Vietnam, Combat Effectiveness, SAGE Publications, 1980, P.105.

대치를 밀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자를 심리적으로 자극하여 완두콩을 망치로 깨뜨기식의 과잉대응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는 물론, 회복할 수 없는 생태계의 황폐화와 무자비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게 된다.

단기간에 걸친 정규전의 경우라면 군사적 표적에 대한 결정적·선택적 공격이 가능하지만, 비정규전과 정규전의 혼성 성격을 띤 지구전에서 비군사적 표적을 망라한 잠정적·포괄적 표적까지도 공격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본의 아닌 대민피해가 부수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주월한국군의 경우에도 공격준비를 위한 야포지원이나 항공폭격 및 함포사격 지원 그리고 공격간의 무장 헬리콥터에 의한 근접 엄호사격 지원을 미군으로부터 받았던 바, 그 강도와 치열성은 매우 높았으며, 작전간 발생한 불가피한 대민피해는 작전임무 수행상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난제였다.

미국의 베트남전쟁 개입이 미국의 정책적 오류였다는 비판이 전쟁의 장기화와 더불어 제기되기 시작했으나, 미군의 개입당시 명분이 번복되지는 않았고, 같은 맥락에서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가에 대한 국민의 극단적인 반대여론은 일지 않았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지 30년이 되는 지금 일부 소수집단에 의한 반미사상 고취와 더불어 국군의 양민학살 운운하는 목소리는 전쟁의 본질과 베트남전쟁의 특수성을 모르는 물지각한 소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거나, 파도만 보고 바다를 못 보는 가소로운 근시안적 사고에 젖어 있다.

베트남전쟁의 특수성을 전제할 때, 대민피해는 불가항력적이다. 이것이 결코 상황논리가 아니다. 학살이란 인간사냥이나 의도적·불법적 집단살육 만행을 뜻하는 바, 군사작전의 성격이 적을 포착 섬멸하고 전의를 굴복시키는 것인 바, 적으로 간주되는 생물자원은 물론 적의 전쟁수단으로 가용한 모든 무생물 자원은 전장에서 생존불가 및 사용불능 상태로 파괴·섬멸되어야 승리가 보장된다는 기본개념이 통용된다. 이러한 군의 기본적인 전투작전 임무수행상의 본질과 군사작전 명령계통의 엄정성을 도외시하고, 평화시의 민간사회에서 향유할 수 있는 인권, 자유, 평등 같은 민주주의 이념을 탄우 속에 혈투로 사생결단을 가름하는 전장에서 동일한 잣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베트남참전 결정을 국가정책적 시행착오로 비판한다던가, 참전군인 스스로의 양심선언이나 고뇌에 찬 자아비판의 목소리라든 모르지만, 국가정책 도구로 전장에 투입되어 정당한 명령에 따른 전투작전 임무수행간 불가피하게 발생한 대민피해를 「조직적, 의도적, 계획적 양민학살」로 단정하고, 참전군인 모두를 범죄집단으로 매도함은 언어도단이며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펴고 있는 우리들은 정서나 행동, 사회의식이나 사고체계에 결함이 있는 경계선 환자인지도 모른다.

차라리 그들은 「베트남전쟁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된 대민피해를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식의 건전한 충고와 조언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한국전쟁시의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베트남참전시 양민학살 사실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반군사상과 케번을 내세우는 이들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함께 연계시켜 부르짖고 있는 반민주적이고 야누스적인 작태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지금도 이들은 「1만 5천명의 전사상자와 2만여명의 고엽제 피해자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명피해에 베트남 민간인 학살이라는 명예를 쓰고 미국의 용병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있다」는 악의에 찬 글을 써서 참전전우들을 모함하고 있다.

III. 베트남전쟁의 대민피해 진상

1. 구수정 통신원의 양민학살 주장비판

「한겨레-21」이란 주간지는 1999년 9월 2일자 특집에서 ① 베트남의 원혼을 기억하라, ② 미군보다 잔인했던 용병, ③ 영국, 일본인이 달래준 상처, ④ 저주의 육설, 화해의 숲간, ⑤ 아! 전쟁이란 본시 그런 것 등 토픽으로 악의에 찬 왜곡·과장보도를 내보내어 흑세무민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논계의 글은 구수정이란 한겨레신문의 여자통신원이 현지에서 작성 송고한 글을 사실확인도 없이 그대로 또는 흥미 본위의 읽을거리로 각색하여 내보낸 내용인데 이 글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면에서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명예훼손 대상임을 밝혀둔다.

① 구수정의 글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의 배제원칙」에 저촉되는 글이다.

이른바 학살현장을 목격했거나, 당시에 피해를 입은 생존자로 자처하면서 증거를 제시한 자들이 대부분 민족해방전선(베트콩) 출신들로서 그 당시 한국과 대항하여 싸웠던 적들인 바, 이들은 스스로 저지른 소행을 한국군에게 뒤집어씌워 동족학살의 혐의를 벗어나려는 악의에 찬 거짓증거를 조작 제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이들의 증거제시는 위증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② 구수정의 글은 「신뢰성의 정황적 보장 불성립」의 원칙에도 해당된다.

사건당시의 전투작전에 연관된 상황을 6하원칙에 의거 일목요연하게 설명함이 없이 무조건 현장에 임하였던 한국군이 민간인을 사살하거나 여자를 강간했다는 주장은 장기간의 식민지배에서 억눌린 민족주의적 정서와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베트남 주민들임을 감안하면, 감정에 호소한 시뮬레이션 같은 얘기를 얼마든지 꾸며서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신뢰성과 정확성 그리고 객관성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베트남정부 당국이나 공공기관에서 정식으로 제시한 자료나 항의는 한 건도 없이 피해당사자 중심으로 오도된 감성에 호소한 왜곡된 내용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거로서 정황이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다.

③ 구수정의 글은 「엄격한 증명에 의한 증거 충분성」의 원칙에도 배치된다.

증거는 당사자의 자백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도 뒷받침 되어야 하고, 합리적이고 의심이 없을 정도의 완전하고 엄격한 보편 타당성 있는 증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른바 양민학살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현장검증이나 합동조사결과 부분적으로 한국군에 의해 시인·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인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같은 한정적 피해사례는 베트남 당국과의 충분한 논의와 양해아래 보상이 이뤄졌던 기록이 있다. 국부적이고 부분적인 현상을 전체인양 뒤집어씌우는 것은 엄격한 증거의 충분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이하에서 구수정의 글을 살펴보고 그 허구성을 적시하고자 한다.²⁹⁾

(1) 「베트남의 원혼을 기억하라」

① 「한국군이 처음 마을에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 한국군이 마을에 주둔할 당시 주민들은 마을 밖으로 쫓겨나야 했어. 전쟁이 끝나고 한국군이 마을을 떠나고서야 사람들은 다시 마을에 돌아올 수 있었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야. 불발탄과 지뢰에 부모를 잃고,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은 상실의 고통이 평생을 따라다녔어..... 컷먹이까지 죽이고도 모자라 무덤조차 불도저로 밀어버렸다. 1번 국도를 따라 채반을 들고 갈기갈기 찢겨진 흩어진 살점과 뱀조각을 주우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라고 베트남인이 증언했다는 것이다.

상당히 감상적인 소설 같은 투로 쓴 글이다. 구수정이란 여인이 베트남에서 역사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고는 하지만 토착적인 베트남어까지 구사하여 현지주민을 감동 감화시키는 정서적 언어를 토로할 수 있는 유창한 수준인지는 모르나, 대부분의 표현은 각색된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전장에서 언급했지만, 베트남전쟁 기간중 200만명이란 엄청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들은 내전의 성격을 띤 전쟁의 속성을 전제할 때, 베트남전쟁의 3대주도 민족세력인 베트남민족해방전선(베트콩), 북베트남군 그리고 남베트남군끼리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적우관계의 악순환과 반복과정에서 생긴 피해의 산물일 것이다.

또한 미군의 무자비한 항공폭격과 함포사격으로 그리고 미군과 한국군의 지상작전 수행중에도 민간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의 정확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금 가려내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작위로 제시된 증거는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의 정황을 봐 한국군에 의한 대민피해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화뇌동하는 말단 피해자 유족들의 목소리만 부추겨 모든 피해를 한국군에게 뒤집어씌우고 증폭시켜 생생한 피해의 현장증언이라고 합리화하여 보도함은 「선무당 사람잡는 격」이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우매한 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② 그녀는 아무런 공인된 근거도 없이 민간인의 진술이란 전제하에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학살자가 9천 명이라고 부풀려 가시화하고 있다. 그녀가 제시한 수십매의 학살장면 사진은 무엇으로도 가해자가 한국군이란 것을 입증할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뒷받침 안되는 짜서 맞춘 픽션의 한 장면일 뿐이다.

사진을 설명한 황당무계한 다음 글이 또한 웃긴다. 「오른쪽 허벅지의 총탄자국을 보여주는 쿠암삼성 디엔안사 풍어촌 런남마을의 생존자 쩌티득 할머니, 땅굴에서 기어 나오다 개머리판에 머리를 맞아 정신지체가 된 레티티에 쩌도안, 3살 때 한국군에 의해 불구덩이 속에 산채로 던져졌던 쩌바키, 한국군에 강간당했

29) 한겨레-21 특집, 1999년 9월 2일(choovietnam@hotmail.com).

다는 판피호인 할머니, 학살사건으로 어머니를 잃은 당반쪽 할아버지.....」 등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문구를 써서 독자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저의가 엿보인다.

사실을 입증하려면 당시의 전투상황과 시공간적 조건이 맞아야 한다. 모든 부상자, 모든 피해자는 한국군이 가해자란 전제하에 꾸며서 기술한 그녀의 글은 좌경운동권출신으로서 전적이 말해주듯이 지극히 사상적 배경이 불건전하다고 본다.

③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한국군은 단지 용병일 뿐이었는데, 왜 미군보다 더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제발 다시는 남의 나라 용병으로 가서 사람 죽이는 일하지 마세요」라는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투두둑 쏟고 말았다는 문학소녀 같은 감상적 표현의 장면도 있다. 국가위신을 추락시키고 민족자존을 해치는 이따위 망언을 부추기는 그녀는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한 모양이다.

베트남전쟁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것비린내 나는 것이 이런 엄청난 반국가적·반민족적 망언을 서슴치 않고 보도해도 당국의 제재나 조치가 없으니 참전 전우들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그녀는 현재 베트남참전단체에 의해 피소 당한 채 베트남에 장기체류하고 있다.

④ 「미군보다 잔인했던 용병」

그녀는 용병이란 말을 밥먹듯 하는데, 이는 노예처럼 돈 받고 전장에 총알받이로 팔려간 경우를 뜻한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한국군은 미군의 작전 및 행정지원을 받았지만 작전통제나 행정지휘를 받지 않았으며,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수립 집행했던 것이다.

「한국군은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다치는대로 잡아다가 길 양편에 일렬로 세우고는 총을 쏘았지. 도망가면 쫓아가서 쏘 죽이고....., 「한국군이 한 명 죽거나 다치면 그 다음날엔 줄초상이 났어. 마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 죽였지. 여자들은 강간한 뒤에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쏘 죽이고, 그 사람들은 다 전략촌에 있던 주민들이야 베트남들이 낮에 어떻게 마을에 내려와?」라고 한 생존자가 증언했다고 한다.

베트남참전 군인들은 누구나 알겠지만, 베트남의 전투군기는 매우 엄하여 대원들이 민간인을 마음대로 사냥하듯 죽이고 강간할 정도로 문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장교들이 이런 사태를 방관 방조할 수 없다.

주월한국군사령관을 지낸 채명신 장군과 이세호 장군은 늘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하는 것이 100명의 베트남을 사살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지휘지침으로 하달 강조했으며, 양민을 학살한 대원에 대하여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까지 하였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얘기로서 조잡한 가상 시나리오나 시뮬레이션의 연극을 보는 것 같은 구수정의 한국군 양민학살장면 묘사는 전투경험이 있는 군인이라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앞뒤가 안맞는 각본으로서 고소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설상가상으로 구수정의 글을 금과옥조로 하여 확대 재생산하는 글을 쓰는 일부 식자들 역시 유유상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분명히 조국을 배신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그렇다면 하루 빨리 대한민국을 떠나 북한으로 국적을 옮겨야 할 인물이 아닌가 한다.

⑤ 「영국-일본만이 달래준 상처」

구수정 통신원이 한겨레-21에 보낸 글에는 광아이성 빈호아사에 1996년에 영국인 독지가가 한국군에 의해 학살된 양민 430명의 이름이 새겨진 위령비를 세웠다고 소개한 다음, 1995년에는 일본의 Peace-Boat란 단체에서 이 지역에 2층건물 16개반의 초등학교를 지어주기도 했다고 쓰고 있다. 그런데 이곳 위령비에 새겨진 430명의 사망자 명단은 한국군에게 학살당한 자인지 월남 정부군이나 민족해방전선 또는 미군에게 학살당한 자인지, 아니면 포·폭격에 의한 희생자인지 합당한 절차에 의해 공인된 자료가 아니다.

구수정은 이 명단을 근거로 민간피해자를 부추겨 거짓 또는 과장증언을 하도록 하여 한국군의 학살소행으로 뒤집어씌우기 위해 현지언론과 인민위원회 등을 동원하고 출판까지 벌이면서 증언을 왜곡 유도한 것이다.

영국과 일본의 민간단체가 현지에 위령비와 학교까지 건립한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인도적 사업이지만, 이곳의 위령비에 새겨진 명단이 전쟁당시 적대세력이던 민족해방전선측이 베트남 민간단체에 제시한 바의 학살당한 자라고 한다면, 자기들의 만행을 한국군에게 전가하여 권익도모와 생존전략상 도움을 얻고자 의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언자가 탄 반죽이란 유격대장(67세)이라고 한다. 그는 한국군을 용병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자인 바, 공산주의 골수분자인 그가 과거 한국군에게 가졌던 적대감이나 피해를 생각하여 한풀이나 보복적 차원의 거짓증언을 능히 할 수 있다.

⑥ 「저주의 육설, 화해의 술잔」

「빈단성에서의 학살, 단 한시간만에 380명이 완벽하게 몰살당하다」란 부제로 된 이 글 속에는 구수정이 나이 많은 베트남 주민들과 술잔을 나누면서 한국군의 양민학살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화해의 술파티를 하는 장면까지 나온다.

특히 맹호부대가 작전을 벌인 유명한 승전기록의 「양계전투」에서 대량 양민학살이 자행된 것처럼 써놓고 있는데, 그 제보자가 이 지역의 베트남으로 활약했던 인민위원장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1966년 2월 15일, 새벽 2시에 첫 포성이 울리고 한국군의 작전이 시작되었다..... 한국군이 우리 가족을 논으로 끌고가 얼굴을 땅에 박고 엎드리게 한 다음, 다연발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졌어요」 이날 전개된 전투작전의 과정과 당시 상황설명은 전혀 없고, 단지 한국군이 1,200명을 무조건 죽였다는 것만 부각 강조해놓고 있다.

이 작전에 참가한 당사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에 대하여 다치는대로 곤충을 밟아 죽이듯이 잔인하게 학살할 정도로 황야의 무법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베트남출신의 엉터리 증언을 사실확인이나 근거도 없이 기사화 한 한겨레-21의 보도태도는 상업주의와 인기영합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다시 강조하거나 10여년간의 베트남전쟁 기간중 남베트남 정부군의 전사자가 13만 6천명, 전상자가 60여만명이나 되며, 민족해방전선의 전사자가 70여만명이고, 북베트남군의 전사상자가 80여만이며, 남북베트남 민간인의 사망자가 200여만명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사실인데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왜 죽임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는지를 정확히 규명할 수 없는 동족간의 복합적인 내전상황 하에서 생존자는 지금 누구에게 하소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처지이고 보니 베트남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의 한 여인이 감언이설 하는 물음에 이구동성 한국군을 가해자로 몰아 부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군이 용병이었다는 굴욕적인 명에까지 씌우면서 온갖 악의에 찬 꾀어서 부스럼 만드는 짓을 지금도 그녀가 재채를 부르면서 자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2. 「한겨레 21」의 양민학살보도 비판

(1) 상황논리, 면죄부 안 된다

- 베트남과 양민을 구별할 수 없었다는 논리는 왜 억지에 불과한가 -30-

한국군이 저지른 베트남 양민학살에 대하여 참회와 사죄로 부끄러운 과거사에 용서를 비는 움직임이 우리 사회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노근리 양민학살에 대하여 진정한 뉘우침 없이 또다시 역사를 덮어버리려는 미국의 반역사적인 모습에 울분을 토하던 우리에게 베트남에서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과거사에 진정한 용서를 비는 우리 시민사회의 모습은 한결 자긍스럽다. 노근리의 원한과 고통이 밀바탕이 되어 베트남 학살에 대한 참회라는 숭고한 발돋움으로 진전되기를 바란다.

① 북한군과 민간인도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진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참전군인 일부의 웅졸한 몇몇 역사인식과 논리가 극복되어야 한다. 첫째는 상황논리이다. 곧, 베트남과 양민을 구별할 수 없는 특수상황이었고 여차피 전쟁에서 어느 정도의 양민학살은 불가피했고, 그래서 우리의 과거사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둘째는 '사죄'는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므로 사죄하지 말고 어정쩡한 '화해'를 모색하여 어물어물 넘기자는 인식이다.

첫째의 상황논리는 적군과의 직접적인 교전중 의도하지 않게 양민이 희생되는 경우가 있고 따라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치 과실치사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실치사도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형사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베트남 학살은 과실치사 수준이나 직접적인 교전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수준에서 대거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농사지으러 가는 농부, 노인, 임산부, 스님, 아내와 어린 자식 등 무장을 하지 않은 이들이 대거 학살의 대상이었다.

학살유형은 작전을 나온 한국군이 마을에 들어와 마을 사람들을 불리모아 음식을 나눠줘 안심을 시킨 뒤

30) 강정구, 한겨레-21(2000년 3월 2일), 한겨레신문사, P.21.

강정구, 베트남전쟁과 미국의 전쟁범죄,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파병에 관한 심포지움 자료집, 2000년 10월 13일, PP.57~72.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것이었으며 적과의 교전중에 양민들이 사살된 것이 아니라 작전지구 근처나 교전과는 상관없는 마을이 통제로 학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우 베트남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없이 집단적 처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행위는 상황논리의 불가피성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무차별 살인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 베트남과 양민이 구분되지 않았다는 상황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다. 한국전쟁에서도 북한군과 민간인은 인종적으로 전혀 구분되지 않았다. 민간인 대열에 북한군이 섞여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군이 한국양민을 살상하는 행위를 우리는 상황논리라고 면죄부를 주는가? 노근리학살 등에 우리 자신이 그토록 분노하면서 우리가 저지른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이중 잣대를 들 수 없다. 민간인 대열에 적군이 잠입해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전쟁에서나 있는 일이지 베트남전쟁에만 해당되는 특수 상황은 아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전쟁에서 북한군과 민간인, 남한군과 민간인이 인종적으로 구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미군이나 중국군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이었지만 중국군의 양민학살은 한번도 제기된 적이 없다. 또 스페인내전에 참전한 인민전선 의용군들은 수십종의 인종으로 이루어졌는데도 양민학살은 없었다. 이는 양민학살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상황논리가 경험적으로 반증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들은 자기들이 참전한 전쟁의 성격에 대한 이해와 참전명분을 뚜렷하게 가졌기 때문에 학살을 저지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과월장병은 민족해방전쟁이고 통일전쟁인 베트남전쟁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러한 몰이해는 과월장병을 위문한 바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도 잘 나타난다. "한국 헌병이 비행장 안까지 들어와 앞뒤로 요란스럽게 호위하고..... 경적을 울리며 거리를 질주하면 다른 차들은 운행을 중단하고 기다려야 했다." 베트남 주권을 짓밟는 이러한 한국군 아니 박정희 독재와 세계의 강대국인 미국의 오만은 원천적으로 양민학살을 잉태했던 것 같다. 이 결과 게릴라전쟁인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은 아군 전사 5천여명에 적군사살 약 4만 7천명이라는 무려 10배 가까운 전과를 올리는 이해되지 않는 전쟁기록을 남겼다. 무릇 게릴라 전쟁에서는 게릴라군 보다 정규군의 피해가 높은 것이 보편적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10배가 넘는 한국군의 전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예외적인 전과와 베트남 양민학살이 직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② 어정쩡한 '화해'는 안 된다

일제의 야수적 식민지배에 대하여 '금석의 정'과 같은 어정쩡한 일본의 하해에 분노하여 우리는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이를 발뺌한 일본에 대하여 원초적 적대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어불성실인 상황논리를 들먹이며 어정쩡한 '화해'를 모색하는 것은 제2의 베트남 학살을 저지르는 것과 진배없다. 베트남 학살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역사청산이 있었다면 80년 광주의 학살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미래사에서 제2의 광주를 막기 위해서 또 새로운 21세기 문명사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도 베트남 학살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역사청산이 요구된다.

(2) 베트남 전쟁의 희생자들³¹⁾

베트남전쟁이 끝난지도 30여년이 가까워온다. 그런데 최근 베트남전쟁의 비극을 상징하는 두 건의 고소가 미국에서 제기되었다.

한 건은 DDT사용금지 투쟁을 벌인 바 있는 룽 아일랜드의 한 법률가에 의한 집단소송이었다. 내용인즉 다이옥신 때문에 종신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수천명의 미군병사를 대표하여 기형아출산 등 유전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워싱턴에 있는 아메리칸대학의 전 미귀환병 법률센터에 의한 고소인데, 주황색제에 의한 신체장애를 호소하는 귀환병들을 위한 특별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대정부 청원이었다.

이 두건의 소송압력 때문에 미공군에서는 고엽작전에 참가한 요원 1천 2백명에 대한 후유증을 6년계획으로 철저히 조사하도록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아직도 다이옥신이 남성의 유전자에 염색체 이변을 일으켜 기형아를 낳게 하는가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에 의한 법정심리를 끝내지 못하고 미결상태에 있다고 한다.

미국정부는 LSD의 실험에 참가하여 손해를 입은 병사들에게 1인당 1백만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지불한 전례가 있어 만약 이들 고엽작전에 참가한 수천명이 주황색제에 의해 유전학상의 피해원인이 확정된다면, 법

률상의 최종결정이 어떻게 될지 심히 궁금하다.

일설에 의하면 GB와 VX신경계를 비밀리에 하와이에 있는 월남전 훈련장에서 실험한 바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VX는 남베트남의 다낭과 투이호아 기지에 비축하고 있었는데, 만약 이 두 기지가 점령당하게 되면, 실전에 VX를 사용하려고 계획했다는 것이다. 비엔호아기지는 GB를 저장해 놓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1970년 8월 8일자 스웨덴의 일간지 <디켄스 니에다>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하여 우리를 놀라게 한 바 있다.

「사이공의 주월미군 사령부는 캄보디아 영내의 북베트남군에 대하여 강력한 신경가스를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극비밀리의 실험계획으로서 「폭포계획」(project-waterfall)이란 익명의 작전으로 행하여졌는데, 목표지역에 VX제 1백파운드 들이 상자가 다수 들어있는 컨테이너 2개를 항공투하하자, 사전 투입된 특수부대 요원에 의해 미지의 지역으로 운반되어 성공적인 실험이 끝났다.」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의 고엽제와 폭동진압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승산없이 1970년대를 맞게 되었다. 특히 1969년에 닉슨대통령의 후기정권이 들어서자, 국론이 분열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절정에 달했다.

국내의 반전운동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공할만한 독극물을 전장에 비축 사용하고 있다는 외신보도와 함께, 이에 대한 인도주의적 시비와 군 내부에서 화학무기의 전술적 효과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고조되고 있었다. 요란하게 선전했던 고엽제가 기대했던 바와 같은 전술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시험할 당시처럼 베트남이나 베트남군이 감추어진 거점이 고엽제에 의해 완전 노출되는 일은 없었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는 했으나, 베트남이 지방주민의 지원을 받는 한 그들의 보급추진에 별로 큰 고통을 가증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폭동진압제는 악전고투하던 미군부대를 궁지에서 탈출케 하고, 완강한 적병을 은신처로부터 노출시키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했을지라도, 정치·전략적으로는 오히려 역기능을 미쳐 미국의 국가이익에 손상을 입힌 것이다.

그 당시 미의회에서는 다수의 여야의원들이 1925년의 제네바의정서를 반세기가 지난 지금이라도 비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그리하여 1975년에 포드정권시에 생물·독소금지조약과 동시에 제네바의정서를 비준함).

그리고 상원의교위위원회는 베트남에 있어서 미국의 화학작용제 사용을 비난하는 유럽의 대세에 편승하여 폭동진압제나 제초제를 치사성 화학무기 조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의안 체결의 움직임까지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압력에 못이긴 닉슨대통령은 1969년 11월 25일 치사성 화학·생물학무기의 선제사용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는 지금도 유효하지만, 미국은 폭동진압제와 제초제는 치사성 화학무기가 아닌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적이 사용하면 사용한다는 조건부 사용유보 규정일 뿐인 것이다.

닉슨의 이러한 유명무실한 선언에 관계없이 소련은 화학무기의 대량생산에 박차를 가했으며, 예멘, 라오스,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등에서 독가스가 월남전이 끝난 다음에도 사용된 것은 배후에 크렘린의 마수가 작용했을 것임을 시사한다.

「빈곤국의 핵무기」로 불리우는 화학무기는 국제조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 미·러가 금세기 초까지 보유량의 절반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그 실행여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화학무기는 현재 제3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급 이하의 테러집단 수중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탈냉전세계에서 미·러의 지도력이 저하됨에 따라, 다원화된 신세계질서의 불확실성과 모험 때문에 일부 화학무기를 가진 국가가 광적인 행동을 하도록 허용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화학무기는 저렴한 가격으로 간단히 대량생산할 수 있고 은닉, 사용 및 운반이 용이하여 현재 20여개국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물리적 파괴없이 인간만을 살상하거나, 일시적 기능을 상실·저하시켜 정복할 수도 있으며, 정밀유도무기와 같은 현대적 투발수단에 의해 정확하게 목표까지 도달하게 할 수도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 포괄적인 화학무기의 금지조약이 시행된다 할지라도, 이를 철저히 금지·검증할 신뢰성 있는 국제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핵무기처럼 상대방의 화학전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방호수단을 계속하여 보유하려고 할 것이다.

한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약 3개사단 규모의 전투부대를 장기간 베트남전쟁에 참가시

31) 이선호, 전우신문, 1998년 11월 20일.

켰던 바, 9천여톤에 달하는 엄청난 CS계열 제조체가 살포된 정글의 전장에서 활동하였던 병사들이 알게 모르게 다이옥신에 오염되지 않았을리 없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수만명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파월용사들에 대하여 과학적인 역학조사와 피해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보상을 위한 조치를 국가적 차원에서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베트남참전 국군의 양민학살 주장은 민족반역자적 소행³²⁾

최근 D대학의 K란 자는 「한겨레 21」 3월 2일자 특집기사에서 「베트남 주권을 짓밟는 세계의 강대국인 미국의 오만은 원천적으로 양민학살을 잉태.....,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은 아군 전사 5천여명에 적군 사살 약 4만 2천명이라는 무려 10배에 가까운 전과를 올리는 이해되지 않는 전쟁기록을 남겼다..... 이 예외적인 전과와 베트남 양민 학살이 직결되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하고 있다.

또 한술 더 떠서 그는 「한국군이 마을에 들어와 마을 사람들을 불러모아 음식을 나눠줘 안심을 시킨 뒤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것이」 학살 유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노근리 사건을 똑같은 맥락으로 왜곡·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국군의 양민학살행위 유형을 「무차별 기관총 난사, 대량살육, 임산부 난자살해, 여자들에 대한 강간살해, 가옥 불지르기 등이 있고, 아이들의 머리를 깨뜨리거나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거나 사지를 절단해 불에 던져 넣고, 여성들을 돌아가며 강간한 뒤 살해하고, 임산부의 배를 태아가 빠져 나올때까지 군화 발로 짓밟고, 주민들을 마을의 땅굴로 몰아넣고 독가스를 분사해 질식사시키는 것 등이었다」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쓰고 있다.³³⁾

한마디로 이는 함양미달의 대학교수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거부한 반국가·반민족적 이적행위라고 전우들로부터 비판 받을만하다.

셋째, 미국이 베트남의 주권을 짓밟은 강대국이란 말은 전혀 당치 않은 소리다. 미국은 초강대국이며 세계의 지도국으로서 정치·경제·군사 대국이다. 선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상징으로서 손꼽히는 일등국가임에 틀림없다. 물론 약소국가로서의 시각에 따라 주권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횡포나 불공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이나 이라크 같은 국제사회의 무법자이며 군대가 국가를 통치하는 전체주의 체제의 테러리스트 내지 반동국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미국은 근 10년간 피 흘리면서 베트남을 도와주었지 주권을 유린한 적이 없다.

둘째,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 전사자가 5천여명이었고 적군 사살은 4만 7천명인바 피해보다 전과가 많은 것은 양민학살이라고 하는 단정은 자기비하에 의한 논리의 비약이고 자가당착이다.

8년간 투입된 주월한국군의 연병력이 32만여명이었음에 비춰볼 때, 5천여명의 손실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그만큼 적과의 교전이 빈번하고 치열한 격전이 계속된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혼성전장이었음을 뜻한다.

그 당시 항공폭격에 의한 추정사살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상전에서의 전과보고는 반드시 일정비율의 무기노획이 수반되어야 인정받도록 되어 있었던 바 양민을 죽이고 허위 전과보고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전 중대급 이상 부대에 미군이나 월남군 요원이 연합작전이나 화력지원 목적상 상주하거나 수시방문 협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한국군이 그러한 야만적인 행위를 했다면 비밀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과가 피해와 동물·동수로 발생하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있음은 큰 착각이다. 부여된 작전임무, 피아의 전투력 그리고 지형·가상조건에 따라 전과나 피해는 달라지는 법이다.

한국군은 중대 전술기지 개념을 도입하여 공세적 수세작전에 주력했으며, 백명의 적사살 보다 1명의 양민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을 시종일관 폈던 바, 미군보다 상대적으로 피해는 적고 전과가 많았으며, 베트남정부의 신뢰를 얻은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현명하고 유연하게 적과 대처했기에 지금까지 베트남정부로부터 아무런 공식적인 피해 항의나 법적인 문제제기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가보지도 못한 처지에서 한 여성 통신원의 현장취재 내용을 각색하여 기분나는 대로 함부로 쓴 글이 참전 전우들에게 주는 충격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다면 예사

32) 이선호, 전우신문, 2000년 3월 5일.

33) 장정구, 노근리의 해원을 넘어 베트남학살의 참회로, 황해문화, 2000년 봄호, PP.430~441.

로운 일이 아니다.

셋째, 계획적이며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집단학살 운운인데 그가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묻는다. 베트남 전쟁의 수행과정에서 오폭이나 오인사격 또는 상황오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민간 희생이 전혀 없지는 않다.

특히 적과 아군의 판별이 어려운 게릴라전 상황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나치 독일이 2차대전시 유태인을 대량 학살하거나 임진왜란때 왜병이 조선인의 코를 20만개나 베어간 것 같은 잔학상이 한국군에 의해서 월남에서 공공연히 자행된 것처럼 함부로 지껄이는 그 당사자는 정신분열증 부수 증세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현재 몇몇 민족적 양심을 저버린 친북성향의 기자가 사대적 영웅주의에 심취하여 베트남전쟁의 국부적 미시현상이나 조작된 여론을 취재해와서 침소봉대하여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자기만족에 빠져 있다. 그는 무엇으로 진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가? 우리 참전군인의 얘기보다 감정적으로 발산하는 베트남인의 말을 더 믿어야 하는가? 이들은 월남에서 목숨바쳐 싸운 한국군과 미군 그리고 자기조국에 침 뺄는 역모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에 틀림없다.

베트남전쟁을 통하여 많은 전사자 그리고 고엽제환자는 물론 살아 돌아온 참전전우들의 희생대가로 얻은 미화가 곧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위한 중자씨앗이 되었으며, 북한의 침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철수를 유보케 했고, 한국군의 현대화를 뒷받침하는 미국의 원조를 가능케 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전쟁은 국가간 폭력행사의 상호교환인 바,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인 살상 행위가 수반된다. 평화시에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이지만, 전쟁시에는 적을 많이 죽이면 영웅이 된다. 전장에서 적으로부터 고통과 피해를 당할 경우, 전쟁심리상 피끓는 젊은 전사들의 적개심은 극도로 고취되기 마련이다.

양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그리고 코소보사태에서 얼마나 많은 비군인이 희생되었고, 비군사 표적이 파괴되었는가? 전쟁을 미워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것은 인류공통의 가치이다. 그러나 아직도 전쟁없이 평화는 성취되지 못하는 국제정치의 모순이 상존한다.

이러한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참전군인의 실수나 불가항력적인 명령수행 행위를 무조건 범죄시 하고 저주하며, 국군의 참전성과를 폄하·매도하는 K란 자의 민족반역자적 소행에 대하여 우리 참전전우들은 공분을 금치 못하며 지체없이 공개사과 할 것을 그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발생하는 사태는 전적으로 그의 책임임을 아울러 경고한다.

(4) 혹세무민(惑世誣民) 일삼는 「한겨레 -21」³⁴⁾

인류의 스승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BC 399년에 불의한 무리들에 의하여 배교자란 죄목으로 사형선고를 받아 독배를 마시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때 그의 제자들은 도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서 후배들을 위해 망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는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음을 택하였다.

그가 죽음을 거부하지 않은 것은 비록 재판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해도, 법의 권위와 질서를 지켜야 하며, 자기를 낳아 길러주고 자기에게 철학을 공부하게 해준 아테네란 조국을 배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국, 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유산인가. 비록 가난하고 허약한 작은 땅덩어리이지만 이곳에서 태어난 한 민족은 지난날 일제식민지하에서 침략국에 항거하면서 조국의 정체성을 지켜왔다. 또한 반세기전에는 북한의 침공으로 인한 3년여의 6·25전쟁에서도 피 흘려 싸워 조국을 지킴으로써 오늘날의 자유·민주·자본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할 수 있게된 것이다.

나의 부모가 배운 것이 없고, 험벗고 굶주리면서도 나를 낳아 길러준 덕분에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고 볼 때, 우리는 결코 부모를 원망하거나 배은망덕한 것을 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는 혈연공동체이며, 민족공동체의 일원인 것이다. 이 속에서 우리는 회노애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온갖 간란신고를 극복코자 동고동락하고 있다.

우리가 조국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곧 애민과 애족의 길이요, 국가안보와 국력신장을 위한 책무인 것이다. 만약 조국이란 삶의 터전이 없다면, 우리의 생활은 존재할 수 없다.

남베트남은 공산화되어 세계지도상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렸다. 파리평화회담의 공로로 레독토와 키신저는 노벨평화상을 받았으나, 그 반대급부가 남베트남의 패망이었다.

주월미군과 한국군도 평화협정 체결후 철수하였다. 민족주의자로 위장한 공산주의자에 의해 적화된 통일

34) 이선호, 전우신문, 2000년 6월 15일.

베트남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의 폭력 혁명통치자로 지난 30여년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몇 안 남은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조국을 버린 민족반역자들이 빛은 자업자득의 업보였다. 그러나 6·25전쟁에서 자유를 수호한 우리는 비록 분단상황을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4천 5백만 민족의 보금자리를 지켰기에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살아있다.

국제사회는 여전히 양육강식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적자생존의 대결장이다. 금년부터 3년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미국의 6·25전쟁기념 행사는 미국의 한국전쟁 재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국전쟁은 서방측의 냉전승리를 위한 초석이었으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의 계기를 마련했던 바, 결코 헛되지 않은 미국이 도와준 보람을 느끼는 21세기의 표본적 사례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이때 조국을 지켜내지 못하고 공산통일이 되었다면, 베트남과 똑같은 3등국가로 전락하였을 것이며 미국의 평가도 달라졌을 것이 자명하다.

근자에 와서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파도만 보고 바다를 못 보는 오리새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족적인 작태를 서슴치 않고 있는 「한겨레 21」은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학살」이란 제하에 온갖 악의에 찬 왜곡·굴절된 허위·조작 보도를 일삼고 있다.

그 당시 국군의 파월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불가결한 선택이었으며, 자유수호란 인류공동의 명분에 따라 취해진 현명한 결정이었다. 또한 이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자조적 기본임무 수행의 일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이나 월남전쟁시에 태어나지도 않은 구상유취(口尙乳臭)의 몇몇 친북성향의 기자가 베트남 참전을 매도하고 조작된 전투상황의 국부적 피해내용을 픽션처럼 침소봉대하여 홍미분위로 대서특필함으로써 영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비판도 들린다.

동서고금의 전사를 되돌아 볼 때, 전쟁은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한 공인된 폭력행사인바, 그 피해는 무한계적이다. 크라우제비츠의 섬멸전이나 절대전 풍조가 아직도 전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적에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적을 살육하는 것이 곧 전투력을 파괴하고 전의를 말살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며 승리의 지름길인 것이다.

국가의 전역장이 총동원되고 전방과 후방의 피해가 따로 없으며, 군인은 전선에서 민간인은 후방의 군수산업전선에서 함께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함께 헌신·봉사하는 것이 현대적 개념의 총력전이다.

그래서 국방의무는 신성하며, 최우선적인 사명인 것이다. 한국전쟁이나 월남전쟁의 싸움터에 가보지도 못한 기자가 지은 감상적인 작문을 실제인양 퍼뜨린다고 해서 성숙한 다수의 민주시민들이 부하노동하거나 세뇌 당하지는 않겠지만, 소수의 극렬분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김정일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안보의 내부적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를 뒷받치는 일부 용공·좌경·친북·급진 성향의 식자들이 가세하고 있다는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한국군은 이 자들이 주장하듯이, 베트남전쟁시에 결코 조직적·의도적·계획적으로 양민을 집단 학살한 적이 없다. 비정규전이란 특수 국면하에서 생김새가 다른 인종집단의 유격대와 정규군에 대한 현장판별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민과 베트콩은 물과 고기 관계로서 반드시 혼재해 있게 마련이어서, 이들의 선별·분리 과정에서 우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희생이 수반 될 수도 있었다.

지난날의 한국전쟁시에든 근자의 걸프전쟁이나 코소보사태에서도 엄청난 비군사·민간인의 부수적 피해가 있었음을 아무도 부인 못한다. 베트남 전쟁시의 민간피해는 「한겨레 21」의 무책임한 과장 보도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신뢰성 있는 공식문서와 자료도 아닌 일부 베트남 민간피해 당사자나 관련자의 민족감정과 호기심 그리고 상업주의를 교묘히 이용하여 부풀린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기사들을 전혀 증거능력이나 공신력이 없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적 표현인 것이다.

공명심과 소아병적 영웅심에 맹목적으로 탐닉되어 흑세무민을 일삼는 「한겨레 21」 현지 취재기자의 행각은 한마디로 민족반역자적 소행으로서 파월 전사상자와 그 가족 그리고 고엽제환자들의 분노와 저주의 대상이다. 이를 묵과하고 있는 정부 당국의 우유부단한 자세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일찍이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행복은 궁극적·자족적 덕행이라고 했다. 그 자들이 돈과 쾌락, 명예 그리고 권력에 현혹되어 저지른 우행이라면, 이는 결코 진정한 행복의 추구일 수 없다. 그들은 불행과 자멸의 웅덩이를 스스로 파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 나라의 아들 딸이기를 거부한 불행한 기회주의자들이다.

국가와 민족에게 대역죄를 범한 이들 이단자들은 언제고 이를 갚고 슬피울 때가 올 것이다. 절대자에 의한 공의의 심판이 이들 불의한 무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알갱이를 철저히 가루로 만든다는 것을 이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일간 펜 그리고 자유」의 양민학살보도 비판³⁵⁾

① 한국군 민간인 학살 문헌입증

그동안 수십권이 제기됐던 한국군의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 의혹 중 최소한 3건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문서와 사진자료가 공개됐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진실위원회(공동대표 이해동 목사·강정구 교수)와 박정희기념관 반대 국민연대(상임공동대표 광태영·이관복·신영철)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공개된 주베트남 미군사령부 감찰부의 조사보고서가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에 의해 베트남 민간인 학살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진실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그동안 미국립문서기록보관소(National Archives & Records Administration)에 보관돼오다 지난 6월 1일 기밀 해제된 것으로 주베트남 미군사령부의 각종 수사보고서와 20여장의 흑백사진 등이 포함됐다.

자료에는 지난 1968년 2월 12일 쿠앙남성 디엔반현 풍니마을(희생자 69명), 1968년 10월 22일 쿠앙남성 수지연현 홍차우 마을(희생자 4명), 1969년 4월 15일 쿠앙남성 디엔반현 폭미마을(희생자 22명) 등 3건의 학살 의혹에 대한 보고서가 포함돼 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진실위원회 집행위원 한홍구 교수(성공회대)는 “지금까지 민간인 학살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 문헌자료로 입증됐다. 모든 의혹이 다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3건에 대해 사실로 밝혀졌다”며 “그중 1건은 한·미 합동으로 조사된 내용으로 지난 1969년 4월 15일 학살의혹 사건은 한국군 참여사실에 대해 청문여단장이 서명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대부분 한국군 인근 미군부대나 베트남 당국에서 조사한 내용을 주베트남 미군사령부 감찰부가 취합, 지난 1969년 12월부터 1970년 2월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미 국무부와 국방부에 보고한 5건의 보고서에 포함돼 있던 것이다. 사진 자료의 경우 풍니마을 인근에 있던 미해병부대소속 상병이 찍은 것으로 보고서에 포함돼 있었다.

진실위원회측은 이들 자료에 대해 지난 1970년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미연방상원 외교관계위 사이밍턴(Symington) 소위원회의 주베트남 한국군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사건이 거론될 가능성에 대비, 미 국무부가 주베트남 미군사령부에 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 청문회에서는 파월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재정지원의 타당성 문제가 주로 거론됐으며,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의혹은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또한 한교수는 “정부에서 지금까지 베트남에서의 한국군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해 관련된 문서 실재 여부를 부인해 왔으며, 베트콩이 한국군 복장을 하고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현재 한국 관계자 1명이 미국 NARA에서 문서확인 작업중이며 파월용사들의 진술을 수집하고 있다. 또 정부의 자료공개와 함께 사과와 보상을 받기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민주연대와 민변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진실위원회’는 한국전 당시 미군의 양민학살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실도 밝혀져야 한다고, 베트남 현지에서 설립 추진중인 ‘사회와 평화의 역사기념관’에 기록자료로 이번 보고서가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위원회 김숙경 간사는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은 이 보고서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다. 더욱이 사건에 대해 추궁해 상처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기본적으로 전쟁이 없어야 평화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이번 보고서는 의미가 있다”며 “나 역시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참혹한 실상을 느끼고 다시는 이런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② 한국군의 양민학살은 입증되지 못했다.

위의 기사 내용과 같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진실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하여 한국군의 민간학살을 입증하는 미국 NARA에 소장되었다 비밀해제된 문서를 입수하여 번역 공개하면서, 해병청룡부대가 ①

35) 유재항기자 취재, 일간 펜 그리고 자유, 2000년 11월 7일.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한겨레-21, 2000년 11월 23일, 고경태기자, PP.2 1~24.

1968년 2월 12일 풍니 및 풍닛 마을에서 69명, ② 1968년 10월 22일 호양찌우 마을에서 22명, ③ 1969년 4월 15일 폭미 마을에서 4명을 각각 학살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대대적인 선전공세를 폈다.³⁶⁾

이상의 3건에 대한 서둘러 번역된 문서를 필자가 면밀히 조사 분석한 결과, ③의 폭미 마을사건은 동마을을 수색하던 청룡부대 제2대대 6중대가 부락 입구에 설치된 수류탄 부비추립 때문에 대원 7명(배속된 미해병대원 2명 포함)이 중경상을 입게되자, 난폭해진 대원들이 마을에 집중공격을 가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의 현장은 같은 해 5월 10일 한·미·월 3군 합동조사단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 4명의 민간피해가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 여단장도 이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동여단에 의해 후일 이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①의 풍니 및 풍닛 마을의 사건은 청룡부대가 추라이 지역으로부터 호이안 지역으로 부대를 이동한 직후에 맞은 구정 총공세때 일어난 것으로서 이는 구정공세에 대한 반격작전으로 전 여단이 작전에 총돌입한 괴뢰작전 기간중(1. 3~3. 13)의 사태였다. 이 작전에서 청룡여단은 전사 63명 부상 178명이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정도로 완강한 베트남 지방군인 V-25대대와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풍니 및 풍닛 마을의 민간인 피해 69명에 대하여 주월미군 사령관 웨스트 모어랜드 장군은 보고를 받고 나서, 1968년 6월 4일 체명신 주월한국군 사령관에게 유감을 표시한 공한을 보냈으며, 이에 체명신 장군은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해병여단 1대대 1중대가 동지역에서 탐색작전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발생 시각에는 그 장소와 반대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풍니 마을에는 해병대의 얼룩무늬 제복을 착용한 베트남군이 출몰한 적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미뤄와 이들의 소행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결론짓고, 이 사건의 가해자가 한국군이 아님을 설명하는 장문의 서한을 1968년 6월 4일 웨스트 모어랜드 장군에게 발송하였다.

당시 전투상보를 보면, 실제로 이 마을 일대의 작전에서 해병대는 전사자 3명, 부상자 14명이 발생할 정도로 심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68년 10월 25일, 미 Rand연구소가 국무성의 지시에 의하여 현장을 답사하고, 주월미군사령부 감찰 참모실에서 재조사한 비공식 보고서를 보면, 한국군을 배제한 채 미군과 베트남인만을 상대로 증언을 청취한 결과 민간인의 피해를 한국군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한국군을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당사자를 증언에서 배제한 일방적인 조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②의 호양찌우 사건과 관련하여 이 현장을 목격했다는 당시 디엔반 군청에 자리잡고 있던 연합전투조(combined action team)의 미해병 소령은 한국군이 동료대원들의 피해에 분격하여 81미리 박격포를 마을에 집중 사격했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주월미군사 감찰참모의 보고서에 보면, 자기의 보고서는 비공식적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선서나 증언 또는 문헌이 없다고 전제하고, 보고된 피해자 22명의 인적사항이 현장 조사 결과 일치하지 않으며 사건발생 장소도 지명과 좌표가 서로 일치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베트남전쟁 양민학살진실위원회」가 발표한 바대로 이 마을에서 한국군이 인간사냥을 한 것이 아니라, 심한 피해를 입은 나머지 적 은거지이며 저항거점인 이 부락에 박격포 사격으로 제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22명의 민간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근에 폭로한 한국군 베트남 양민학살에 관한 자료는 한국군이 고의적으로 양민학살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건의 민간피해중 한 건은 한국군의 책임임을 시인하여 보상조치를 취하였고, 나머지 두건은 당시의 위급한 전술상황하에서 아군의 피해가 속출하자 적을 제압 무력화하기 위해 박격포 사격으로 적의 은거·준동·출몰예상 부락에 집중공격을 가하였던 것은 불가피한 군사작전상의 자위조치였으며, 조직적으로 부락민에게 만행을 자행한 증거는 주월미군사령부 감찰감실의 조사보고서에서도 단정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바 있거니와 구정사태는 미군의 전쟁정책을 미국화 전쟁에서 베트남화 전쟁으로 바꾸게 된 계기로서 그만큼 민족해방전선의 일체 공격이 전국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며, 이 와중에 당시 청룡부대는 추라이 지역에서 북위 17도선 가까운 호이안 지역으로 진지를 옮기고 나서 자체 방어진지도 갖추기 전에 구정공세를 만나 고전했으며, 이를 겨우 격퇴시킨 다음, 적이 재차 공격해오지 못하게 사전에 저지코자 미해병 제1사단 및 미육군 아메리칸사단과 협조하여 「괴뢰작전」이란 총반격 작전을 펴고 있던 때였

36)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부 보고서의 공개와 관한 보도자료, 2000년 11월 14일.

한홍구,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과 민간인학살문제,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파병에 관한 심포지움 자료집, 2000년 10월 13일, PP.44~56.

다.

이러한 위급한 전투작전 환경과 공세적인 적정을 전제할 때 전술책임 지역내의 주요 VC거점은 당연히 격파 소탕되어야 했던 것이다. 작전기간중 발생한 민간인의 사망자는 불가항력적인 전투임무 수행과정의 부산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군의 주임무가 지역내 적을 섬멸 평정하는 것이다. 민간인을 사냥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확한 진상을 모르면서 국군의 베트남 참전을 용병이라고 폄하 한다던가, 전투중 발생한 민간인의 부수적 피해를 양민학살이라고 침소봉대 과장 보도하는 한겨레-21의 자세는 정론직필이나 불평부당이란 언론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흑세무민을 일삼는 반민족인 악덕 매스컴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참고로 필자는 해병소령으로서 구정사태를 전후하여 1년 반동안 청룡부대 제5대대의 작전장교와 청룡여단 작전참모 보좌관직을 맡아 거명된 이들 작전의 계획 및 실행에 참여했던 바, 그 당시에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양민학살이 자행된 적이 절대로 없음을 감히 증언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본인은 지금 심한 악성 고혈압과 심장병으로 고통 당하고 있음을 호소하는 바이다.

끝으로 지난 2000년 11월 14일 「.....진실위」가 내놓은 35페이지에 달하는 보도자료 역시 새로운 사실이 입증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주월한국군과 주월미군이 1969년말에 이미 처리 완결한 3급 비밀문서가 최근에 등급저하 공개된 것에 불과하지,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공인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언론에 과장 보도하여 호들갑을 떨고 단체의 의의가 무엇인지 묻고자 한다.³⁷⁾

다시 강조하거니와 한국군은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하지 않았으며, 치열한 전투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소수의 민간인 피해가 수반되었을 따름이란 것이다.

IV. 결론 : 사필귀정

제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는 미국이 싸운 모든 전쟁은 미국사회에서 심각한 공공의 논쟁거리(public controversy)가 되었다.

미국의 전쟁사를 되돌아보면, 독립전쟁(Revolutionary War)시 미국 국민의 1/3은 독립을 원했고, 1/3은 영국을 지지했으며, 나머지 1/3은 대륙군대(Continental Army)에 보급품이나 조달하여 돈벌이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1821년의 전쟁에서는 동부의 뉴잉글랜드 주민들은 Hartford회담 이후엔 캐나다와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전쟁에 합세하기 보다는 철수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멕시코와 전쟁에서도 미국의 국론은 분열되었었다.

그후 남북전쟁시에는 미국이 완전히 둘로 나뉘져 싸웠다. 스페인전쟁 시에는 필리핀 게릴라와의 분쟁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남북전쟁때처럼 징병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였다. 한국전쟁은 트루만 대통령의 재출마를 포기케 할 정도로 국민의 인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아무도 미국의 자주적 독립을 약속한 적이 없으며,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보루로서의 확신을 준 적이 없지만, 미국은 전쟁을 통한 고통과 손실 그리고 논쟁으로 이를 성취했던 것이다.

정병기피자 40만명을 산출한 베트남전쟁을 겪는 동안의 고통과 손실 그리고 논쟁도 미국 국민들은 근 10년간 이를 포용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야망이 자유 아시아를 존속시키고 성장시켜 오늘의 세력균형을 도모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미국은 믿고 있다.

1973년의 파리평화협정 체결로 미국은 모든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철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닉슨 대통령은 미군이 철군한 다음에도 휴전협정이 체결될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남베트남의 티우 대통령에게 다짐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목표로 한 자유로운 독립된 베트남 공화국은 결코 이뤄질 수 없었다.

미국은 자국의 군사력을 안전하게 철퇴시키고, 미군포로를 송환하며, 미군의 행방불명자를 찾는 데 주로 관심을 경주했으며, 베트남 정부군이 자위역량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는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북베트남은 최초의 대남전략 그대로 남베트남을 무력지배하여 공산통일을 실현하였다. 미국은 티우 대통

37) 동아일보, 2000년 7월 14일 및 7월 15일, 7월 18일. 한겨레신문, 2000년 11월 16일. 중앙일보, 2000년 11월 16일.

령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드디어 1975년 4월에 미군철수 2년만이며, 미군의 전투부대 상륙후 10년 1개월만에 호지명은 50년 전에 착수한 베트남의 천하통일을 완수하였던 것이다. 미국은 단지 베트남에서,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그리고 미국내에서 기념비적인 패배를 감내하지 않을 수 없는 쓰라림을 안았던 것이다.

미국은 베트남전쟁을 통해 앞으로 승전 가능성이 없는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아야 하고, 현장의 더욱 건전한 상황분석을 필요로 하며, 적의 토착적 군사력의 정치적 기반을 과소 평가하지 말아야 하고,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지나친 관료적 통제가 전투력을 약화시켰다고 하는 스스로의 교훈을 제시하기도 한다.

한국도 이제 베트남참전 결과의 실패와 성공에 대한 진솔한 교훈을 재음미할 때가 왔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의 주체가 미국과 베트남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맥락의 논쟁거리를 재연할 필요성과 당위성은 없다고 본다.

미군의 1/10에 해당되는 병력이 참전하여 동물의 피해를 입은 한국군으로서 전사상자, 생존 귀환자, 고엽제환자, 전쟁미참 신세대 등의 처지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당시의 국가과병 결정은 대의명분이나 국익을 전제할 때, 정당했다는 것이 보편적인 오늘의 공유가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는 3가지로 집약된다고 하겠다.

첫째는 참전 생환자중 근 6만명에 달하는 고엽제 후유증 및 의증환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치유문제가 있다.

현재 한국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고엽제 환자들이 대한 응분의 보상을 현실화 해달라는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당국의 입장은 우유부단할 뿐이다. 참다못한 고엽제 환자들은 미국의 다우 케미칼 회사를 상대로 3,859억원의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둘째는 일부 불건전세력에 의한 참전군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국제 피해보상 소송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조작된 양민학살 주장의 유포저지 문제이다.

셋째는 베트남 과병을 용병으로 평가절하하고, 박정희정권의 독재강화 도구로 동원되었다는 자기비하 논리의 극복이다. 당시의 과병결정은 한국국력이나 대내외 정세에 부응할 수 있는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숙명적 선택이었음에도 대안 없는 과거 회고적 비판을 일삼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이다.

본문에서 수차 강조한 바 있거니와 베트남전쟁은 그 성격이 애매모호하고 다양한 함축성을 지니고 있어 전쟁 주도국인 미국도 아직 시비논쟁을 계속하고 있을 정도로 예민하면서도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운 쟁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결코 베트남전쟁이 정의의 전쟁이나 성정이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실책과 시행착오를 시인하면서 정직하게 교훈을 도출하여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국가와 국민의 성숙한 노력이 돋보인다. 그들은 국가와 국가지도자 또는 정책당국자에게 책임을 묻고 날카로운 시비를 제기하지만, 결코 참전군인을 비방하고 범죄집단으로 매도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220년 이상의 승전기록을 가진 군대를 자랑하지만, 한국전쟁에서 무승부를, 베트남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피 흘린 전우와 순직한 호국영령들을 절대 매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베트남전쟁의 실상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진술하게 표현하면서 반성하기도 한다. 「베트남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폭격을 맞고 지뢰가 터져 죽거나 불구가 되었다. 미군은 때로는 민간인을 죽이고 포로를 고문하기도 했다. 그들은 집과 가게 도구를 불태우고는 학교와 병원 그리고 고아원은 새로 지어주었다. 베트남인에게 그들은 총포와 식량 그리고 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참전군인은 베트남인을 죽이고, 또 돌봐주기도 했다. 베트남전쟁시 무엇이 올바른 임무인지 알 수가 없었다. 몸서리치는 전쟁이었다.」³⁸⁾

전쟁은 군인만이 치르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대역사(大役事)인 바, 단지 군인은 국가의 명령을 수행한 싸움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전쟁의 결과를 국가적 차원에서 평가해야지 참전군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풍토나 군사문화가 아닌 한국에서는 전쟁의 본질 특히 베트남전쟁의 특수성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현대전의 속성상 불가피하게 불가항력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민피해를 무조건 베트남참전 군인의 「의도적·계획적 집단 양민학살」이란 굴레를 뒤집어 씌워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폄하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악의에 찬 급진·진보성향 단체들이 고개를 들고 있음은 가히 반국

38) Robert J. Mokin, The U.S. Marine Corps Story, McGraw-Hill Book Company, 1977, P.914.

가적 반민족적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주월한국군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베트남에 파송되어 8년여의 참전기간중 5천여명의 전사자와 1만여명의 전상자를 감수하면서, 악전고투 하였으며, 근 6만명의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이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주월한국군은 결코 미군에 종속된 용병이 아니라 독자적 작전권을 행사한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싸웠던 것이 사실이다.

전쟁기간중 베트남전쟁의 현대전적 특수성과 상존하는 무차별적 전쟁관의 발현으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대민피해가 발생한 것은 솔직히 시인하지만, 이를 마치 참전군인에 의한 인간사냥의 야만적 집단살육 행위로 빚어진 것인 양 몰아 부쳐 범죄집단시하는 일부 세력들은 국가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민·군관계 증진을 통한 국가안보역량 강화에도 백해무익한 소아병적 우행임을 깨닫기 바란다.

아울러 이들이 반미감정을 부추겨 주한미군 철수를 촉진함으로써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뒷받침하려는 친북·용공·좌경·반미·반군의 이적단체가 아니기를 바란다.

이와 관련하여 재미목사 김민웅은 미국의 전략이 한국군을 양민학살을 감당하는 최일선의 현장으로 몰아갔으며, 베트남 참전으로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용병국가, 양민학살 강대국가, 제국주의 앞잡이로 낙인찍혀 있다고 욕하기도 한다.³⁹⁾

우리 참전전우들이 베트남의 정글에서 풍토병과 싸우면서 피 흘릴 때, 그들은 과연 해외에서 또는 국내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는다. 과연 그들이 베트남전쟁의 공과와 시비를 가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전쟁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전우들을 더 이상 자극해서는 안될 것이다. 인내와 관용에도 한계가 있다.

끝으로 그들에게 충고한다. 베트남인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한국군의 양민학살을 규명하려 들기 전에, 식민지배하에서의 일본과 한국전쟁중 북한이 우리에게 저지른 학살만행부터 먼저 규명 규탄하여 사죄와 보상을 받고,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참전 전상자와 고엽제 환자를 돕는데 자원과 노력을 경주함이 마땅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스스로 베트남전쟁에 참여했거나 그 가족이 전상자나 고엽제 후유증으로 앓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런 사치스러운 주장은 더 못할 것이다.

이들이 위선적이고 독선적이며 이중 인격적인 허울좋은 반전평화운동, 진실인정운동, 명예선양운동 그리고 참전군인 꺼안기 운동이란 바리세인적이며 야누스적인 작태로 더 이상 참전전우들을 괴롭히고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39) 한겨레-21 홈페이지, 2000년 7월 13일.(www.hani.co.kr/h21/kz.vietnam)

제 3 주제 :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과 민간인 참상

<발표자> 강 정 구 (姜 禎 求)

- 서울대 문리과대학 사회학 학사
- 위스콘신-메디슨대 사회학 석사
- 위스콘신-메디슨대 사회학 박사
- 현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현 한국전쟁 후 민간인학살 범국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현 베트남전 진실위원회 공동대표

<토론자> 여 영 무 (呂 永 茂)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고려대 대학원 법학석사
-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
- 미국 인디애나대 신문대학원 수학
- 미국 조지워싱턴대 초청방문 교수 역임
- 동아일보 통일연구소장 역임
- KBS, 교육방송 자문위원 역임
- 통일원 정책평가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역임
- 경희대 평화복지 대학원 객원교수 역임
- 연합통신 상임고문 겸 논설위원 역임
- 동아시아 연구회 부회장 역임
- 현 남북전략 연구소장
- 현 통일원 홍보정책 자문위원
- 현 한국군사학회 연구위원

한국군 베트남전쟁 참전과 베트남 민간인의 참상

강 정 구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I. 머리말

II. 베트남전쟁의 성격

III.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놓인 상처의 깊은 골

IV.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실태

- 1) 민간인학살 조사 현황
- 2) 한국군 민간인 학살 실태

V. 미군의 민간인 학살과 전쟁범죄 양상

VI. 한국군 민간인 학살에 대한 논쟁과 평가

VII. 맺음말

참고문헌

I. 머리말

한국전쟁 중 미군이 저지른 노근리 민간인학살이 1999년 9월 AP통신을 통하여 세계에 알려지는 것을 계기로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학살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에 고조되었다. '나와 우리' 등 여러 사회단체와 『한겨레21』 등이 가해자의 위치에서 한국군이 저지른 과거의 죄악과 잘못을 집중적으로 쟁점화 하였다. 일본이나 미국에 의해 민간인 학살의 대대적인 피해를 입은 한국이 이들 오만한 가해자들에 앞서 자신이 베트남전쟁에 저지른 민간인 학살이라는 전쟁범죄에 대한 자발적인 청산 움직임은 로이타 통신을 비롯해 지구촌공동체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참전군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민간인 학살에 대하여 학살이라는 사실 자체를 아예 부인하기도 하고, 또는 오살 등으로 합리화하기도 하고, 상황논리를 들먹이며 불가피성을 역설하기도 하고, 일부 인정은 하지만 '나라의 명예와 국가 이익을 위하여' 덮어두자고 하기도 한다. 심지어 노근리 학살에 대한 미국의 사죄와 보상을 받기 이전에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될 경우 오히려 노근리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된다면서 유보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20세기는 극단의 시대라고 한다. 그 극단의 대표적인 경우가 전쟁이었고, 그 전쟁 가운데 반인륜성의 극치가 전쟁중의 민간인학살이다. 『전쟁의 슬픔』을 쓴 베트남 작가 바오닌이 말한 것처럼 "총을 들지 않은 사람을 쏘는 건 이미 전쟁이 아니고 살인이다." 그것도 대체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살인행위이다. 이와 같은 전쟁중의 민간인학살은 그 학살의 규모나 절에서도 전율할 정도이지만, 전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핑계로 인류사적 쟁점화가 제대로 되지도 않거니와, 쉽게 면죄부를 안겨준다는 점에서 더욱 가증스런 현상이다. 더구나 21세기를 맞은 오늘날 군산복합체에 의한 가공스런 전쟁무기의 개발로 인해 전쟁을 마치 즐기는 게임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전쟁중의 민간인학살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이 1999년 가을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을 계기로 이제까지 남몰래 원한곡을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전쟁전후 학살된 수 십만 내지 수 백 만의 유족들이 이제야 공식적인 진혼곡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1세기의 과제는 공식적인 진혼곡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민족사는 물론이거니와 인류역사에서 더 이상 이러한 전쟁 민간인학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일 터이다.

역사로부터의 이러한 깨달음과 더 높은 역사로의 진전은 우리 자신에만 머물지 말고 지구촌 곳곳에서 아직도 숨죽이며 절규하는 다른 이들의 원한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일 터다. 호주의 원주민, 미국의 인디언, 코소보, 보스니아, 체첸, 동티모르, 이라크, 웨스트 파푸아, 르완다, 스리랑카, 짐시, 세계 수많은

소수민족 등의 원한의 노래를 우리의 노래로 만드는 것일 테다. 이러한 더 높은 역사 발돋움의 출발은 무엇보다 노근리와 같은 한국전쟁 동안에 저질러진 일체의 민간인학살에 대한 사무치는 원한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군이 저지른 베트남 학살에 대한 참회로 승화시키는 것일 터이다. 곧 우리가 겪었던 그 뼈저린 아픔에 대한 철저한 한풀이에 앞서 우리 자신이 저지른 베트남 민간인학살에 대하여 그들의 한 맺힘을 푸는 일에 먼저 임하는 것이다.

이에 이 글은 2장에서 베트남전쟁의 성격을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짓고 이에 개입한 미국의 행위를 침략전쟁을 감행한 전쟁범죄로서 규정한다. 한국군의 참전은 이에 대한 방조행위로 본다. 3장은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사한 경험을 한 제3세계 국가의 전형인 베트남과 한국은 그 역사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사이에는 깊은 상처의 심연이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한다. 4장은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학살에 관해 살펴본다. 5장은 베트남전쟁이 한국군 뿐 아니라 미군에 의해서 저지르진 전쟁범죄를 살펴본다. 6장은 한국군 민간인 학살에 대한 몇 가지 주장과 논지를 검토 및 평가한다.

II. 베트남전쟁의 성격

아래의 스노의 분석과 같이 동아시아는 2차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혁명상황으로 진입하였고 그 혁명은 반제국주의, 사회주의, 민족해방혁명의 성격을 공통적으로 띠고 있었다(Herring, 1986:12; 강정구, 1995). 이 동아시아 혁명은 식민지 지배의 인적, 물적 구조의 근본적 청산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반제국주의였고, 이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주권을 되찾아 민족독립국가 수립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민족해방혁명이고, 당시 동아시아의 지배적 이념 지향인 사회주의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혁명이었다.

순수하고 대중적인 혁명이 전쟁 직후의 중국, 인도, 미얀마, 인도차이나, 조선, 말레이시아에서 격동했다... 이들 혁명적 상황의 특징으로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내인성이라는 점, 반제국주의적, 민족주의적, 사회적 혁명이라는 것이다. 초기에는 어느 하나도 반미주의 색채를 띠지 않았다... 그러나 전쟁에 승리한 직후 미국인들은 인도차이나에서는 정통 독립 운동가들에 대항하여 프랑스의 꼭두각사인 난봉꾼 황제 바오 다이(Bao Dai)를 지지하는 책략을 썼고, 중국에서는 공산당에 의해 파괴될지도 모를 사유재산제의 독재체제를 구해 내기 위하여 내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또한 서울에 진주하여 이미 조선에서 권력을 획득하고 있던 갓 태어난 사회주의(비공산주의) 혁명을 진압하고 이승만을 데려와서 경찰국가를 세웠다(Snow, 1958).

이러한 혁명적 상황은 미국의 대 동아시아 외교정책이 맹목적으로 전제하고 있듯이 중국이나 소련의 '세계 적화야육'이나 '사회주의혁명의 수출'의 결과라는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식민 지배에서 배태된 내재적 역사행위의 흐름이었다.⁴⁰⁾ 이러한 세 가지 성격의 혁명을 추구하던 호志明 중심의 베트남민주공화국은 식민도국이었던 프랑스가 반혁명의 침략전쟁을 펼치자 의연히 민족해방전쟁으로 대응하였다. 46년 12월에서 54년까지 약 10년 동안 지속된 민족해방전쟁이 프랑스의 패배로 마무리됨으로써 베트남은 약 80년만에 민족해방과 미완의 사회주의 및 반제국주의 혁명을 추구하게 되어 있었다.

호志明이 이끄는 베트남민주공화국과 프랑스사이에 체결된 휴전협정은 한국전쟁에서의 휴전협정과 마찬가지로 적대행위의 종식을 협약한 조약에 불과한 것이고 평화체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대신 '제네바회의의 최종선언'은 바로 이 평화체제를 보장해 주는 평화협정인 셈이었고 남북베트남에서 총선거를 56년 7월 중에 실시하여 민족통일정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통일정부 수립을 와해시키고 프랑스 철수에 대비한 대응책을 추진하였고 이 결과가 베트남전쟁 또는 2차 베트남

남민족해방전쟁으로 나타났다.

1955년 10월 26일 베트남공화국이 새로운 헌법에 의해 베트남 남부에 출범하고 미국의 괴뢰에 불과했던 고딘 디엠이 초대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시작된 미국의 침략전쟁은 1975년 미국의 참패로 인해 완전 철수할 때까지 약 20년 간 지속되었다. 폴란드작가와 대담에서 호志明이 언급했듯이 만약 미국이라는 외세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베트남은 제네바협정에 따라 최소한도 56년에는 재통일된 민족통일정부가 베트남의 주도하에 수립되었을 것이다. 이 경우 이 글에서 논의하는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이라는 엄청난 비극도, 미국의 극악무도한 전쟁범죄 행위도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전쟁성격은 베트남 측의 전쟁목적 중심의 성격규정이다. 또 다른 전쟁주체인 미국 측의 전쟁목적에 따른 전쟁성격은 반공산주의전쟁이었고 그 형태는 침략전쟁의 성격을 띠었다. 침략전쟁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955년에 출범한 남부베트남의 디엠정권은 제네바협정에서 획정한 임시군사분계선인 북위 17도선 이남의 전 영역에서 1차민족해방전쟁의 참전 항불(抗佛) 전사들에 대한 무력공격을 감행하여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1차민족해방전쟁에 참여하였던 수많은 항불전사가 일방적인 남베트남의 무력공격으로 소탕 당하여 남베트남의 혁명세력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또 디엠정권의 반민주성과 토지개혁의 후퇴와 같은 반민주성으로 인하여 남베트남 전역에서 인민들의 반정부투쟁과 적대가 발생하였다. 드디어 1960년 12월 반정부의 체계적 조직인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이 구축되고 1961년 2월 15일에는 남베트남인민해방군(Vietcong)이 발족하였다. 이로부터 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점까지 북부베트남은 직접적인 무력개입을 자제하였고 미국은 용병을 고용하는 등 특수부대를 개입시켰으나 직접적인 개입은 자제하여 전쟁의 형태는 순수내전에 가까웠다.

그러나 민족해방전선과 베트남이 설립되면서 디엠정권의 무력 독점이 깨어지고 여러 곳에서 남베트남의 붕괴징후가 나타났다. 이에 미국은 특공대(Special Task Force) 등 고문관을 증가시켜(1961년 12월 3205명에서 1962년 말에는 9000명으로 증가) 남베트남군사원조사령부(MAGA)를 만들고, 남베트남군을 훈련시킬 400명의 특별군을 파견시키고, 남베트남인을 북과 간첩으로 고용하여 북부베트남에 파견하여 보급로 파괴, 군과 민간 목표물에 대한 사보따위, 하노이정권에 대한 반란선동 등 특수전쟁을 전개하였다. 라오스에 비밀전쟁을 통하여 9천명의 메오원주민을 무장 동원하고, 헬리콥터를 대량 보급하여 반반란전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또 남베트남의 군사, 행정 등 여러 분야에 미고문관을 파견하여 행정 및 군사권을 장악해 남베트남정부의 관료 체계를 무시하고 여러 부문에 직접적인 책임자 역을 수행하였다. 동시에 새마을(New Village)전략을 도입해 전략촌(strategic hamlet)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게릴라와 베트남인민들을 상호 분리시키는 정책을 취하여 디엠정권에 대한 인민의 지지를 꺾었다.

이로써 미국은 이미 베트남 내전에 간접적인 개입자 수준이 아니라 직접적인 주도자로서 역할을 맡아 침략자로서의 위상을 굳힌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직접적인 침략행위에도 불구하고 1964년 여름 남베트남 영토의 40%, 인구의 50%가 민족해방전선에 귀속되고 남베트남군 신병훈련소의 탈영율이 50%에 이를 정도가 되어 해체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1964년 퉁킹만사건을 조작하여 이를 빌미로 북부베트남에 대한 폭격을 감행하고 대대적인 지상군을 파견하여 대대적인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1968년에는 무려 53만에 이르는 지상군을 파견하여 완벽한 전쟁의 주체가 되었다.

츨스키는 이러한 침략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전쟁성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곧,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의 전쟁에 미국이 남베트남을 도와주는 전쟁으로 왜곡하고, 당시 미국 시민들의 반전운동에 미국의 군사력 사용이 제약을 받았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후세의 일반인들은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리는 공식적인 역사해석이 뇌리에 축적되면서 차츰 그것이 정설이 되어 체계적인 역사왜곡이 일어나게 된다고 본다(Chomsky, 1992).

또한 베트남전쟁에 관한 잘못된 세 가지의 신화가 미국사회에 확산되고 있다고 본다. 첫째는 30년 반식민 민족해방전쟁을 북베트남에 의한 남베트남에 대한 침략이라는 잘못된 신화이고, 둘째는 남베트남의 군사독재정권을 마치 민주정권인양 하는 신화이고, 셋째는 모든 전쟁의 주도행위는 미국이 하는데도 마치 남베트남이 하는 것으로 보는 신화이다(Knoll & McFadden, 1970: 105.).

이러한 왜곡과 도미노이론 등과 같은 사이비 정당화의 논리로 제3세계의 민족해방혁명이라는 내전에 대하여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의해 도움을 주기커녕 침략전쟁을 감행한 미국 그 자신이야말로 전쟁범이고 불법행위자이다.(Knoll & McFadden, 1970: 32). 그러나 이러한 전쟁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패전국의 경우에만 그 주동자가 전범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뿐이고, 전승국의 경우 비록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하더라도

40) 실제 미국의 내부 문서조차 동남아문제는 근본적으로 호전적인 민족주의문제라고 인정하고 있다. "Policy Planning Staff Paper on United States Policy Toward Southeast Asia"(PPS 51) in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1949*, v.7, pp.1128-33, (Washington D.C.: Gov't Office) reprinted in Williams, William Appleman et. al., (ed.) 1985. *America in Vietnam: A Documentary History*, NY: Anchor Books. pp.104-06

아무런 국제적 제재를 받지 않은 것이 이제까지의 역사였다. 이 같이 베트남전쟁에서도 미국은 비록 전쟁에 패배하였지만 패권국이란 막강한 위치 때문에 전범국가로서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성격의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 용병으로 참전하여 미국의 침략전쟁의 방조자가 되었다. 동시에 한국은 외세에 의해 똑 같은 식민지와 분단의 경험을 겪은 제3세계의 일원이면서도 베트남의 민족해방과 통일을 가로막는 반혁명과 반통일전쟁의 편에 가담하였다.

III.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놓인 상처의 깊은 골

제3세계 여러 국가들 가운데 우리와 가장 유사한 근·현대사적 경험을 겪은 국가를 꼽는다면 그것은 단연코 베트남일 것이다. 두 나라는 중국의 지속적인 침략과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유사한 역사적 경험에서부터 시작하여 1860년대 나폴레옹 3세 치하의 프랑스 제국주의 팽창정책에 의해 조선은 병인양요를 겪었고 베트남은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이후 2차대전이 끝나는 시점까지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와 짧은 기간의 일본 식민점령을 겪는 유사한 식민지배를 경험하였으며, 해방 이후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북부 베트남은 중국의 점령을, 남부 베트남은 영국의 점령을 받는 지리적 분단을 다같이 경험하였다. 그리고 똑같이 남에는 자본주의 체제, 북에는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분단정권이 형성되어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하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전쟁까지 치르게 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분단에서 전쟁과 통일에 이르기까지 패권주의 미국이 '공산주의 대 자유진영'이라는 단순 양분도식을 명분으로 지속적인 개입을 자행했고, 우리의 경우도 분단에서 전쟁 및 IMF 경제실태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행사되어 왔다. 단적으로 한국전쟁에서 미국은 그 역사상 최초로 패배한 또 는 최소한 무승부로 끝낼 수밖에 없었던 뼈아픈 상처를 입었고, 베트남전쟁에서는 완전히 패배하여 미국이 누리던 세계의 경찰이라는 직분을 한때나마 포기하고 야경꾼 정도로 스스로의 역할 축소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역사행로의 유사성, 외세인 미국의 결정적 영향력, 동시대의 사회경제적 연계성, 민족통일에 대한 유용한 역사적 지침 등을 볼 때, 베트남과 한국은 상호유대를 강화하고 역사와 삶을 공유하여 이웃사촌이 되어야 할 사이이다.

그러나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는 너무나 깊은 골의 상처가 놓여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군이 같은 제3세계의 민족해방전쟁인 베트남전쟁에 침략자인 미국의 편에서 참전하고 또 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학살을 저질렀다는 역사적 비극이다. "베트남전 참전은 우리의 진의가 아니었다"라는 초대 주월한국군 사령관인 채명신의 말처럼 같은 제3세계인 우리가 베트남의 민족해방전쟁에 미국의 용병으로 참전하였고, 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한국군들은 단지 미국의 용병일 뿐이었는데, 왜 미군보다 더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라는 원성을 들을 정도로 민간인학살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러한 학살을 저지른 지 3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역사적 진상규명과 사죄를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과 우리는 비록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지만 여전히 양자 사이에는 어둠과 두터운 장막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다.

1965~73년 9년여 동안 청룡·백마·맹호 부대 등 총 31만 2853명의 한국군이 참전하였고, 그중 4687명이 전사하고, 1만에 이르는 전상자를 기록하였고, 2만 여의 고엽제 희생자를 배출하였다. 또 1170회의 대대급 이상 대규모 작전과 55만 6천 회의 소규모 작전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4만 4100여 명의 적군을 사살하였다 한다. 그리고 1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한다. 한미 공동작전시에는, 미군은 주로 후방에서 포를 쏘고 한국군은 직접 마을에 들어가 작전을 펼치는 등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한겨레21』의 구수정 통신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한국군 지휘부는 작전 시 "깨끗이 죽이고 깨끗이 불 태우고 깨끗이 파괴한다" "놓치는 것보다는 오인사살이 낫다" "보이는 것은 모두 베트남이다" "물(인민)을 퍼내서 고기(베트남)를 잡는다" "어린이도 참자" "땅굴이 있는 집은 모두 베트남이다" 등의 전술지침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공식적인 전술 지침은 '100명의 베트남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베트남 양민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라는 식이었던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⁴¹⁾

그러나 이러한 공식지침과는 달리 하부단위에서의 실질적 작전지침은 구수정 통신원의 지적처럼 전자의 경우였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한국군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고 미군의 경우도 거의 동일한 현상이었다. 이 결과 총구는 민간인들을 향해서도 열려 있었던 것이다. 이 결과 아직 불확실하다는 단서를 붙인

41) 1968년 6월 4일자 채명신 한국군사령관이 웨스턴모어랜드 주월미군사령관에 대한 답신에서 인용함

베트남 문화통신부의 통계는 약 5천 명의 집단 민간인학살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공인한 피해자의 배를 넘는 수치를 현지 지역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어 실질적인 민간인학살 숫자는 이를 훨씬 능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베트남전투는 게릴라전투임을 고려한다면, 한국군 전사자의 10배가 넘는 게릴라가 전투 중에 한국군에 의해 사살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상적인 게릴라전투에서는 일반적으로 정규군의 전사자가 많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한국군 전사자보다 게릴라 전사자가 10배 가까이 많았다는 사실은 바로 민간인학살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한겨레 21>의 피해자 증언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는 이제까지 약 9천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숫자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4년 6월 21일 베트남 노동부의 발표는 300만이 미국과의 제2차 베트남민족해방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였다고 한다(<연합뉴스> 1999.6.21). 이 가운데 2백만 정도가 민간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민간인학살의 대부분은 미군의 포격 등에 의한 원격 및 비 대면적 학살, 미라이와 같은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원시적 학살, 고엽제에 의한 학살, 북베트남에 대한 무차별 공중폭격에 의한 집단적 민간인학살 등에 의해 저질러졌다. 여기에서 미국의 괴뢰에 불과했던 고 던 디엠포 그 이후 미국의 하수인이었던(American boy) 남베트남 군부정권에 의해 자행된 불교사원의 불도들에 대한 집단학살 등이 더해졌다.

비록 숫자적으로는 이들에 비해 작은 숫자이지만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이미 세계적으로 '공인'이 될 정도로 악명을 떨치게 되었다. 으레 베트남전쟁에서 민간인학살이라면 한국군을 거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까지 되어 버린 지경이다. 이러한 역사의 왜곡과 한국군에 대한 희생양은 진보적 학자의 경우에서도 차이가 없다. 노암 촘스키같은 비판적 학자들도 "베트남전쟁은 비 무장한 베트남인민들과의 싸움이다. 이러한 전쟁은 직업적인 살인자, 곧 용병이 필요하다. 그래서 5만의 한국군 용병이 베트남에 주둔하였고 이들은 그야말로 직업적 살인자였으며 노골적인 학살을 감행하였다"(Chomsky, 1992: 231). 또 펜타곤 페이퍼(Pentagon Papers)를 유출하여 미국의 반전운동에 불을 지핀 엘즈버그도(Daniel Ellsberg) 미 라이(My Lai)와 같은 민간인 학살을 한국군은 다반사로 일으켰다고 선명적으로 주장할 정도이다(Knoll & McFadden, 1970: 128.)

물론 이러한 과장과 왜곡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과 만행은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로 인한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깊은 심연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은 채로 지속될 수 없다. 비록 30여 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상처의 치유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IV.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실태

1) 민간인학살 조사 현황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의 참모습은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이미 베트남 참전군인들의 무용담 속에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수많은 개인적 체험이 노출되고는 있었지만 우리 사회는 이러한 역사의 치부를 본격적으로 쟁점화하지 못하였다. 물론 70년대 미국의 케이커 교도인 친우봉사회의 다이앤과 마이클 존스(Dianne & Michael Jones) 부부가 '동맹군이라 부르는 한국인들: 베트남에서의 보고'에서 한국군 청룡부대의 베트남민간인 학살을 현지 피해자 중심의 조사를 통하여 일부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선구적 업적은 이목을 끌지 못하였다.

본격적인 조사는 <한겨레21>의 구수정 통신원과 고경태 및 황상철 기자의 피해자 중심의 실태조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피해자라는 일방적 실태조사이고 또 한정적인 것이긴 하지만 9천여 학살을 어느 정도 확인한 것은 훌륭한 성과이다. 구수정 등의 조사는 단순한 피해자 실태조사에 끝나지 않고 이 한국군의 민간인학살을 우리 사회에 쟁점화 및 여론화하였고 본격적인 역사청산의 출발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 모임'이나 '나와 우리' 등 시민단체들이 피해지역에 대한 해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조사는 피해자 실태조사에 국한되어 이를 공식적인 문헌자료나 가해자의 직접적인 증언에 의한 확인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자 중심의 증언은 청룡부대 2대대 7중대장이었던 김기태 대위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를 <한겨레21>이 현지에서 확인한 것이 본격적인 민간인 학살의 검증 작업의 출발이다. 미국의 경우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많은 참전군인들에 의해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폭로가 이루어졌다. 대표

적인 것은 1971년 1월 31일, 2월 1-2일 사이에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Winter Soldier Investigation 이고, 이 증언은 책으로 출판되었다. 이러한 가해자 중심의 증언이 한국의 경우도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의 공식문헌에 의하여 한국군의 민간학살이 입증되었다. 2000년 6월 1일자로 기밀 해제된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부 조사보고서' (미국국립문서기록보관소 소장 RG 472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 위원회'에 의해 공개됨으로써 공식문헌에 의해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이 확인되었다. 이들 공식문서는 1968년 2월 12일 쿠앙남성 디엔반현 풍니마을(희생자 69명), 1968년 10월 22일 쿠앙남성 추엔짜현 호앙쩌우마을(희생자 4명), 1969년 4월 15일 쿠앙남성 디엔반현 폭미마을(희생자 22명) 등 3건의 학살의혹 사건에 대한 보고서이고 특히 폭미마을 사건의 경우 보고서의 작성 주체가 한.미.월 군 합동조사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일부 확인된 셈이나 한국정부에 의해 체계적인 가해자 중심의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그 전모가 밝혀질 수 있다. 다음에는 한국군 민간인 학살의 실태를 위에서 언급된 피해자와 가해자 중심의 증언과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가 공개한 공식문헌을 통하여 알아보겠다.

2) 한국군 민간인 학살 실태

피해자 증언을 중심으로 한 실태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군은 너무나도 잔인하여 못하는 것이 없는 군대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청룡이 지면 꼭 학살이 일어난다" "미군의 폭두각시들 중에서 한국군들이 가장 극악했다는 건 세 살배기 아이들도 안다." 한국군의 잔혹한 대량학살 때문에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조차 가끔씩 직접적인 교전은 피하려 할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구수정 통신원이 전하는 한국군의 학살만행 일부를 소개한다(<한겨레21> 256호, 1999년 5월 6일). 1965년 12월 22일, 한국군 작전병력 2개 대대가 빈딘 성의 퀴년 시에 있는 몇 개 마을에서 "깨끗이 죽이고 깨끗이 불태우고 깨끗이 파괴한다"는 작전 아래 12세 이하 어린이 22명, 여성 22명, 임산부 3명, 70세 이상 노인 6명, 즉 대부분 노약자인 양민을 학살했다.

랑은 아이를 출산한 지 이틀만에 총에 맞아 숨졌다. 그의 아이는 군홃발에 짓이겨진 채 피가 낭자한 어머니의 가슴 위에 던져져 있었다. 임신 8개월에 이른 측은 총알이 관통해 숨졌으며 자궁이 밖으로 드러내져 있었다. 남한 병사는 한 살배기 어린아이를 업고 있던 찬도 총을 쏘아 죽였고 아이의 머리를 잘라 땅에 내동댕이쳤으며 남은 몸통은 여러 조각으로 잘라내 먼지구덩이에 버렸다. 그들은 또한 두 살배기 아이의 목을 꺾어 죽였고, 한 아이의 몸을 들어올려 나무에 던져 숨지게 한 뒤 불에 태웠다. 그리고는 열두 살 난 용의 다리를 쏘아 넘어뜨린 뒤 산 채로 불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한국군들이 마을에 들어가 주민을 체포하면 남자와 여자를 따로 나눴다. 남자는 총알받이로 데리고 나갔다. 여자는 군인들 노리갯감으로 썼다. 희롱하고 강간하는 것은 물론 여성들의 가장 신성한 부분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한국군들의 민간인학살 행위유형은 무차별 기관총 난사, 대량살육, 임산부 난자살해, 여자들에 대한 강간살해, 가옥 불지르기 등이었고, "아이들의 머리를 깨뜨리거나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거나 사지를 절단해 불에 던져 넣고" "여성들을 돌아가며 강간한 뒤 살해하고 임산부의 배를 태우며 빠져 나올 때까지 군화발로 짓밟고" "주민들을 마을의 땅굴로 몰아넣고 독가스를 분사해 질식사시키는" 것 등이었다.

가해자 증언을 통해 본 실태

이러한 야만적 행위는 가해자의 한 사람이었던 김기태 대위의 증언에서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보편적 현상이었음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한겨레21> 305호, 2000년 4월 27일). 1966년 11월 9일에서 14일 사이에 중부 베트남의 쿠앙옹아이성 선틴현의 서부지역 야산에서 전개된 용안1단계작전에서 당시 청룡여단 제2대대 7중대장으로 참전했던 김기태의 증언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한다. 10일 그는 중대본부를 이끌고 안투엿1(An Tuuyet 1) 마을을 들어섰다.

"초가집이 30-40채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집은 불타고 있고 길바닥엔 아이들과 여자들, 노인들의 주검이 널브러져 있었다. 머리가 깨지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주검이 무더기로 있는 곳도 보였다... 밭끝에 주검들이 툭툭 걸렸다. 그가 무전으로 앞서가는 소대장들에게 고향을 쳤다. '야, 이 새끼들아 그만 좀 죽여!'"

이 마을은 김기태 중대의 소속 소대장에 의해서 '닥치는 대로 불지르고 사살하는' 싹쓸이를 당했다. 이 마을에서 경미한 저항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관련 작전일지에는 저항이나 저격 및 교전 등의 기록은 전혀 없어 정말 저항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소대장들은 최소한 수십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마을 주민들을 살해하게 될 싹쓸이 작전을 하기 전에 중대장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았다. 화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소대장 단위에서 자의적으로 이러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중대장은 이를 대대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명령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다. 이 마을인지 확실치는 않으나 김중대장이 언급한 젊은 여인은 나중에 확인 결과 한국군에 집단 윤간을 당하였다. 그녀는 한국군에 대한 증언으로 입산하여 베트남이 되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7중대가 5중대를 돕는 차단작전을 하기 이전에 서쪽에 있는 마을 하나를 공격하였다고 한다. 이 때 이전 마을에서 '그만 죽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중대본부에 앞서 가던 2-3소대는 이 마을 주민 40-50명을 모아 앉혀 놓고 있었다. 소대원들은 대부분이 아이들과 여자 및 노인인 이들에게 담배도 주고 사탕도 주면서 이름을 묻는 등 살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중대장은 '야, 그냥 보내'라면서 뒤따르던 화기소대에 살려줄 것을 명령하고 전진했다. 그러나 몇 발자국을 지나지 않아 총소리와 비명소리 신음소리가 들렸다. 이에 중대장이 뭐냐고 물었으나 소대원들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미 얼지르진 물이었다. "야, 새끼들, 확실히 해"라고 명령했다. 이는 바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확인 사살하여 후환을 없애라는 명령이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살아 남아서 증언하게 되면 골치 아픕니다. 중대장 으로서는 전쟁터에서 양민학살을 하는 것이 되니까, '확실히 하라'고 하지요. 확인사살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그 일에 대한 증언이나 보고가 없어 모두 죽은 걸로 압니다.

이렇게 소대원이나 소대장이 중대장의 명령도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중대장이 전혀 싹쓸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바로 7중대가 위의 작전을 감행하기 하루 전에 1개 소대가 작전을 펼친 하타이 마을 학살이다. 마을에는 청·장년 층은 모두 전략촌으로 피해 가고 노인과 어린이들만 남았는데 이들 21명 가운데 한 명만 살고 나머지는 모두 학살되었다 한다. 유일한 생존자 켄 티 타이는 "한국군이 우리 할아버지의 이마와 턱, 목에 총을 쏘아. 그리고 나를 땅굴로 밀쳐서 나는 땅굴을 마구 기어가 숲으로 나왔다. 조금 걸어가니 가족 3명이 죽어 있었는데 귀도 없고 코도 없었어." 이 마을 위령비에는 "1966년 11월 하타이촌에서 남조선 군대에 의해 학살된 동포들을 기린다"라고 적혀있다. 김중대장은 그 때 상황을 모른다고 했다. 단지 마을 밖에서 집이 불타고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고 대대에서 문의가 왔었다고 한다. "그냥 짚단을 태우는 거라고 보고했다." 결과적으로 중대장도 대대장도 모른 채 20명의 민간인이 싹쓸이에 의해 학살된 것이다.

이 뿐이 아니다. 중대장 자신이 산굴 수색과정에서 29명의 청년을 체포했다. 그들은 무기도 가지지 않았고 주변을 살살이 뒤져도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끌고 가던 중 상황실에서 긴급 작전이 떨어졌다. 소대장이 "이 놈들을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었다. 중대장은 짤막하게 '저리 끌고 가'라고 하고, 곧 이어 탕탕 총소리와 피비린내.. 다시 중대장은 '야, 확실히 해' 이로써 29명의 젊은이들은 폭탄구덩이에서 최후를 맞았다. "제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따라 수십 명이 죽과 살고 했습니다. '보내, 죽이지 마' 하면 사는 것이고 '야, 새끼들아 왜 끌고 다녀!' 그러면 한쪽으로 끌고 가 죽여버립니다...지금 생각하면 농부도 있었을 텐데"(35쪽).

이러한 지휘관의 통솔력 부재와 민간인 학살에 대한 방관은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의 민간인학살이 원천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잘 말해준다. 자성과 용기를 갖춘 김기태중대장의 아래의 여러 증언은 한국군의 일반적 양상을 잘 묘사하고 있다(44-45쪽).

울화통이 터지니까 막 쓸고 가는 거지. 적 통치지역에서는 베트남이든 베트남이 아니든 무식별이다.

모든 베트남 작전의 양상이 다 그랬다. 우리가 부상당하면 무조건 깔기는 것이...

-모든 사람을 끌고 가 부하들이 죽일 때- 중대장 입장에서는 그 중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사살을 하라고 한다. ...당시에는 양민을 죽였다고 느낄 여건이 아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양민학살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느끼고 있지만.

-명령불복종이 아니냐 하는 물음에- 작전을 하는 와중인데.. 베트남을 쫓고 있는 데.. 물론 앞에서는 제지할 수 있다. 그러나 쫓아다니면서 제지할 틈이 없다. 악에 받쳐 있는데.. 대부분 장교들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난다. 장교들이 감독을 소홀히 했기보다 넓게 작전하는 도중에 일어나니 만류할 수가 없다. 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나.

-베트남 용의자는 어떻게 하나?- 젊은 사람들은 끌고 온다. 젊은이는 베트남이라고 생각하고 끌고 다니다가 다행히 작전이 일찍 끝나면 포로로 후송한다. 그러나 작전이 일찍 끝나지 않고 아군이 피해를 받으면 제 목숨 못 채우고 죽는다고 봐야 한다.

-한국군이 귀를 자르고 코를- 실제로 그런 일 있었다. 중대원 가운데 한 명은 죽은 사람의 눈알만 파서 알코올병에 담아두는 병사가 있었다. 또 한 명은 한 쪽 귀만 잘라 모아 철사로 꿰어 막사 앞에 걸어 놓기도 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귀국할 때 기념으로 가져가겠다고 했다.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심하게- 맞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통역관을 데리고 다니기 싫어했다. 통역관이 작전계획을 적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또 마을을 싸붙이하거나 모아 놓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남베트남군과 정부 쪽에 보고하면 골치 아프니까..

나는 살인 교사이자 살인 집행관이었다.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 부하들이 죽었지만 내가 죽인 거 나 마찬가지로였다. 돌이켜보면 죄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공식문헌을 통해서 본 실태

앞에서도 밝혔지만 이러한 한국군의 민간인학살과 같은 잔악행위 가운데 3건에 대하여 최근 공개된 '주월 미군사령부 감찰부 조사보고서' (미국국립문서기록보관소 소장 RG 472)가 입증해 주고 있다. 이 공식문헌은 1968년 2월 12일 쿠앙남성 디엔반현 풍니마을(희생자 69명), 1968년 10월 22일 쿠앙남성 수엔짜현 호앙찌우마을(희생자 4명), 1969년 4월 15일 쿠앙남성 디엔반현 폭미마을(희생자 22명) 등 3마을의 학살의혹 사건에 대한 보고서이고 특히 폭미마을 사건의 경우 보고서의 작성 주체가 한.미.월 군 합동조사반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69명이 희생된 풍니마을의 경우 미 국무부 브라운 부차관보가 포터(Porter) 주한미대사에게 이 사건에 대한 한국군의 학살의혹과 관련하여 박정희 대통령에게 경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함으로써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었다. 이 결과 1970년 1월 주한 미대사 포터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통령 박정희, 국무총리 정일권, 대통령 비서실장 김경림, 외무장관 최규하 등과 긴밀히 협의했다. 동시에 <한겨레21> 306호가 '베트남 양민학살, 중앙정보부가 조사했다' 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정부가 자체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미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민간인학살문제가 한국정부 내에서도 심도깊게 논의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69년 4월 15일 발생한 폭미학살사건에 대한 한미월 세 나라의 합동조사에서 무리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음을 밝히고 있어 위의 구수정통신원의 피해자 중심의 조사와 김기태중대장의 가해자 중심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다. 극비문서로 분류된 1969년 5월 10일자 제1전략지역부대 지휘사령관 앞으로 보낸 "푸옥 마이(Phuoc My)촌과 그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약 16명의 군인과 민간인의 사상과 관련된 베트남 민간인 사망과 베트남 민간인, 지방군, 한국해병, 미군의 부상과 관련된 상황을 조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I: 21-22)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OPINIONS

5. 지뢰와 수류탄 폭발로 인해 지뢰제거팀에 희생자가 발생했고 저격으로 인한 고통을 당한 것은 충분히 납

득할 수 있으나, 마을의 남쪽 끝에서 한국해병이 광분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6. 진중위와 BOUIC하사는 각각 중대장과 분대장으로서 자신의 부하들을 적절히 통솔하지 못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가는 그들의 통솔력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을 갖게 한다.

7.... 이것은 박격포가 마을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투하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통해 장교들이 긴급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사격지원을 거리낌없이 요청했는가, 또한 허가가 용이하게 내려졌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점이 남아있다.

RECOMMENDATIONS

1. 한국해병 여단은 Phuoc My 촌의 민간인들에게 발생한 사망, 부상, 상해,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빠른 시일 내로 지급할 것.
2. 한국해병 여단은 사망, 상해,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자들에게 적절한 징계처분을 내릴 것.
3. 제1부대와 한국해병 여단은 여단과 여단책임전술지역 내 민간인간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특별히 활발한 심리작전/민간활동계획(Civic Action Program)에 착수할 것.

미 해병 대령 HAROLD W. CHASE 월남육군 중령 CAO KHAC NHAT 한국해병 소령 LEE YONG JU

또 위의 풍니마을의 경우에도 한국군의 작전 수행을 관찰하고 있던 미군 해병 연합행동소대 Delta-2 소속 본(J. Vaughn) 상병의 증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인학살을 입증된다.

2월 12일 월요일 13시 30분 경 CAP D-2 해병대와 Sylvia 대위 그리고 Seacrest 하사관은 CAP D-2 서쪽의 제 1 루트를 통해 Phong Nhi 마을에서 작전 수행을 하고 있는 한국 해병대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다. 한국군은 마을에 포격을 가한 다음 자동화기로 습격을 시작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집이 불타고 마을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민병대원 하나가 부상당한 소년과 여자를 소대로 데리고 왔을 때 비로소 나는 한국군이 마을의 민간인에게도 총을 겨누고 있고 따라서 더 많은 부상자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5시 경 우리는 Phong Nhi와 Phong Nhut으로 들어가 도와주라는 허락을 받았다. 우리의 경비대는 5명의 미해군과 26명의 민병대 그리고 S-3로 구성되었다. 나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사진 연구를 위한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가지고 갔다.

우리는 동쪽 경로의 잠복을 고려해 Phong Nhi 근처의 넓은 루트를 선택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사진에 기록되어 있다.

마을을 돌며 사진을 찍을 때 발견한 이상한 점 중 하나는 시체 더미 주위에서 총알자국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마을 주민 모두가 가까운 거리에서 총에 맞았거나 총검에 찔렸다는 것을 입증한다.

다낭지역에 근무하는 제임스 맥(James F. Mack)이 사이공의 니콜라스 쏘온(Nicolas G.W. Thorne) 정치고문에 보낸 69년 4월 25일 자 문헌인 미국정부의 메모랜덤(II: 135-137)

한국 해병들에 대한 민심은 아주 좋지 않다. 성장은 정부 관료와 일반 시민들 사이에 퍼져 있는 반한감정의 깊이와 강렬함 때문에 여러차례 경고를 받았다. 한국군의 또 다른 과잉행동(첨부문서 #16)이 있고난 며칠 후인 1969년 4월 22일 성장은 자기 관할 지역 내의 구장들에게 지시문(첨부문서 #15)을 보내 반한감정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실상 한국군이 동맹군으로서 행동하기보다는 아시아의 점령군과도 같이 행동하는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성장 자신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장의 지시가 효력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 성장은 이 문제는 한국군의 TAOR을 병사들과 민간인들의 접촉이 없는 평정 작전이 벌어지지 않는 지역으로 옮겨야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첨부문서 #16)

이렇게 민간인 학살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책임자는 이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베트남의 한국군 위장 공작에 의한 소행이라고 왜곡을 저질렀다. 풍니사건에 대한 미국 측의 조사가 실시된 후 1968년 4월 29일 웨스트모어랜드 주월미군사령관이 채명신 주월한국군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내 미군 측 조사 내용과 관련서류를 전달하고 한국군 측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130-31). 이에 대한 1968년 6월 4일 답신에서 한국군은 풍니 마을에 들어가지 않았고, 학살은 베트남이 한국해병의 복장을 입고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132-133, 134-135)하였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한국 헌병 조사계장이 이렇게 입을 맞추었다고 <한겨레21> 310호에 증언함으로써 의도적인 왜곡과 조작임이 밝혀졌다.

또한 트롱(Trung) thfud, 디엔반구 구장, CAP D-2 소속 블롱(Blong) 병장의 증언은 베트남인들이 이 지역에 자주 출몰했고, 한국 해병들이 입은 위장복과 비슷한 제복을 입고 변장하고 다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베트남인들이 한국군, 미군, 베트남군의 분열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울이는 노력과 연결해 볼 때, 대량학살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자행된 음모였다는 논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전히 위장복에 의거하여 한국군이 이 의혹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보는 것은, 적군이 꾸민 사악한 음모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군은 제네바 협정을 위반하는 어떠한 사건에도 결코 관계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고도 분명합니다.

이제까지 피해자, 가해자, 공식문헌의 검토를 통하여 우리는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을 입증했다. 문제는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서, 얼마나, 어떤 명령체계에 의해서 저지러졌느냐를 밝히는 것일 테다. 이러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사죄와 보상을 당사자와 베트남 정부에 하고 우리의 역사에 이러한 과오를 기록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곧 올바른 과거청산을 하는 것이 오늘 날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V. 미군의 민간인 학살과 전쟁범죄 양상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베트남전쟁에서 민간인 학살은 결코 한국군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그 규모나 종류 등으로 보면 한국군의 민간인학살은 지극히 조그만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속죄양이 된 한국군은 마치 민간인 학살의 대명사 취급을 받아 왔다. 미군의 전쟁범죄는 주로 참전군인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증언은 1971년 1월 31일, 2월 1-2일 사이에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Winter Soldier Investigation 증언에서 참전군인들의 폭로를 말한다.

이 행사에서 무작위적으로 증언한 여러 전쟁범죄 행위는 아래와 같다⁴²⁾. 마을 불지르고 파괴하기, 귀 베기, 목베기, 포로고문, 위생병의 부상자 죽이기, 마을에 내이팜탄 폭격하기, 강간 및 윤간, 여자와 어린이 집단학살, 화학탄을 사람들에게 사용, 가축 살해, Chieu Hoi 패스(항복전단으로 이를 가져오면 포로가 아닌 특별대우를 약속한 전단) 소지 투항자에 대한 살해, 헬기 밖으로 베트남인 밀어내어 죽이기, 재미로 최루탄 터뜨리기, 민간차량 전복하기, 농경지 파괴, 묘지 몽개기, 민간인 무차별 학살, 불질러 정찰하기(recon by fire), '미친 시간'의 무조건 총질(mad minutes), C-ration을 던져 어린이 죽이기, 부상자를 죽이고 ID를 빼앗기, 학살하고 베트남으로 분류하기 등이다(조사, 1972: 12, 20, 21, 25, 34). 이제 구체적 양태들을 위의 조사를 중심으로 몇 건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베트남전쟁에서 학살과 만행은 한국군 뿐 아니라 미군에게도 역시 발견되는 공통적인 현상이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래에는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과 만행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골라 선택적으로 제시해 보겠다.

'자유총질 가능 지역'(Free Fire Zone)과 '죽일 수 있는 지역'(Killing Zone)

이 지역에서는 총질과 학살을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어 민간인 학살과 파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지역이 사실은 거의 편의적으로 또 무제한적으로 설정되고 하였다.

"어두우면 어디나, 무엇이든 자유총질가능지역이었고 특히 교란작전 중에는 더 심하였다(조사, 1972: 16).

"해병대에게는 자유총질가능지역이 없다. 모두가 다다. 진지 근처 500yd이건 5마일이건 모두가 다다"(조사, 1972: 28).

'집중포격'(saturation bombing) 또는 '선폭격 후수색'(recon by fire)

"마을 앞 논을 수색하다 저격수의 총에 미군이 총을 맞았다. 곧 네이팜탄을 불렀다. 마을은 완전 파괴되고 타버렸다. 30명의 어린이를 비롯하여 모든 마을 주민들이 죽었다. 이에 대해 나는 '대위님. 나는 우리 비행기가 네이팜탄을 떨어뜨려 마을을 온통 파괴했군요'라고 말했다. 장교는 '베트남이 그랬다고 쓰게'.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점잖게 항의하고 나왔다"(조사, 1972: 31)..

고엽제

베트남전쟁의 여러 가지 전쟁범죄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범죄가 바로 고엽제에 의한 직·간접적 학살일 것이다. 피해 면적은 23,360평방 km로 남베트남 전영토의 1/7에 해당하고, 인구 1인당 약 6lb를 뿌렸고, 산림의 35%를 파괴하였고, 농경지의 6%에 살포되었다(Williams, 1985: 300-303). 이로 인해 수없이 많은 베트남, 라오스 및 캄보디아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한국을 비롯한 참전군인 2백5십만이 감염되었다.

미친 시간(mad minutes)

미군 병사들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하여 2개월마다 한 번 정도 2-3분의 시간을 주어 이 시간 내에 병사들이 소지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와서 진지 안의 목표물을 제외한 어떠한 것에도 자유로이 총격을 하도록 허용하는 시간이다. 이는 마치 미친 것처럼 총질과 수류탄 등을 투척하여 짓이라도 무료함을 달랜다고 한다. 뭐든지 쏠 수 있고 광란을 펼칠 수 있어 더욱 재미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진절머리나는 무료함에서 해방되는 것이다"(조사, 1972: 80).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 미친시간을 종종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 중 진지를 구축하고 난 뒤 무기점검을 하게 되는 데 이 때 2-3분 쯤 미친 시간을 갖는다. 병사들이 뒷 쪽 마을을 향하여 무차별 사격을 할 까봐 염려하는 한 병사에게 지휘관은 "상관없어!"라고 대답하였고 아무도 개의치 않았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미군들에게 "베트남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단지 총 쏘아는 표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조사, 1972: 10).

민간인 거주 마을에 대한 불지르기와 파괴행위

작전 중에 뚜렷한 혐의도 없는 데 마을을 불지르고 파괴하는 것이 다반사로 이루어졌다. 야전에서 음식을 덮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heat tablet 등은 마을 불지르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을 자제하여야 할 정도였으나 마을 불사르기는 보편적이라 볼 수 있다. 때로는 진지에서 마을이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기도 하였다(조사, 1972: 25). 또 zippo 조사라면서 zippo 라이트에 불을 켜 마을을 향하여 던져 넣어 불지르기가 있었다. 물론 마을에 주민들이 있는데도 개의치 않고 불을 질렀다(조사, 1972: 29).

반인륜적 범죄행위

무엇보다 베트남전쟁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대량학살이 자행되었을 뿐 아니라 극단적인 인종주의가 작동하여 반인륜적인 전쟁범죄가 극치를 떨쳤다. 작게는 베트남 사람 크게는 아시아사람들 전체는 처음 훈련과정에서부터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하였고 마치 동물로 취급할 것을 강요받았다. 참전병사들은 베트남 사람들을 결코 인간으로 부르지 않고 국(gook), 슬로프(slope--눈이 경사졌다고 붙이는 비하 말), 덩키(dinky--여자 음경으로 비하) 등으로 불려 비인간이라는 것을 평소에 자연스럽게 습득시켰다. 바로 이러한 인종멸시주의 때문에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면서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현상이었다. 이러한 인종주의에 기반한 반인륜 전쟁범죄는 별로 제약을 받지 않아 군 지도부에서 은근히 조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래의 것들은 이들 대표적인 경우를 서술하고 있다.

"마을에 수색 들어가 누가 베트남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 두 명의 남자를 끌고 나왔다. 한 명을 10m 높이 나무에, 뒷손을 묶은 채로 매달고, 옷을 다 벗기고, 불알에 줄을 매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줄을 확 당겨 10여 차례 고통을 주었다. 그러다 베트남군인 하나가 귀를 칼로 베어 피를 떨어뜨렸다. 미군이 다시 담뱃불로 남자의 성기를 지졌다. '이 방에 모든 참전군인들은 이런 경험담을 이야기 할 거

42) The Vietnam Veterans Against the War, *The Winter Soldier Investigation: An Inquiry into American War Crimes*, Boston: Beacon Press, 1972. 이후부터 (조사, 1972).

다. 우리만 아니었다. 모두들 안다. Calley만 아니었다”(조사, 1972: 11-12).

“전쟁포로를 산채로 배를 찢고 내장을 꺼내어 토막을 내어 다른 포로들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죽인다고 위협하였다”(조사, 1972: 13).

“마을 수색을 가면 여자들은 모두 옷을 발가벗어야 한다. 그리고 남자들은 강제로 성교를 하여야 한다. 여자 성기에 숨겨 놓은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것도 중대 수준의 장교가 보는 앞에서”(조사, 1972: 13-14).

“총 맞은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자 소대장은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옷을 벗기고 양젖을 칼로 찢고, 다리를 벌리고는 성기에 참호를 파는 도구인 E를 쑤셔 넣었다. 그래도 물을 달라하자 도구를 꺼내고 다시 나무 가지를 넣고는 총을 쏘아 죽였다. 이 짓도 조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국(gook)과 빨갱이에게는 무슨 짓을 해도 좋다”(조사, 1972: 14).

“마을에 들어가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 나무에 묶고 정찰견을 시켜 물어 뜯게 하고 전화선으로 귀와 코 및 항문을 묶었다. 여자들도 똑 같이 하였다”(조사, 1972: 32).

마을에 진입하여 주민을 죽인 이튿날 다시 마을로 내려가 장례식을 거행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사격을 가하여 죽이기도 하였다. 또 노인들을 만나면 그들의 긴 수염을 잘라버리고 이에 항의하면 두들겨 때는 것이 보통이었다(조사, 1972: 9, 27).

“미군이 오면 젊은 처녀를 감춘다. 그날도 집 지하에 숨어있는 처녀를 발견하고는 6명의 군인이 윤간을 하였다. 그것도 그녀의 가족, 미군,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였다. 내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10-15건이다”(조사, 1972: 46).

재미와 게임으로 즐기는 전쟁범죄

위의 전쟁범죄는 대부분 전투효과를 거두기 위해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전투와는 상관없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또 그저 재미로 사람을 죽이거나 인간이하로 학대하는 등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앞에서 소개한 ‘미친 시간’도 바로 무료함이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박격포초소병 대포초소병 사이 맥주내기 마을 부수기 게임을 벌였다. 아무 마을이나 집을 정해 작은 숫자의 포탄으로 먼저 완파하는 경우 맥주를 얻어먹게 된다(조사, 1972: 12).

병사에서 보초를 설 때 하루 24시간 씩 일주일을 근무하는 경우 무료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근처 농부들이 남베트남 기를 눈에 꽂아 놓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총이나 수류탄으로 그 기를 넘어뜨리기 시합을 벌인다(조사, 1972: 22).

이러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베트남참전 미군에게는 문서화되지 않은 작전지침(unwritten code)이 있었다. “외부에 발각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그저 사람만 보면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무엇이든 죽여라. 언제든 죽여라. 결코 붙잡히지 말아라.”(조사, 1972: 39, 42). 구정공세의 후에(Hue)시에서는 시민들이 가득한 변화가에 내이팝이 떨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날라 갔다. 그런데 베트남이 저지른 짓이라고 몰았다(조사, 1972: 40).

이렇듯 민간인 학살을 비롯한 전쟁범죄는 베트남참전 미군에게는 일상화된 것이었다. 원시적이고 근접적이면서 대면적인 살인에서부터 최신병기에 의한 원거리 비대면적인 학살과 파괴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참전 한국군은 으레 원시적 학살의 대명사로 알려졌다. 한국군을 희생양으로 몰아붙이면서 미국은 그래도 한국군보다 나았다는 자기방어 방벽을 쌓았다. 그러나 미군도 한국군도 민간인 학살의 대명사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단 미국은 그 규모나, 원거리 학살, 전쟁범죄 일반에서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앞서 나갔다.

VI. 한국군 민간인 학살에 대한 논쟁과 평가

한국군이 저지른 베트남 민간인학살에 대하여 참회와 사죄로 부끄러운 과거사에 용서를 비는 움직임이 우리 사회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노근리 민간인학살에 대하여 진정한 뉘우침 없이 또다시 역사를 덮어버리려는 미국의 반(反)역사적인 모습에 울분을 토하던 우리에게 베트남에서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과거사에 진정한 용서를 빌고 있는 우리 시민사회의 모습은 한결 자랑스럽다. 노근리의 원한과 고통이 밀바탕이 되어 베트남 학살에 대한 참회라는 숭고한 발돋움으로 진전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진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참전군인 일부의 응졸한 역사인식과 논리가 극복되어야 한다.

첫째는 상황논리이다. 곧 베트남과 양민을 구별할 수 없는 특수상황이었고 어차피 전쟁에서 어느 정도의 민간인학살은 불가피하였고, 그래서 우리의 과거사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 상황논리는 적군과의 직접적인 교전 가운데 의도하지 않게 양민이 희생되는 경우가 있고 따라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치 과실치사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실치사도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형사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베트남 학살은 과실치사 수준이나 직접적인 교전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수준에서 대거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농사지으러 가는 농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스님, 아내와 어린 자식 등 무장을 하지 않은 이들이 가끔씩 학살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학살유형은 작전을 나온 한국군이 마을에 들어와 마을사람들을 불러모아 음식을 나눠주어 안심시킨 후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것이었으며, 적과의 교전 중에 양민들이 사살된 것이 아니라 작전지구 근처나 교전과는 상관없는 마을이 싹쓸이에 의해 통째로 학살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 또 체포된 사람의 경우 베트남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집단적 학살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설사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통역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어로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일부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베트남’이라는 낱말 정도가 한국군 입에서 나온 것을 인지할 정도였다. 이러한 행위는 상황논리의 불가피성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무차별 살인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군인들이 아무리 긴박한 상황에 처했다고 해도 민간인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것을 용납한다면 전쟁과 야만행위가 구별 안 되는 암흑의 경지에 빠지게 된다.”

또 베트남과 민간인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상황논리는 역지에 불과하다. 한국전쟁에서도 북한군과 민간인은 인종적으로 전혀 구분되지 않았다. 민간인 대열에 북한군이 섞여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군이 한국 양민을 살상하는 행위를 우리는 상황논리라고 면죄부를 주는가? 노근리 학살 등에 우리 자신이 그토록 분노하면서 우리가 저지른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이중잣대를 낼 수는 없다. 민간인 대열에 적군이 잠입해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전쟁에서나 있는 일이지 베트남전쟁에만 해당하는 특수 상황은 아니다.

또한 한국전쟁에서 북한군과 민간인, 남한군과 민간인이 인종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미군에게나 중국군에게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었지만, 중국군의 민간인학살은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다. 그리고 스페인내전에 참전한 인민전선 의용군들은 수십 종의 인종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민간인학살은 없었다. 이는 민간인학살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상황논리가 경험적으로 반증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참전한 전쟁의 성격에 대한 이해와 참전명분을 뚜렷하게 가졌기 때문에, 학살을 저지러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과월장병은 민족해방전쟁이고 통일전쟁인 베트남전쟁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몰이해는 과월장병을 위문한 바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도 잘 나타난다. “한국 헌병이 비행장 안까지 들어와 앞뒤로 요란스럽게 호위하고... 경적을 울리며 거리를 질주하면 다른 차들은 운행을 중단하고 기다려야 했다.” 베트남 주권을 짓밟는 이러한 한국군, 아니 박정희 독재정권과 세계의 강대국인 미국의 오만은 원천적으로 민간인학살을 잉태하였던 것 같다. 이 결과 과월전쟁인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은 아군 전사 5천여 명에 적군사살 약 4만 7천여라는 무려 10배 가까운 전과를 올리는, 이해되지 않는 전쟁기록을 남겼다.

둘째, ‘사죄’는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므로 사죄를 하지 않고 어정쩡한 ‘화해’를 모색하여 어물어물 넘기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정쩡한 화해모색은 결코 화해에 이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가치 중에 가장 핵심적인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고도 이를 엄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 명예를 송두리째 짓밟히는 불명예를 맞을 것이다.

Company

Herring, George. America's Longest War, 2nd ed., (NY: Alfred Knopf, 1986).

Jones, D. and M. Jones (197*), "Allies Called Koreans: A Report from Vietnam," America's Rented Troops: South Koreans in Vietnam,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Marhan Hess. Then, the Americans Came: Voices from Vietnam, (NY: Four Walls Eight Windows, 1993)

Hersh, Seymour. 1972, Cover-Up, Random House

Kolko, Gabriel. Anatomy of a War, (NY: Pantheon Books, 1985)

Marr, David. "The Rise and Fall of 'Counter-insurgency': 1961-1964", 1965 in Gravel edition, Pentagon Papers v.5. pp. 202-210

Ratner, Steven R. 1999. "War Crimes, Categories of" in Roy Gutman and David Rieff ed., Crimes of War: What the Public Should Know, NY: Norion & Company

Scheer, Robert, "Genesis of United States Support for the Regime of Ngo Dinh Diem" in How the United States Got Involved in Vietnam (Report to the Center for the Study of Democratic Institutions), Santa Barbara, 1965

Snow, Edgar "We Stop a Revolution," in Edgar Snow, Journey to the Beginning. (NY: Random House, 1958)

Stone, I. F. "Refutation of the 'White Paper'" reprinted in Marvin Gettleman, Jane Franklin, Marilyn

Young, Bruce Franklin ed., Vietnam and America, Grove Press. 1985

Thayer, Thomas C. 1985, War Without Front: The American Experience in Vietnam, Boulder and London: Westview Press

The Vietnam Veterans Against the War, 1972. The Winter Soldier Investigation: An Inquiry into American War Crimes, Boston: Beacon Press.

Williams, William Appleman et. al., (ed.) America in Vietnam: A Documentary History, (NY: Anchor Books, 1985)

제 4 주제 :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 - 빛과 그림자

<발표자> 한 홍 구 (韓洪九)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문학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석사
- 미국 워싱턴대학교 사학과 박사
- 서울대 · 연세대 강사
- 청년학교 교무처장
- 현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현 한국전쟁 후 민간인학살 범국민 대책위원회 위원
- 현 베트남전 진실위원회 집행위원

<토론자> 한 광 덕 (韓光德)

- 1964. 2 : 육사졸업 (육군소위 임관)
- 1971. 3 : 전략정보과정 (일어)
- 1973. 6 : 한 · 미야전사편제장교
- 1974. 6 : 미 육군지휘참모 대학
- 1982. 6 : 제3야전 포병단장
- 1986. 1 : 보병27사단 부사단장
- 1986. 8 : 미 메릴랜드 대학/ 국제개발 및 분쟁관리 연구소 연수
- 1987. 7 : 한미야전사 작전참모
- 1989. 6 : 보병11사단장
- 1991. 3 : 주미국방무관
- 1994. 4 : 국방대학원장
- 1995. 6 : 소장전역
- 1996. 4 : 재향군인회 안보정책국장
- 1998. 2 : 성우회 정책위원회 안보분과 위원장
- 1998. 12 : 월간 순수문학 시인등단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 - 그 빛과 그림자

한 홍 구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 I. 머리말
- II.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 빛과 그림자
 - 3) 한국군의 군사력 강화와 남북관계
 - 4) 경제발전과 베트남 특수
- III. 민간인 학살 논란
- IV.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주월미군사령부 조사보고서
- V. 맺음말

I. 머리말

우리는 흔히 우리 한민족을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민족” 또는 “단한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는 민족”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위대한 정복군주로 불리우는 광개토대왕의 예만 보아도 이런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이데올로기가 집중적으로 전파된 박정희 시대에는 정작 우리 역사 상 최대의 해외파병인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그리고 그 기간, 한국군에 의해 베트남의 민간인 다수가 학살되었다는 의혹이 최근들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게 한국전쟁이 잊혀진 전쟁이었다면, 우리에게 베트남전쟁은 또한 잊혀진 전쟁이었다. 최대 5만, 연 인원 32만명이 이국의 전선에 파병되어 전사자 5천여명, 부상자 1만여명을 낳아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인명 피해를 가져 온 한국군의 베트남파병이 갖는 의미는 격동의 현대사를 겪는 동안 웅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한국과 일본의 이른바 국교정상화와 함께 이루어진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흔히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이 파병을 계기로 한미관계와 남북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왔으며, 박정희가 유신독재권력을 수립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최근들어 박정희 시대에 대한 재평가 문제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박정희 시대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서 필수적인 위치를 점하는 베트남 파병의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연구가 되지 않았다. 과연 베트남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박정희 시대의 형성에 어떤 식으로 기여한 것일까? 그리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민간인학살의 의혹이 한국현대사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글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몇가지 논쟁점을 중심으로 베트남 파병의 성격과 역사상 초유의 대규모 해외파병이 한국현대사에 남긴 명암을 시론적이나마 짚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II.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 빛과 그림자

1) 파병 경위: 미국의 압력인가 자발적인 파병인가?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에서의 민간인 학살의 보도의 충격 뒤에 남는 것은 당시 한국의 젊은이들이 꼭 베트남의 그 자리에 있어야 했는가에 대한 의문, 아니 회한이다. 한국군은 베트남전에 꼭 가야만 했는가?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압력을 이야기한다.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당시의 한국 상황에서 미국의 압력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⁴³⁾ 특히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한 미군 2개 사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압력을 가해왔다.⁴⁴⁾ 박정희도 1967년 4월 17일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미국과 월남이 한국군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내기 싫으면 안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여기에 있는 미군 2개 사단이 갔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⁴⁵⁾

그런데 미국의 압력을 강조하는 이런 주장은 한국군의 베트남파병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담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베트남 파병을 설명하는 공식적인 담론과도 많은 차이가 있다. 당시 박정희는 베트남 파병의 이유로 1) 전 아세아의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집단안전보장체의 도의적 책임의 일환, 2) 자유 월남에 대한 공산침략은 곧 한국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므로 우리의 월남지원은 바로 우리의 간접적 국가방위라는 확신, 3) 과거 16개국 자유우방의 지원으로 공산침략군을 격퇴시킬 수 있었던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서 한 우방이 공산침략의 희생이 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한국민의 정의감과 단호한 결의를 들었다.⁴⁶⁾

그러나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의 진실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는 지배적인 설명이나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도와준 미국 등 우방에 대한 도덕적 의무 때문이라는 공식적 담론과는 다른 곳에 있다. 최근 공개된 미국의 비밀문서를 토대로 이루어진 연구들은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을 처음 요청한 것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측이었음을 밝히고 있다.⁴⁷⁾ 사실 한국군의 파병이 미국의 압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만 볼 경우, 한국이 그토록 적극적으로 나서 연인원 30만이라는 많은 병력을 파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더구나 한국은 당시 -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 남북의 대치 속에서 독자적으로 국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국군대에 의존하고 있는 처지였다. 한국처럼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역시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베트남전의 귀추가 자기 나라에 한국에 비해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파병 제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거나 마지 못해 응했을 뿐이었다.

한국이 미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베트남전 파병의사를 밝힌 것은 1961년 11월 박정희 당시 최고회의 의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케네디와 회담한 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군사정권이 어떤 이유로 파병문제를 대미협상카드로 제기하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추론은 가능할 것이다.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당면 과제는 미국의 신임을 얻는 일이었다. 미국의 신식민지적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인사들로서는 미국의 지원을 얻는 것이 사활적인 이해가 걸린 일이었지만, 박정희의 경우는 그 이해의 정도가 남달랐다. 왜냐하면 박정희의 좌익 전력 때문이었다. 쿠데타 성공 후 박정희는 자신의 좌익경력에 의구심을 버리지 않는 미국의 신임을 얻는 데 전력을 경주했고, 마침내 미국의 초청을 받아내어 1961년 11월 중순 케네디와의 정상회담의 일정을 잡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이 회담을 코앞에 둔 1961년 10월 박정희에게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김일성이 이북정권의 무역성 부상을 지낸 황태성을 박정희에게 밀사로 파견한 것이다. 황태성은 박정희의 형으로 1946년 10월민중항쟁에 연루되어 살해된 박상회(김종필의 장인)의 절친한 친구로써, 박정희가 어린 시절부터 몹시 따랐던 인물이었다. 어렵게 마련한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박정희는 황태성이 서울에 왔다는 소식에 그를 만나는 대신, 그의 체포를 지시했다. 박정희는 황태성을 만나지 않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미국의 정보당국은 박정희가 극비리에 황태성을 3차례 만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지 않아도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에 내밀 카드가 없어 고심하던 박정희에게 밀사 황태성의 등장은 악재 중의 악재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가 케네디에게 제안한 것이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었다. 이 때는 아직 미국이 베트남전에 전투병력을 파견하여 대규모 개입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기 이전이었다. 그러나 파병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란 것은 있을 수 없는 때였다. 그런 때에 박정희는 “미국이 너무 혼자서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면서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 준다”는 명목으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제안한 것이다. 이 뜻밖의 제안에 케네디는 박정희와 예정에 없던 정상회담을 또한번 가졌고, 베트남 파병 제안으로 박정희가 자기를 아주 기분 좋게 해주었다고 치하했다. 박정희로서는 미국대통령과의 면접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이었다.⁴⁸⁾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베트남 파병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직 미국은 베트남전에의 본격적인 개입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제3국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더구나 자기 국방을 외국군대에 의존하는 나라인 한국이 다른 나라에 파병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보나 정상적인 일은 아니었다. 이 점은 미국이 우방국에 대한 군사지원요청을 위한 초기단계에서 전투병력을 요청하는 국가들의 명단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⁴⁹⁾ 그러나 1964년 4월 23일 존슨 대통령이 “보다 많은 깃발(More Flags)” 정책을 발표⁵⁰⁾하면서 한국군 참전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조금씩 변화하게 된다. 이 정책은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동맹국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와 미국인들에게 과시하려는 것으로, 베트남전에의 미국의 개입은 내전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 전쟁에 개입한 것이라는 점을 보이려 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UN을 통해 16개국의 동맹국을 끌어들이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미국의 “More Flags” 정책에 대한 동맹국의 반응은 냉담했다. 미국이 베트남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동맹국 25개국 중 이 정책에 호응하여 파병의지를 표명한 것은 한국과 대만 뿐이었다. 동맹국들의 저조한 참여는 상대적으로 박정희의 위치를 미국을 도와주는 실질적인 전략파트너로 격상시켰다.⁵¹⁾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을 미국의 강요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는 일부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파병에 관한 결정은 강대국의 요구에 의한 약소국의 불가피한 참전이라는 기존의 시각을 벗어나 박정희 대통령의 명백한 필요에 의해 개발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된 정책의 결과였다.⁵²⁾ 최근 국방부 산하의 연구기관에서 간행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관한 연구서 역시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 요구에 대해 동남아시아 조약기구(SEATO) 회원국들의 미온적 반응을 보인 반면 SEATO 회원국도 아닌 한국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파병을 결정한 것은 미국의 강압 때문이 아님을 시사한다고 밝히고 있다.⁵³⁾

한국이 베트남전에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가담했다고 해서 베트남전의 성격이나 우리 군이 가서 맞이할 사태에 대해 충분한 연구를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이 걸린 파병 문제를 다루면서 정부는 베트남의 역사나 사회, 또는 베트남전의 성격에 대해 이렇다할 보고서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베트남전에서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나 미국의 관리들은 미국이 베트남전에 대해 너무 몰랐다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베트남전에 대해 몰랐을 뿐 아니라, 알리고도 하지 않았다. 이제 베트남전의 참전용사이자 한국군의 4성장군 출신인 김진선 장군 같은 분조차 베트남전의 성격을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⁵⁴⁾하고 있지만, 당시 한국정부는 그런 전쟁의 성격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당시 한국정부가 관심을 둔 것은 베트남전 파병을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의도와, 일본이 한국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베트남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려고만 했다.

2) 한미관계의 변화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 동기의 하나는 한국정부가 파병을 통해 대미관계에서 한국의 위치를 개선해 보려

48) 박정희와 케네디 간의 회담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4, 1999, 서울, 조선일보사, pp. 363-370을 볼 것.

49) 김기태, 앞글, p.98.

50) 존슨 행정부의 More Flags 정책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Robert Blackburn, *Mercenaries and Lyndon Johnson's "More Flags": The Hiring of Korean, Filipino, and Thai Soldiers in the Vietnam War*, 1994, London, McFarland & Company, Inc., pp. 1-30을 참조할 것.

51) 홍규덕, 『베트남전 참전 결정과정과 그 영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대외관계와 남북문제』, 1999, 서울, 백산서당, p.62.

52) 홍규덕, 앞글, pp. 55-66. 이 논문은 박정희 정권이 얼마나 집요하게 미국에 대해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요구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53) 『월남파병과 국가발전』, 1996,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pp. 152-153. 또한 군사평론가 박경석 장군도 한국군 파병 결정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미국의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정은 어디까지나 박대통령의 결단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경석, 『월남전 한국군 참전의 재평가』, 『군사논단』 14·15호, 1998년 봄·여름호, pp. 264-265.

54) 김진선, 『산 자의 전쟁, 죽은 자의 전쟁』, 2000, 서울, 중앙 M&B.

43) 한 예로 한승조·강종희, 『박정희 봄, 우연인가, 필연인가』(1999, 서울, 말과 창조사, p.42)는 미국측의 압력에 때문에 박정희 정권도 마음 속으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악역(惡役)을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기태도 한국군의 파병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한국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기태,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과 한미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 pp. 94-96.

44) 『조선일보』 1965년 6월 29일; 초대 주월한국군 사령관을 지낸 채명신 장군도 2000년 7월 6일 'MBC 100분토론'과 『월간 조선』 2000년 8월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 점을 특히 강조했다.

45) 대통령 비서실,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 제4집, pp. 191-193.

46) 『월남파병에 즈음한 박정희대통령의 담화문』, 1965년 1월 26일, 국방부, 『과월한국군전사』 10권, 1985, 서울, 국방부, 부록, pp.619-620.

47) Donald Macdonald, *U.S.-Korean Relations from Liberation to Self-Reliance: The Twenty-Year Record*. Boulder, Westview Press, 1992.

는 것이었다.⁵⁵⁾ 실상 한국과 베트남과의 관계를 살펴서는 베트남 파병을 이해할 수 없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군의 참전을 달가워하지 않았다.⁵⁶⁾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은 한국-베트남 관계가 아니라 한국-미국 관계에 의해 결정되었다. 한국이 베트남에 파병한 것은 베트남의 우방국으로서가 아니라 미국의 우방이기 때문이었다.⁵⁷⁾ 한국은 많은 젊은이들의 피의 대가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오랜 기간 한미 간에 현안이 되어 온 한미행정협정(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 SOFA)의 체결, 군원이관계 회의 중지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및 한국에서 북한의 침공이 있을 때 미국의 자동개입 문제 등은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베트남전 참전은 분명 한미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고,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거둔 성과가 과연 한국군 참전의 대가로 합당한 것이었는지는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그 성과가 국가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의 이익으로 그친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본다.

(1) 미군 철수 문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최우선적으로 얻어내고자 했던 사항은 바로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보장이었다. 한국정부의 줄기찬 노력으로 한국정부는 1966년 2월 서울을 방문한 미국 부통령 험프리로부터 “군사분계선에 1명의 미군이라도 주둔하고 있는 한 미국은 전국력을 다하여 한국의 안보 및 방위공약을 이행하겠다. 한국은 오늘날 미국과 한국을 합친 만큼이나 강력하다. 미국은 오늘날 미국과 한국을 합친만큼이나 강력하다. 우리는 우방이며 친구다. 여기에는 아무런 이론이나 의문도 있을 수 없다.”⁵⁸⁾라는 발언을 끌어냈다. 험프리의 이런 립서비스는 미 의회의 사이밍턴 청문회에서 풀브라이트 의원으로부터 “이 따위 미사여구로 표현된 조약은 일찍이 본 일이 없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⁵⁹⁾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바란 것은 단지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만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존재가 갖는 의미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몬로주의 방식에 따른 것으로 이에 의하면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을 때 미국은 자동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헌법질서에 따라 미국이 취할 행동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었다. 한국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북대서양조약, 즉 한 조약국에 대한 공격을 조약 가맹국 전체에 대한 공격, 즉 미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미국은 미국 본토가 공격당한 것과 같이 행동하도록 되어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를 원했다.⁶⁰⁾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미국정부가 베트남 파병에 대한 대가로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내용을 담은 1966년 3월 4일자 「브라운 각서」는 한국에서의 무력충돌상황 발생시 미국의 자동개입은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⁶¹⁾ 이는 한국정부를 자극했고, 한국정부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브라운 주한미국대사는 3월 7일과 8일에 이동원 외무장관 앞으로 연거푸 서한을 보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약속했다. 그러나 브라운은 사이밍턴 청문회에서 이 서한의 의미를 “한국측은 항상 미국이 한국의 동의없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않도록 확약받길 원했는데 이것(앞의 서한들-인용자)은 이 확약을 거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브라운의 후임으로 주한미국대사가 된 포터는 “우리(미국-인용자)는 군대를 철수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그들(한국-인용자)에게 한 일은 없다”며 “우리는 협의없이 철수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⁶²⁾ 그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주한 미군의 계속 주둔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공약도 없으며, 미국정부가 한국에 새로운 다짐을 준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55) Princeton Lyman, "Korea's Involvement in Vietnam," *Orbis*, Summer, 1968, pp. 563-565.

56) Stanley R. Larsen and James L. Collins, *Allied Participation in Vietnam*, 1985,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p.9.

57) Sung-joo Han, "Sou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Vietnam Conflict: An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Korean Alliance." *Orbis* 21:4 (Winter 1978), p.893.

58)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 사이밍턴위원회 청문록』, 1971, 서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이하 이 자료는 『사이밍턴위원회 청문록』으로 줄여 인용), p. 20.

59) 『사이밍턴위원회 청문록』, p.30.

60) 김기태, 앞글, pp. 148-149.

61) 「브라운 각서」의 전문은 『파월한국군전사』 10, pp. 649-653을 볼 것.

62) 『사이밍턴위원회 청문록』, p.64.

이런 미국의 태도는 1969년 닉슨대통령의 팜독트린 발표 이후에 주한미군의 철수로 현실화되었다. 미국은 1970년 7월 52,000명의 주한미군 중 1개 사단 2만여명을 1971년에 철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주한미군의 철수에 관한 사전협의를 한국정부는 동의로 생각한 반면 미국은 이를 사전통보 정도로 여긴 것이 이 때보다 분명해진 적은 없었다.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의 부분철수 계획이 전면철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미국에 대해 주한미군의 철수는 우방국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예정대로 1971년 3월 휴전선 서부전선의 방위를 담당해 온 7사단을 철수시켰다.

이 무렵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북한을 극도로 자극하여 1968년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기습사건,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등이 일어나고, 군사분계선에서의 남북간의 무장충돌이 급증한 직후였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단행한 것은 박정희가 가장 주력했던 주한미군의 현상유지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증명한 것이다.

(2) 작전지휘권 문제와 한국군에 대한 '용병' 논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1950년 7월의 대전협정으로 미군에 이양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베트남에 파견된 한국군은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고 명령을 집행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1964년 10월 31일 한국군의 베트남 내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수행권을 갖게 되었다.⁶³⁾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미군에게 있음을 들어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역시 장악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당시 국방장관 김성은은 “지휘권을 미군에게 넘겨주면 한국군은 위험지역에 투입되기 쉬우며 전투손실만 증가하고 실익을 얻지 못한다. 만약 한국군이 독자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비교적 안전한 해안지대에 배치된다면 전투손실을 줄일 수 있고 국내업체의 월남 진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⁶⁴⁾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이 주월한국군사령관에 있다는 사실은 1965년 9월 6일 각각 체결된 「주월 한·미군사실무약정서」와 「한·월군사실무약정서」에서 확인되었다.⁶⁵⁾

그런데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베트남군이 미군에 의해 지휘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군이 베트남에서조차 미군의 지휘를 받을 경우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이었다.⁶⁶⁾ 미국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미국은 주월미군사령관 웨스트모어랜드가 한국군에 대한 전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성문화할 것을 원했으나, 이를 문서화할 경우 한국군이 미국의 '용병'이라는 비난을 불러와 한국을 곤혹스럽게 할 것이며, 주월한국군의 채명신 사령관이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의 '사실상의' 작전지휘권 행사에 전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문서화로 나아가지는 않았다.⁶⁷⁾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이 미국의 '용병'이라는 비난은 북베트남이나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은 물론이고, 국내에서 파병을 반대하는 일부 인사들 뿐 아니라 심지어 미국 관리들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⁶⁸⁾ 1970년 2월에 열린 미상원 사이밍턴 청문회도 바로 한국군에 대해 미국이 비밀리에 지급해 온 해외복무수당이 바로 한국군을 미국이 '용병'으로 고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에 열리게 된 것이다.

국제법상 '용병'이란 충당당사국의 국민 또는 그 지배지역의 거주자가 아닌자로서, 본질적으로 사적 이득에 대한 욕망으로써 모집에 응하여 전투행위에 응하여 직접 가담하는 자를 말한다.⁶⁹⁾ 이렇게 볼 때 국제법상의 용병은 개인이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해 행한 참전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자국 군대를 해외에 파견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군의 경우 미국에 의해 모든 경비가 지출되었고, 미국의 경비부담이 없었을 경우 파병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용병'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특히 한국이 자유세계에

63) 홍규덕, 앞글, p.65.

64) 김성은, 「월남파병」, 『전환기의 내막』, 서울, 조선일보사.

65) 각각의 문서 원문은 『주파월한국군전사』 10, pp. 668-675를 볼 것.

66) 노재현, 『청와대비서실』 2, 1993, 서울, 중앙일보사, pp. 215-216.

67) Larsen and Collins, 앞 책, pp. 133-134.

68) 미국 관리들이 한국군을 용병이라고 부른 사례는 Frank Baldwin, "The American Utilization of South Korean Troops in Vietnam," Frank Baldwin and Diane & Michael Jones, *America's Rented Troops: South Koreans in Vietnam*, 1974,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p.2를 볼 것.

69) 「제네바 제1추가 의정서」 제47조 2항, 이장희, 「한국의 국가책임 면제될 순 없다: 국제법적으로 풀어본 베트남 양민학살」, 『한겨레 21』 제291호, 2000년 1월 13일자에서 재인용.

진 빚을 갚기 위해 참전했다고 대외적으로 공인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 줄기차게 한국군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사실⁷⁰⁾은 사이밍턴 청문회에서 폴브라이트 의원 등으로부터 “만약 한국군이 자신을 용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한 애국적 이유에서 파병된 것이라면 우리는 왜 이런 협정(해의복무수당 지급에 관한 약속 - 인용자)을 만들었는가?”라며 “한국은 우리의 요청과 측구에 따라 좋은 상거래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비난을 초래했다.⁷¹⁾

한국군이 과연 ‘용병’이었는가 여부는 쉽게 단정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폴브라이트 의원이 집요하게 추궁한 것처럼 돈과 명예를 모두 다 가질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한국군의 ‘용병’ 논란과 관련하여 한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당시 박정희 정부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베트남의 전선으로 파견된 장병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 얼마나 충실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당시 외무장관 이동원은 “월남은 전장터이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이라며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취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정희는 “미국이 어려운 틈을 타서 우리가 타산적으로 나간다면 너무 야박하지 않은가”라는 입장을 보였다.⁷²⁾ 누구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인지 모를 박정희의 태도가 낳은 결과는 참담했다. 한국군 사단장인 소장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월 급여가 354\$인 반면, 필리핀군과 태국군의 소대장인 소위는 각각 매월 442\$, 389\$를 받았다. 일반 사병들의 경우는 남베트남군의 월 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다.⁷³⁾

<표 1> 베트남에 파병된 각국 장병의 월 보수액 (단위: \$)

출처: 『합동연감』 1967년판

	한국	베트남	미국	필리핀	태국
소 장	354.16	217.38	1,294.15	-	-
준 장	320.00	212.35	1,060.65	641.60	-
대 령	291.72	170.43	833.15	590.40	590.76
중 령	256.67	153.66	686.65	539.20	563.39
소 령	224.57	138.56	601.45	500.80	518.43
대 위	190.40	123.48	569.05	475.20	406.92
중 위	166.70	111.74	483.85	454.72	396.19
소 위	151.55	103.35	435.85	441.92	389.33
준 위	137.74	86.58	430.15	404.80	-
상 사	102.50	76.51	402.25	284.80	266.39
중 사	86.35	69.82	366.25	282.24	261.51
하 사	82.90	68.13	333.35	279.68	257.60
병 장	64.47	62.64	304.75	-	-
상 병	56.83	58.53	259.15	-	-
일 병	51.36	57.16	238.73	-	-
이 병	51.11	55.79	235.15	-	-

또한 미국은 한국군의 파병으로 자기네의 인명손실을 줄인 것은 물론, 보다 많은 깃발을 추구한 정책에서도 큰 성과를 얻었다. 미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비용절감 효과를 보았다. 주월한국군 1인당 유지비가 연간 5천\$인 반면, 미군 1인당 유지비는 13,000\$였으니⁷⁴⁾, 그 차액 8천\$을 한국군 파병 연인원 30만으로 곱하면 미국은 무려 24억\$의 경비절감 효과를 본 것이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재정지원 요구를 터무니없는 액수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는데⁷⁵⁾ 이는 한국군의 참전으로 미국이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정치적 효과, 즉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개입이 국제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과시할 수 있는 점과 한국군이 미군이 흘릴 피

를 대신 흘리고 있다는 점 등 이외에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미국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교섭에서 한국장병들에게 더 많은 보수를 가져다 줄 수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정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포터 주한미대사는 “미국의 재정지원 내용에 관한 협상이 일단 끝난 뒤로는 한국정부는 만 국가가 한국보다 더 받고 있느니 어쩌니 하는 따위의 문제를 가지고 미국을 괴롭히지 않았다”고 증언했다.⁷⁶⁾ 외국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얻는 파병 자체의 정당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자기나라 군대를 파병했다면 그들의 생명보호와 정당한 처우 보장에 힘써야 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책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당시 박정희 정권이 보인 행태는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것이다.

(3) 한국정부의 대미교섭력과 독재권력의 강화

한국이 베트남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1965년은 그동안 일방적인 관계였던 한미관계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룬 해로 평가된다. 손슨행정부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의 정통성에 관한 모든 유보 조치를 해제하고 박정희의 통치능력에 대해 지나칠 정도의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1948년 이후 관례적으로 계속해 온 한국의 국내문제에 관한 압력을 중단했다.⁷⁷⁾ 박정희 정권은 베트남 파병으로 인해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했으며, 또한 베트남 특수와 무관하지 않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상당히 고무되었다. 이에 박정희는 3선개헌을 추진하며 장기집권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1968년 1월에 이를 간격으로 일어난 두 사건은 박정희로 하여금 미국과의 관계에서 위기감을 가져다 주었다.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기습사건에 대해 미국은 극히 소극적으로 대한 반면,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에 대해 아무런 군사적 보복행위를 하지 못한 채 간첩행위를 인정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 두 사건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미국과 동반자 관계에 들어섰다고 자만해 있던 박정희 정권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여기에 1971년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철수가 이루어지면서 박정희 정권의 미국에 대한 불신은 증대되었다. 박정희는 미국 행정부 뿐 아니라 의회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모색했고, 그런 움직임은 1970년대 초반 이래 박동선 등의 맹렬한 한국식 로비로 나타났다. 또한 박정희는 이 시기의 국제적 위기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10월유신이라는 친위쿠데타를 감행했다.⁷⁸⁾

그런데 박정희는 3선개헌과 유신체제의 수립 등 독재권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별다른 제재나 간섭을 받지 않았다. 또한 중앙정보부와 박동선의 로비활동 등에 대해 미국은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주한미대사 포터는 이를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을 참작한 행정부 고위관리들의 관대함 때문이었다고 프레이저 청문회에서 증언했다.⁷⁹⁾ 즉,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으로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지지를 얻어 이를 독재권력 강화에 이용한 것이다.

비록 박정희가 1970년대 들어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만을 갖고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모색했지만, 그가 당시의 국제정세에 정확하게 대처하거나 아니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구조적인 종속성을 탈피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의 국제정세 변화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베트남전의 종전과 더불어 펼쳐지는 새로운 국제체제의 변화에 적응하고자 노력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미국의 태도변화에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미 의존을 줄여 나가지 못했다. 한국의 경우 미군철수 불가만을 되풀이할 뿐, 미국의 국내여론이나 국내정치적인 요구사항을 읽는 데 실패했다.⁸⁰⁾

또한 박정희 정권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교섭력을 증진시키려는 애초의 목적을 거의 달성하지 못했다. 먼저 베트남 파병을 자청하고 나선 한국정부로서는 미국에 대해 강력한 요구를 하기 힘들었으며,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브라운 각서」를 통해 한국의 요구조건들이 일부 반영이 되기도 했지만 미국은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명시규정이 없는 모호한 내용의 「브라운 각서」를 담보로 한국측으로서도 더 이상 미국의 약속이행을 요구하기 힘들었다.⁸¹⁾ 요컨대 박정희 정권은 한국의 구조적인 대미 종속성과 그에 따른 허약한 교섭지위 때문에 베트남 파병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도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적 보장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다.⁸²⁾

76) 같은 책, p.77.

77) 김기태, 앞 논문, p.141; 『월남파병과 국가발전』 p.226.

78) 배궁찬, 「1970년대 전반기의 국제환경 변화와 남북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서울, 백산서당; 정영국, 「유신체제 성립 전후의 국내정치」, 같은 책.

79)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 편, 『프레이저보고서』, 1986, 서울, 실천문화사, pp. 24, 64.

80) 홍규덕, 앞글, pp. 92-93.

81) 같은 글, pp. 73-74.

82) 김유향, 「한국의 베트남전 개입에 관한 연구 - 국가의 역할과 성격 중심으로」, 1988, 이화여자대학교

70)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Robert Blackburn, 앞 책, pp. 31-66을 참조할 것.

71) 『사이밍턴위원회 청문록』, pp. 56, 80.

72) 『월남파병과 국가발전』, p.176.

73) 한국군, 미군, 태국군, 필리핀군, 베트남군의 급여에 관한 통계는 『합동연감』 1967년판을 참조할 것.

74) 『사이밍턴위원회 청문록』, pp. 65-66.

75) Robert Blackburn, 앞 책, p.62.

3) 한국군의 군사력 강화와 남북관계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가져 온 성과의 하나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한국군의 군사력 강화이다. 실제로 한국군의 군사력은 미국 군사원조의 증대, 군원기관계획의 중지, 실전 경험의 축적 등을 통해 상당히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효과가 과장되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냉전 체제 하의 군사적 대치의 특성 상 한국군의 군사력 강화는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가져와 제로섬 게임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⁸³⁾

북한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해 극히 예민하게 반응했다. 김일성은 “월남문제에 대한 태도는 혁명적 입장과 기회주의적 입장,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민족이기주의를 갈라 놓는 시금석”이며, 조선로동당은 “월남 인민의 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월남 민주정부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나 지원병을 파견하여 월남형제들과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⁸⁴⁾

베트남 인민들의 투쟁을 돕겠다는 김일성의 발언은 곧 군사분계선에서의 긴장고조로 나타났다. 1965년과 1966년 각각 88건과 80건이었던 군사분계선에서의 충돌은 1967년 784건, 1968년 985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⁸⁵⁾ 그리고 1968년 1월에는 청와대 습격사건과 프예블로호 남북사건이라는 초대형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워싱턴과 서울의 당국자들은 이런 움직임이 베트남에 대규모의 병력을 파견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압력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군을 베트남에 증파하려던 논의는 한반도에서의 급격한 긴장고조로 인해 사그러들었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한국에 유신체제라는 권위주의 체제의 성립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북한의 체제 역시 고도로 경직되게 만들었다. 1967년 4월의 조선로동당 4기 15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북한 체제는 그 이전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유일사상체제로 변질되었다.⁸⁶⁾

4) 경제발전과 베트남 특수

한국은 베트남 파병으로 인해 이른바 베트남 특수를 보았고, 이는 한국경제가 도약하는 데에서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는 데에는 모든 연구자들이 일치할 보고 있다. 자료와 계산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한국은 이른바 베트남 특수를 통해 약 10억\$ 내외의 외환수입을 올렸다. 베트남의 정글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벌어들인 10억 달러가 한국경제의 발전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에서 베트남 참전이 유일한 독립변수가 아니었다는 점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⁸⁷⁾

한국경제의 발전에서 베트남에서 피흘린 참전용사들의 기여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전쟁이라는 불행한 기회를 틈타서 경제적 이익을 본다는 것이 갖는 도덕적 문제는 잠시 미루어 두더라도, 과연 한국군의 참전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른 대가와 기회비용, 즉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지 않았더라도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고려하여 냉정한 평가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과연 베트남에 한국군이 파병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베트남 특수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을까? 미국 시장이 열린 것도 베트남 파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베트남 특수의 최대의 수혜자는 피한방을 흘리지 않은 일본이었다. 일본은 매년 우리가 베트남 특수의 전 기간 벌어들인 금액을 훨씬 넘는 달러를 벌어들였다.⁸⁸⁾ 물론 한국과 일본의 경제규모나 발전수준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베트남의 하늘에 보다 많은 깃발이 휘날리길 원했던 미국의 요구에 따라 단 20여명의 상징적 병력을 파견한 대만, 한 사람의 병력도 파견하지 않은 싱가포르나 홍콩이 베트남 특수를 누리지 못하거나, 냉전의 정치경제적 논리 속에서 선택적으로 개방된 미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p.42.

83) 정상호, 「한국의 베트남전 개입의 정치·경제적 의미」, 1992, 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p.81.

84)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 조선로동당 대표지회에서 한 보고」, 1966년 10월 5일, 『김일성 저작선집』 4, 196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p. 325-328.

85) 정상호, 앞 논문, p.83.

86)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 지도사상과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1995, 서울, 역사비평사, pp. 303-314.

87) 정상호, 앞 글, p.58.

88) 베트남전을 통해 일본이 거둔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Thomas Havens, *Fire Across the Sea: The Vietnam War and Japan, 1965-1975*, 1987,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를 참조할 것.

국시장에서 배제되지는 않았다. 한국이 연인원 32만명을 파견하여 5천여명의 전사와 1만여명의 부상자, 그리고 2만여명의 고엽제 피해자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명피해에 민간인 학살이라는 명에 미국의 ‘용병’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베트남전에서 얻은 경제적 소득은 겨우 20여명의 병력을 파견한 대만이 얻은 소득을 약간 상회하는 것이었다.⁸⁹⁾

III. 민간인 학살 논란

한국군의 베트남파병과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두가지 문제는 대를 이어 계속되는 고엽제 피해와 최근에 강력하게 제기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이다. 이 중 민간인 학살 문제는 아직은 진상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의혹 수준이지만,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서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약 80여건의 학살 사례가 발굴되었지만, 참전용사 전체가 학살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 공포와 혼란과 광기의 현장에서도 대다수의 참전용사들은 민간인 보호에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월한국군 사령부의 ‘3훈5계’에서 잘 지적한 것처럼, 김소령이나 최일병이 잘한 일도, 박대위나 이병장이 잘못된 일도 다 따 이한이 잘했다 못했다고 불리어지게 되어 있다.⁹⁰⁾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문제가 작년 가을부터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면서 우리는 당혹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거센 강도로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간인 학살이라니, 그런 일은 없었고, 듣도 보도 못했다” 처음에는 이런 식의 완강한 부인이 반론의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베트남에서의 현장취재 앞에 이런 반론은 힘을 잃었다. 사실 30대 후반 이상의 사람이라면 민간인 학살은 공공연한 비밀이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동네 이발소에서, 중국집에서, 교련시간에, 군대에서, 예비군 교육장에서 우리는 그럴싸한 무용담으로 포장된 한국군의 보복전술과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 돌이켜 볼 때 더 끔찍한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빨갱이는 죽여버려야 한다”는 생각에,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태도까지 더하여 이런 이야기를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한국군이 거쳐간 베트남의 마을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죽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이제 베트남전에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논란은 민간인의 죽음이 없었다는 전면적인 부정을 넘어서 그 죽음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전쟁에서의 민간인피해는 불가피하다. 의도적인 학살은 없었다.” “베트남 전쟁은 적군과 민간인이 구분이 안가는 전쟁, 전선이 따로 없는 전쟁이었다”라고.

한국전쟁과 더불어 베트남전쟁은 평화애호가들에 의해 “더러운 전쟁”이라고 불리고 있다. 대대적인 무차별 폭격으로 인해 그 어떤 전쟁보다도 민간인 피해가 많았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대전은 불행히도 민간인 피해가 점점 더 커지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민간인 피해를 막자는 것이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는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민간인 학살이란 일반적인 민간인 피해와는 의미를 달리한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에서 문제삼는 것은 민간인 학살이지 민간인 피해가 아니다. 물론 진실위원회는 전쟁과정에서의 민간인 피해도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교전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베트남전이 베트남과 민간인이 구분되지 않은 전선없는 전쟁이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린 꼬마조차 사탕을 받아들고서 뒤돌아서 수류탄을 던지고 달아나는 일도 있었다하니 모든 민간인이 베트남으로 보였을 것이다. 전선이 없는 전쟁, 민간인과 베트남이 구분이 안되는 유격전쟁. 낯설은 베트남의 정글에 내던져진 한국군 병사들의 혼란과 공포는 극에 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논리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전선이 없는 전쟁, 유격대와 민간인이 구분이 되지 않는 전쟁은 우리의 근현대사 속에도 얼마든지 있었다. 1894년의 농민전쟁, 의병운동,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군운동, 공산주의 계열의 항일빨치산 운동 등도 모두 전선이 따로 없었고, 유격대와 민간인의 복장이 구분되지 않는 전쟁이었다. 설혹 피살자가 베트남 내지는 이른바 ‘통비분자’, 즉 베트남을 지원하는 민간인이었다 하더라도 교전이 끝난 상황에서의 학살은 분명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전쟁범죄일 뿐이다. 일본군이 우리 독립군을 돕던 마을에 들어가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노근리에서 미군이 우리 민간인들을 학살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가 베트남에서 민

89) 『사이명턴위원회 청문록』, pp. 45, 310.

90) 『주월 한국군의 3훈5계』의 전문은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파월한국군전사』 10, 1985, 서울, 국방부, pp. 742-748을 볼 것.

간인을 죽인 것이 어떤 이유라든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중잣대를 버려야 한다.

불행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항변은 이어진다. “우리만 죽었나? 남들도 용서를 빌지 않는데, 왜 우리만 사죄해야 하나?” “베트남정부도 사죄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 왜 먼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들추어 내나? 누워서 침뱉기다.” “조국의 부름을 받고 간 우리가 학살자냐?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짓밟지 말라.”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자는 전쟁을 이야기 말라!”

박정희는 케네디에게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군을 베트남전에 파병시키겠다고 제안했다. 해외의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미국의 “용병”으로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참전한 한국군에 차려진 것은 귀찮고 인명손실의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민간인 학살의 위험성이 높았던 토벌작전이었다.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간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에 의한 학살의혹이 제기된 민간인 9천명이라는 숫자가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사실 극히 낮은 것이다. 민간인 사상자의 대부분은 미군의 용단폭격에 의해 발생했으며, 민간인 학살에서도 미군에 의한 학살이 한국군에 의한 학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발생했다.⁹¹⁾ 따지고 보면 용단폭격에 의한 대규모 살상이 더 참혹한 것이겠지만,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이루어진 대량학살보다 근거리에서의 민간인 처형이 더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용병”이라는 부끄러운 위치가 민간인 학살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남긴 것이다.

당시 한국군의 작전은 미국 의회의 사이명턴 청문회에서도 누차 지적된 것처럼 순수한 전투와 토벌작전을 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베트남전에서의 토벌전략은 유격대 활동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자연촌락이나 산재호를 분쇄하고, 주민들을 신생활촌이라 불리는 전략촌으로 옮겨 유격대와 주민의 접촉을 차단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전략은 1930년대 만주에서 일본군이 조선과 중국의 항일유격대를 대상으로 엄청난 폭력을 수반한 집단부락 건설 중심의 비민(匪民)분리전략을 그대로 빼담았다.⁹²⁾ 한국군의 수뇌부는 일본군, 만주군 출신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조선인으로 구성된 일제의 유격대 토벌부대인 간도특설대 출신들은 한국군의 수뇌부에 대거 포진했다. 실상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채용한 토벌전술의 원형은 일본군이 만주에서 항일유격대를 토벌하면서 개발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공비토벌 작전에서 한국군은 이 전술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러나 만주에서는 물론,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공비토벌작전에서도 이 전술은 거창, 산청, 함양 등 숲 한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의 쓰라린 역사를 남긴 바 있었다. 자기 나라에서조차 민간인에 대한 오인 학살이 빈발했던 한국군의 전술적 특성 상, 낯설은 남의 땅에서 민간인 학살이 가능성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까닭에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의 토벌작전에 닮는 대로 죽이고, 불사르던 일본군의 잔재가 남아 있다가 발현된 것도 무리는 아니다.

1966년 5월 25일 주월한국군사령부가 발간한 전훈집은 “부락은 모든 적활동의 근거지”이며, “게릴라의 보급, 인적자원 및 정보수집의 근원은 부락에 놓여 있으며 베트남 하부구조의 기반은 부락과 주민이다”라고 강조했다.⁹³⁾ 불행하게도 이 전훈집은 앞서 소개한 전사복무규정의 상위적 훈계에 비해 훨씬 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토벌에 나서 마을에 발을 들여 놓을 때, 적들의 잠재적 기반인 마을주민들에 대한 학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는 불행했던 우리 근현대사의 상처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베트남에 파병된 장병들은 중대장급이 1935년을 전후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일반 병사들은 대개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출생했다. 그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한국전쟁의 살육을 겪었고, 그들이 겪은 모든 불행은 빨갱이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교육받았다. 빨갱이는 인간도 아니고, 동족도 아니며, 빨갱이일 뿐이었다. 빨갱이는 죽여도 좋은, 아니, 죽여야만 하는 존재였다. 강력한 극우반공이데올로기의 세례를 받으며 자라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빨갱이 사냥에 나설 심리적 준비를 잠재적으로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병사들은 식민지 시기 일제에 의한 학살의 피해자였다가, 냉전체제의 확립과정과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좌우의 상호 간의 동족 내부의 학살에서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급속히 변모한 불운한 민족의 가난한 아들들이었다.⁹⁴⁾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배한 뒤 미국 내에서는 베트남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것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실패의 원인의 하나였다. 그러나 우리는 베트남에 대해 몰랐을 뿐 아니라, 알고도 하지 않았다. 극도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 왜 우리가 머나먼 베트남의 정글에 끌려와 남의 전쟁에서 피를 흘려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맹목적인 극우반공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일부 우리 병사들에 의해 분명히 민간인 학살은 자행되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학살이 있었다고 해서 30만 참전용사 전체가 학살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 공포와 혼란과 광기의 현장에서도 대다수의 참전용사들은 민간인 보호에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필자 역시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백명의 조선인을 죽이면 그 중에 적어도 한명은 공산주의자일 것”이라며 간도를 피바다에 잠기게 했던 일본군의 만행과는 분명 달랐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의도적인 학살”이 아니었다는 것이, 민간인과 베트남의 구분이 힘들었다는 상황논리가 결코 수천명의 민간인이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덮을 수는 없다.

우리는 학살이란 말의 무게 때문에 학살을 아주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모든 병사들이 각종 선진적인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현대전에서 학살은 별로 특별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주 우발적으로,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학살보다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학살의 목인과 동조, 은폐이다. 사실 베트남전에서 사이공 정부 관할하의 농촌 지역의 주민 대부분은 베트남을 지원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우리 병사들은 그들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전우들 밖에는 없었다. 그런 소중한 전우들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는 총탄에 쓰러졌을 때, 병사들은 자연 공포와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이다. 지금 민간인 학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진실위원회 사람들 역시 그 때 그 자리에 놓였다면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전투가 끝난 뒤 마을사람들을 다 모아 놓은 상황에서, 살상무기를 모두 갖고 있던 우리 병사들 중 어느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 보복의 총탄을 날린다면? 지휘관은,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를 체포하여 상부에 보고하여 군법위반으로 재판에 회부하였을까? 확고히 그를 제지하고 마을에서 빠져나와 오늘 일을 절대 발설하지 말기로 하였을까? 누군가가 살아남아 있다면 뒤에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직 숨어 있는 사람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렇게 희생된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전과에 포함해 상부에 보고하였을까? 만일 복수심에 잠시 눈이 멀어 방아쇠를 당긴 부하나 동료를 상부에 보고하여 적법절차를 밟지 않게 하였다면 -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학살의 은폐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IV.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주월미군사령부 조사보고서

지금까지 한국군에 의한 학살 의혹이 제기된 사건은 80여건으로 피해자수도 9천여명에 달한다. 이 사건들의 대부분은 피해자인 베트남인들에 의해 제기된 주장이고 가해자측이라 할 수 있는 한국군 측에서는 극히 일부의 장교와 사병들만이 자신들의 경험을 증언한 바 있다. 한국 정부 당국은 공식적으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전혀 일어난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따라서 이 사건들은 아직까지 의혹으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00년 6월 1일 미국에서 기밀해제된 한국군의 만행 의혹에 관한 미군 측의 조사보고서는 이런 의혹들 중 적어도 일부는 사실이었음을 입증해 주는 최초의 문헌자료이다. 자료의 내용은 그동안 소문으로, 또는 피해자 측의 증언에 의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또한 이들 자료를 보면 미군 당국은 이 번에 확인된 사건들에 대해 자체조사를 한 데 그치지 않고 주월한국군사령부나 주월한국대사관, 그리고 한국정부에 통보했다. 또 1969년 4월 15일 쿠앙남성 지 쉐엔현 폭미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는 미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조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미군과 월남군의 압력으로 미군의 체이스 대령을 책임자로 하여 한국 해병 제2여단의 이영주 소령이 포함된 한미월 3군 합동조사반이 결성되었다. 베트남 민간인 4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해병 제2여단의 이영주 소령이 조사반에 포함되고 해병 제2여단 이동호 준장이 부처한 합동조사반의 1969년 5월 10일자 공식보고서는 “한국해병이 저지른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결론지었다.⁹⁵⁾ 당연히 이 보고서는 지휘계통을 통해 한국정부에 보고되었을 것이다. 또 1970년 1월 주한 미대사 포터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통령 박정희, 국무총리 정일권, 대통령 비서실장 김정렴, 외무장관 최규하 등과 긴밀히 협의했다.⁹⁶⁾ 따라서 한국정부가 이

95) “Alleged Atrocity Committed by ROK Marines on 15 April 1969,” 1970년 1월 10일,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부.

96) “주서울대사 발 워싱턴 국무장관 앞 전문”, 1970년 1월 10일 09시 15분; “Alleged ROK Atrocities in

91) 이에 대한 자세한 토론은 강정구, 『베트남 전쟁과 미국의 전쟁범죄』,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파병에 관한 심포지움 자료집』, 2000년 10월 13일,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를 볼 것.

92) 일제의 비민분리 및 집단부락건설을 중심으로 한 유격대 토벌정책에 대해서는 治安部 參謀司 調査課 編, 『國內治安對策の研究 - 滿洲共產匪の研究 對策 篇』, 1937, 滿洲國軍事顧問部를 참고할 것.

93) 『주월한국군전사자료집』 1-3, 1967,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p. 429.

94) 한홍구, 「학살은 학살을 낳고」, 『한겨레 21』 306호, 2000년 5월 4일자.

런 사건들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가 현재까지 입수한 모두 550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 중에서 특히 중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다낭 주재 정치고문 제임스 맥(James Mack)의 「1968년 1월 - 1969년 4월 기간의 한국해병 제2여단(청룡부대-편집자)의 쿠앙남성에서의 활동 개관」이라는 1969년 4월 25일자 보고서
- 2) 1968년 2월 12일 쿠앙남성 디엔반현 풍니 마을에서 민간인 69명이 살해당한 사건에 대한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부의 1969년 12월 23일자 보고서
- 3) 1969년 4월 15일 쿠앙남성 지 쉐옌현 폭미 마을에서 민간인 4명이 살해당한 사건에 대한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부의 1970년 1월 10일자 보고서
- 4) 1968년 10월 22일 쿠앙남성 쉐옌 짜 호앙 쩌우에서 민간인 22이 살해당한 사건에 대한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부의 1970년 1월 11일자 보고서
- 5) 한국군의 학살만행에 관한 주장을 담은 랜드재단의 보고서 내용의 진실성을 분석한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부의 1970년 1월 30일자 보고서
- 6) 한국군의 학살만행에 관한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부의 1970년 2월 18일자 최종보고서

각 보고서에는 많게는 16건까지 해당 보고서 작성에 참고가 된 사건 당시의 조사보고서 등 각종 첨부문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밖에 이들 보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서의 처리와 관련된 미국무부, 주월미대사관, 주한미대사관, 주월미군사령부 간에 오고간 전문들이 있다.

1969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부가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은 미국 국무부가 1969년 12월 12일 주월미대사관에 한국군, 특히 해병대에 의해 베트남 민간인들에게 자행된 비인도적인 행동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접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랜드재단은 미국방부의 용역을 받아 1968년 7월 “베트콩의 정치 스타일”이라는 비밀보고서를 간행하였는데, 이 무렵 국무부는 랜드 재단을 통해 이 보고서를 입수하였다. 1966년 베트콩 포로와 피난민 300여명을 인터뷰한 자료를 토대로 내이션 라이츠(Nathan Leites) 교수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증언하였는데, 미 국무부는 이 문제가 공개적인 논란이 되는 것을 우려하여 주월미대사관에 정보수집 훈령을 내린 것이다. 미대사관측은 훈령을 받은 당일 주월미군사령부에 대해 랜드재단 보고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과 아울러 주월미군 당국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정보를 수집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⁹⁷⁾

미국무부가 황급히 정보를 보고하라는 훈령을 내린 이유는 1970년 1월에 (실제 개최된 것은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상원외교관계위원회 사이밍턴(Symington) 소위원회에서 미국의 재정지원하에 베트남전에 참전한 동맹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내에서는 1968년 3월 16일 미군이 미 라이(My Lai) 마을에서 347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이 1969년 4월에 폭로되어 여론이 들끓고 있었고 피어스(Peers) 중장을 책임자로 한 조사단에 의한 조사활동이 한참 진행 중이었다. 따라서 국무부가 미국이 거의 모든 경비를 지원하는 주월한국군에 의해 유사한 학살사건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사이밍턴 청문회에서나 그 이전에 폭로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게 된 것은 당연했다. 주한 미대사를 지냈으며 유명한 「브라운 각서」를 제출한 당사자인 윈드롭 브라운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이미 미군 당국이 일부 사건에 대해 조사를 행했고, 주월미군사령관 웨스트모어랜드 대장이 주월한국군사령관 체명신 중장에게 이 사건을 통보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군 해병여단장이 교체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에 대한 확인을 번커(Bunker) 주월대사에게 요청했다. 브라운 부차관보는 또 포터(Porter) 주한미대사에게 한국군의 학살의혹과 관련하여 박정희 대통령에게 경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신의 의견을 표했다.⁹⁸⁾

미대사관을 통해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주월미군사령부는 즉각 참모장의 지시로 감찰부에 대해 관련 정보를 수집할 것을 명했고, 그 결과 앞에 열거한 감찰부의 보고서들이 작성되었다. 감찰부는 랜드재단의 보고서에 언급된 사건들은 증언자들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대개 소문에 의한 것으로 근거가 박약하다며 부인하였지만⁹⁹⁾, 브라운 부차관보가 언급한 사건을 포함하여 3건의 학살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보고서는 새로운 조사를 통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학살이 일어난 지역의 미군부대 또는 월남의 지방 정부에 파견된 미군 고문관들이 올린 보고서를 수합한 것이다.

그런데 관련 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미국 당국자들 간에 오고간 전문을 보면 미국의 주된 관심사는 학살 자체보다도 학살과 미국의 관련성, 특히 학살의 은폐와 관련된 미국의 책임문제였다. 주월한국군에 대해 주월미군이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미군의 조사는 한국군에 의해 학살이 일어난 사실만 인정했을 뿐 실제 민간인을 살해한 한국군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미 국무장관은 1970년 1월 11일 『뉴욕타임즈』가 주월미군의 고위 장성이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한 조사를 중단시키고, 이런 학살이 공표되는 것을 막았다는 보도가 있자 당일로 사이공의 미대사관에 전문을 보내 “우리의 관심사는 주월미군사령부가 이 사건들을 은폐하려 했다는 비난”이라면서 “우리는 이런 의혹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우리는 이에 대해 조사를 했는가? 조사를 안했다면 왜 안했는가? 우리는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지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인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그들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가? 이런 사실들에 대해 우리는 어느 정도 언론에 이야기 해도 되는가?”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¹⁰⁰⁾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이 사안이 갖고 있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도 미칠 폭발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건들을 은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번커 주월미대사는 1970년 1월11일 국무부에 보낸 전문에서 미국은 “우방국 군대에 의해 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학살 의혹이 가는 사건을 알게 된 군인이나 민간관료의 보고를 접수하면, 적절한 미군 예하 사령부를 통해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예비조사의 결과는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우방군 사령부에 통보되고, 우방군 사령부에 대해 조사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입수한 한국군에 의한 학살 의혹에 관한 보고서와 정보에 대하여 비공식적으로 주월 한국대사관 측에 주의를 환기시켜 왔으며, 한국대사에게 이런 비난이 발생한 사건들을 즉각 조사하라고 권고했다”고 미국이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 전문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국무부에 대한 주월미대사관의 건의 사항이다. 번커 대사는 국무부에 대해 “한국군 관련 사건에 관한 보고서가 절대로 언론에 알려지지 않도록 할 것”과 “서울(의 미대사관)에 한국정부에 대해 주월한국군의 민사활동, 특히 한국군에 의해 건립된 학교, 탑, 기타 등등의 정확한 숫자를 밝히는 등 외국인론의 관심을 끌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할 것” 등을 건의했다.¹⁰¹⁾ 한편 1970년 2월 버거 부대사가 브라운 부차관보에게 보낸 전문에서 버거는 지난 몇 년간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과 증파가 미국의 주요관심사였기 때문에 미국은 베트남 현지에서도 한국군에 대해 그런 입장을 고려하여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지난 시기에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었고 대처해야만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상을 보면 미국의 의도는 베트남전 수행에 꼭 필요했던 한국군과 정부를 자극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능한 한 조용히 처리하되, 만약의 경우 이 문제가 언론에 공개되거나 미군 측 조사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미국이 사건의 은폐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려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¹⁰²⁾

미국 외교당국이 한국군의 효용성 때문에 가급적 한국군의 학살의혹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한 반면, 학살이 일어난 현지의 베트남 지방정부에 파견되어 있던 미군 고문관들은 주월한국군의 효용성 자체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 해병의 학살 뿐 아니라 전반적인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연구반 책임자인 퍼켓(Puckett) 중령을 비롯한 미군 참모들은 “한국군의 주민통제 방법은 오히려 한국군 책임전술지역 내에서의 베트콩에 대한 동조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군 해병 제2여단을 이 지역에서 철수시키고 이와 거의 유사한 규모의 부대로 대체하는 것이 (평정전적에서) 극적인 놀라운 발전을 촉발할 것이라는 데 한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참전 국가들도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쿠앙남성의 베트남 지방정부 관리들이나 베트남군 지휘관들도 이런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¹⁰³⁾ 다낭의 정치고문 맥(Mack)은 “한국군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증오심은 너무나 심각해서 주민들은 베트콩이 설치한 지뢰나 그들이 저지른 테러까지 종종 한국인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한국군들이 도저히 가망성은 없지만 만일 그들이 위대한 전사 내지는 인도주의자로 돌변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는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

99) “Rand Report of Atrocities Committed by ROK Troops,” 1970sus 1월 30일,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부.

100) 「국무장관 발 사이공 주재 대사관 앞 전문」, 1970년 1월 10일 18시 16분.

101) 「번커 사이공주재대사 발 국무부 앞 전문」, 1970년 1월 11일.

102) 1970년 2월 버거 부대사가 브라운 부차관보에게 보낸 전문

103) Province Senior Advisor, Quang Nam, “Comments on Provincial 1969 Pacification Plan,” 1969년 1월 30일.

Vietnam: 주서울대사 발 워싱턴 국무장관 앞 전문, 1970년 1월 16일 08시 50분.

97) “국무성발 사이공주재대사관 앞 전문,” 1969년 12월 12일 18시 19분.

98) “국무성발 사이공주재대사관 앞 전문,” 1969년 12월 12일 18시 19분.

이라고 강조했다.¹⁰⁴⁾

필자는 지난 11월 11일 이 세 건의 학살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주월한국군 사령관이었던 채명신 장군과 채장군의 자택에서 인터뷰를 갖았다. 이 자리에서 채장군은 "100명의 베트남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자신의 지휘방침이었지만, 극도로 혼란스러운 전장에서 자신의 지휘방침이 100퍼센트 관철되었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월미군 당국이나 베트남군 당국으로부터 한국군에 의한 대민피해에 대해 이 번에 밝혀진 사건들 이외에도 여러차례 주의환기나 통보를 받은 바 있고, 그 때마다 사건이 일어난 부대의 부대장에게, 그리고 사령부의 해당 참모에게 두 계통으로 조사를 명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자가 처벌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채장군은 전쟁이라는 속성 상 불가피하게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피해가 조직적인 학살과는 다른 것이라며,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와 『한겨레21』이 모든 민간인 피해를 학살로 몰고 간다며 강력히 불만을 표시했다. 채장군과 필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견이 달랐지만 몇가지 점에서는 생각이 일치했다. 바로 민간인 학살 의혹 때문에 30여만 전체 참전용사의 명예가 실추되어서는 안된다는 점과 민간인 학살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V. 맺음말

이번 미군 측 자료의 공개로 베트남에서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문제는 이제 덮을래야 덮을 수 있는 단계를 지나갔다. 이 문제는 인권선진국을 표방하는 김대중 정부와 군사독재의 사슬에서 벗어난지 얼마 안된 우리 시민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당시 야당의 청년의원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의 파병 방침을 "승리의 전망이 거의 막연한 상태, 마치 침몰직전의 선박과 같은 이런 상태에 뛰어들다는 것은 결국 월남인과 미국이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는 시궁창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고 있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우리가 빠져든 베트남의 정글은 단지 구정물이 흐르는 시궁창이 아니었다. 그곳은 5천여명의 한국군 사망자, 1만 여명의 부상자, 2만여명의 고엽제 피해자, 그리고 약 5천여명의 민간인 학살 의혹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와 눈물이 가득한 죽음의 구렁텅이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베트남전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대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은 독재자 박정희의 기념관을 세우는데 국고보조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학살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해 정부와 군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진실을 위하여, 인권과 평화를 위하여, 전쟁 피해자들을 위하여, 국가의 부름을 받고 머나먼 이국의 전선으로 달려간 참전용사 전체의 명예를 위하여, 그리고 노근리사건 등 한국전쟁 기간 미군에 의한 한국 민간인 학살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하여, 일제강점 시기 일제에 의한 학살만행과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104) James F. Mack, "ROK Marine Incident April 15, 1969, in Phuoc My Hamlet, Xuyen Quang Village, Duy Xuyen District, Quang Nam Province and General Reaction to ROK Presence," 1969년 4월 23일.